

K-SDGs 작업반 목표 및 지표 초안에 대한

NGO그룹 입장문서

최종

글 순서

1. 서문
 2. 경제분야
 3. 건강분야
 4. 교육분야
 5. 도시분야
 6. 환경분야
 7. 평화분야
 8. 거버넌스분야
 9. 국제개발협력분야
- ❖ 부록 : 초안팀 명단, NGO그룹 명단

1. 서문

<배경>

- 지난 2017년 5월,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경제·사회·환경이 통합적인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재 환경부 산하에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2030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하는 것 등을 국정과제로 천명.
- 이에, 정부는 담당부처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난 2018년 4월 20일, 유엔의 17개 목표를 기본 틀로 하여 올해 내 한국형 SDGs 개발 및 수립을 목표로 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계획을 발표(지속가능발전포털).
-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와 전문가 중심의 SDGs 목표와 이행계획 수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의견수렴 구조로써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참여 체계를 구축.

- 유엔의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MGoS: Major Group and other Stakeholders)를 준용한 정부의 K-SDGs MGoS 체계는 그동안 시민사회로 통칭되어 왔던 여성, 장애인, 시민사회단체(NGOs), 농민, 노동자, 기업, 학계 등 주요 사회 주체 그룹들을 세분화하여 공개모집하고, 정부가 작성한 K-SDGs 초안에 대해 그룹별로 입장문서를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제출하면 반영하는 구조.
- 또한, 의견수렴 과정과 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정부의 K-SDGs 초안과 그룹별 입장문서는 정부의 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을 통해 공개·저장.
- 한편, K-SDGs MGoS는 1년 동안 활동하며, 효과적인 그룹별 활동을 위한 조직·연락담당자를 그룹별로 자체 선출.
- MGoS 참여 체계가 기존의 참여체계와 다른 점은, 1) 개인이든 단체든 참여자 기준과 수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 과정과 각 그룹의 입장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식적으로 기록·저장. 또한, 3) 여성, 아동·청소년, NGOs, 농민, 노동자, 기업, 학계, 지방정부, 장애인, 노인 등 주요 주체그룹들을 세분화하여 누구도 배제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포용성 기준을 제시.
- 더불어 MGoS 참여 과정을 통해 상호 이해와 통합적인 관점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효과.

<K-SDGs MGoS 운영 과정에 대한 입장>

- MGoS 참여 체계는 지난 2017년부터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¹’가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인 정부위원회와 단발적이고 수동적인 시민공청회 방식의 의견수렴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해 온 새로운 참여 플랫폼으로, 정부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K-SDGs 수립 과정에 이를 도입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에 대해 환영.
- 또한, 유엔 SDGs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체계로써 이러한 MGoS 참여 체계를 도입 할 것을 국가에 권고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존의 정부위원회와 시민공청회 방식의

¹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은 2017년 4월 결성되었으며, 여성, 장애인, 청년,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주거, 교육, 의료, 평화, 인권, 에너지, 환경,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28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들이 참여.

거버넌스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선도적으로 MGoS 체계를 수용해 시도하는 것에 대해 NGO그룹은 적극 지지.

- 이는 시민촛불혁명 이후 들어선 현 정권의 ‘국민 참여 강화’ 기조와 맥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그동안의 행정 중심 거버넌스 체계에서 시민 중심 참여 거버넌스 체계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제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 흐름에 일조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진일보.

- 그러나 정부가 새로운 참여체계를 시도하는 만큼 사전 준비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자칫 형식적인 결과로 마무리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SDGs시민넷은 다음과 같이 우려.

- 첫째, <국가 SDGs 수립> 기간을 9개월로 상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SDGs 이행 대원칙을 담보하기 곤란.

- SDGs는 누군가가 세워놓은 목표를 다수의 대중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도출해 함께 실천하는 것에 의의.

- 그러나 충분한 시간 동안 적절한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 SDGs 수립> 가치를 이해하여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조에서는 공동의 합의와 실천을 위한 <국가 SDGs>가 아닌, ‘보고서’ 제작을 위한 형식적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농후.

- 둘째, 지나치게 짧은 <국가 SDGs 수립> 기간으로 인하여,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K-SDGs MGoS 운영이 현재 파행적으로 진행.

- 정부는 K-SDGs MGoS 참여자를 지난 2018년 4월 30일~2018년 5월 8일까지 단 9일 동안 정부가 운영하는 ‘지속가능발전포털’을 통해서만 1차 공개모집. 아쉽게도 ‘지속가능발전포털’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정부 웹사이트로, 심지어 지속가능발전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나 기업 등 이해그룹들도 잘 모르거나 자주 방문하지 않는 사이트. 현재 추가 공개모집이 진행 중이나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해 추가 신청이 거의 없는 상황.

- 또한, 5월 11일 MGoS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 및 그룹별 조직·연락담당자 선출을 위한 모임이 마련되었으나, <국가 SDGs 수립>에서의 MGoS 참여 체계의 위상과 절차, 기준, 각 그룹별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룹별 상황 파악을 위한 토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아, 그룹별 입장문서를 준비해야 하는 그룹별

조직·연락담당자들이 후속 활동을 하기 곤란.

- 무엇보다도 5월 11일 공개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국가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초안>이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공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표별로 종합 정리된 최종 초안이 아니라, 최종 취합되지 못한 작업 페이지들이 지속적으로 수정되어 제공되어, 사실상 MGoS 그룹들이 5월 14일~5월 30일까지 15일 동안의 주어진 기간 내에 입장문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없는 상황. MGoS 그룹의 요청으로 그룹별 입장문서 제출이 6월 11일로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불충분하고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정부 초안의 내용과 사실상 10일에 불과한 입장문서 작성 기간으로 인해, MGoS 체계의 취지를 살리기 곤란.

- 정부에서는 6월 21일, MGoS 입장문서를 반영한 정부의 <국가 SDGs>를 발표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으나, <국가 SDGs>가 최소한 참여한 관계자들에게서 만큼은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상기와 같은 과정의 미흡함으로 인해 과연 그럴 수 있을는지 의문.

- 현재 MGoS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MGoS 참여체계의 의미와 정부의 혁신적이고 야심찬 시도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과정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선의 가능성을 생각하며 참여.

- 그러나 MGoS 체계 근본 취지가 계속 훼손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우리들은 MGoS 참여를 다시 심각하게 재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하고, 향후 <국가 SDGs> 이행 시 고려해 줄 것을 요청.

- 1) 제때에 충분하고 접근하기 용이한 형태의 정보 제공

- 2) MGoS 입장문서 작성을 위한 최소 4주 이상의 충분한 시간 제공

- 3) 2018년 이후, <국가 SDGs>의 수정·보완 가능 방안 마련

- 4) 2018년 이후, 국가 SDGs 이행 점검의 공식 참여 체계로써 MGoS 체계 구축 및 적절한 기준과 절차 마련

- 한편, 그룹별 회의 및 조직 등 K-SDGs MGoS 참여 체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도 책정되지 않아, 제반 활동비용을 참여 단체 및 개인에게 부담하게 한 것은 다양한 주체그룹, 특히 사회취약그룹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구조로써, 향후 자발적 공론의 장이자 참여 체계인 MGoS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예산 마련 필요.

<NGOs그룹 입장문서 작성 기준 및 과정>

- NGOs그룹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반으로 입장문서 작성.
 -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유엔 SDGs 이행 대원칙)
 - 인권 및 성평등 관점 견지(유엔 SDGs 이행 대원칙)
 - 경제·사회·환경의 균형적인 통합적 관점 견지(유엔 SDGs 이행 대원칙)
 - 참여멤버의 독립성 및 자발성 기반
 - 소통과정의 투명성
- 또한, 다음과 같은 일정과 체계로 입장문서 작성.
 - 2018.05.11. K-SDGs MGoS 1차 구성 및 그룹장 선출
 - ※ 그룹장 : 윤경호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2018.05.17. 그룹참가자 명단 및 작업반 초안 일부 공개
 - 2018.05.17. NGO그룹 이메일 계정 및 클라우드 서버 설정(구글)(소통수단)
 - ※ 이메일 : ksdgs.ngomg@gmail.com
 - ※ 구글드라이브 : 자료공유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_Sc31Wkr7FjoUWEJHQOCPM54pTeSUJvq?usp=sharing
 - ※ NGO그룹 멤버 대상 참가자 현황 및 작업반 초안 공유(이메일)
 - ※ NGO그룹 입장문서 작성 계획(안) 공유(온라인 문서, 구글Doc)
 - 2018.05.23. 입장문서 초안작성팀 구성(부록 참조)
 - 2018.06.01. NGOs 그룹내 입장문서 초안 회람 및 의견수렴
 - 2018.06.11. NGOs그룹 입장문서 최종본 제출

<NGOs그룹 입장문서 구성내용>

- NGOs그룹의 입장문서는 2018.5.23일자 기준 정부의 17개 목표별 세부목표 및 지표(안)을 토대로 작성.
- NGOs그룹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전문 주제 분야인 경제, 건강, 교육, 도시, 환경, 평화,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안)에 대한 ‘총평’과 세부목표 및 지표 ‘제안’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구성.
- 많은 사람들의 용이한 접근성을 위하여, 각 분야별 분량을 2페이지 내외로 제한.

2. 경제 분야

1) 총평

- 우리사회는 국민총생산으로는 세계 13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 산업구조에 있어서는 수출중심, 대기업과 다수의 하청 중소기업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으로의 이행이 요청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의 양적 성장은 더이상 국민총행복과 가계 수입을 증대하는 낙수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여 국가경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가계 측면에서는 일자리 부족과 구조적인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함. 가계부채 증가와 실질수입 하락이 가계의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소득 증대와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임.
- 기업 측면에서는 일자리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치가 계속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공정한 기업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산업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제도와 기업규범이 필요함.
-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 생산적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는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됨. 현재의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촉구하는 가운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선언되어야 함. 개도국의 미래 모습도 발전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모습은 아닐 것임.

2) 제안 세부목표 및 지표

- 지표는 GDP에 기반한 일정 부문에 한정되어 있음. 경제성장과 생산성 부문을 넘어서서 고용의 질과 관련한 노동환경,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근로환경, 금융서비스 접근성 등의 부문에서 지표 개발 필요
- 나아가 국가경제의 패러다임이 GDP에 근간한 것에서 GDP로 환산되지 않는 사회적가치 창출로 이동하고 있음. ‘사회적경제’ 즉, 시민경제 활동이 가져오는 사회적, 공공적, 공유적 경제 활동을 인식하게 되었음. 공유하는 경제자산의 증대와 관리 등의 지표가 경제의 ‘지속가능’ ‘포용’의 목표 아래 개발되어야 함.
- UN의 지표에도 시장가치로 평가되지 않는 경제적 가치 증대를 위한 평가지표가 추가되어야 함.

한국의 사회적경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 평가지표가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상황임. 하지만, 경제관련 SDGs의 지속가능한 포용적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에서 사회적경제가 고려되지 않고는 성과를 입증지표를 찾기 어려울 것임.

- 이번 입장문 준비과정은 열려진 방식으로 진행되어 환영함. 그러나 시간이 절대 부족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는 제한적이었음. 개선되리라 기대함.

3. 건강 분야

1) 총평(우리나라 목표 설정에 대한 종합의견 및 방향)

- 향후 우리사회의 미래를 특징짓는 두 가지 큰 변화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사회양극화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나라 목표 설정에서 건강불평등의 감소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건강형평성 등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목표설정에 대한 고려사항에서 좀 더 구체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다음의 의견을 제출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예방사업 및 필수의료정책 등에 의해 건강보장이 확대되고 있고, 기대수명은 증가됨에도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 건강위험요소 등의 사전관리 미비, 소득 불평등 심화에 따라 고령층, 저소득층 등 건강취약그룹 등으로 건강불평등은 심화되고, 만성질환의 유병률과 질병부담은 여전히 높고, 기대수명 증가에 비해 건강나이는 증가되지 않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일차의료를 근간으로 한 의료체계의 정비,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돌봄-의료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
 -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이 만성질환(비감염성 질환: Non-Communicable diseases)의 예방과 관리에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일차의료가 강화되어야 2차, 3차 병원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함.
 - 커뮤니티케어에 있어서도 돌봄과 의료의 연계 구축 없이 복지위주의 체계를 갖추면, 건강의 사각지대가 넓어져 복지의 질을 장담할 수 없으며, 복지의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음.
- 2025년에는 우리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함.
 - 65세 이상 고령자의 95.3%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평균 4.1개의 복합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음.

-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인구가 늘고 있기에, 일차의료영역에서 우선 노인주치의의 선제적으로 실행하여 사전 관리에 들어가야 함.
- 65세 이전에 만성질환 관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후 의료비는 급격하게 증가될 것임.
- 정신건강정책 강화
 - 청소년의 정신건강수준향상을 위하여 자살예방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등이 강화되어야 함.
 - 청소년에게도 담당 주치의제가 마련되어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함.
- 산업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환경성질환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중증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음.
 - 새로운 환경성질환의 발생에 대한 조사,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큼
- 주민들의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로의 변화, 의료보험 보장성, 민간의료보험을 의료보험으로 통합일원화, 비영리법인의 요건 강화 및 정부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함.
 - 건강의 위험 요소가 다양한 형태로 증가됨에도 공공, 민간의료분야에서의 대비는 부족함으로 공공, 민간의료분야에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보건분야의 혁신을 가져와야 함.

2) 세부 지표 제안

- 건강수명 증가와 건강불평등의 감소, 건강 격차 완화: 불평등 완화에 건강 불평등 완화 항목으로 추가
 - 지역별 소득별 기대수명, 건강나이
 - 지역별 소득별 심혈관질환, 암, 당뇨병,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 사망률; 자살률
- 고령층에 예방중심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위험요인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지원
 - 65세이상 노인에 사전 건강관리(주치의)서비스 시행 비율
- 아동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 지표에 영아사망률, 5세이하 유아 사망률외 선천성기형아 발생률 추가
- 장애인은 지역에서 대표적인 취약그룹

-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 제공 비율, 장애치료보장의 범위 등 건강인 건강지표 필요.
- 예방중심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위험요인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지원 지표
 - 지역별 (동단위) 돌봄-의료 연계(통합돌봄)센터의 설치비율
- 유해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건수 감소 지표
 - 대기기준 미달성지역 거주인구율,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율,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화학물질 사고 보고 등 환경보건지표(EHI) 활용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 참조)
- 국제지표에 맞춘 데이터 생성 필요
 - WHO 보건의료인력 분류 기준에 맞춘 보건의료 인력 수,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인원수
 - 집 그리고 집 주변의 공기오염(미세먼지 포함)으로 인한 사망률, 안전하지 않은 물, 하수처리, 그리고 부족한 위생시설(안전하지 않은 ash서비스)로 인한 사망률, 의도하지 않은 중독(가습기 살균제 피해 포함)에 의한 사망률
 - 흡연율(성인 외 초등학교 흡연율 상승되고 있음에도 저 연령 흡연율 없음)
 - 적당한 가격으로 의약품 및 백신을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
 -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총순투자

3) 통계 산출을 위한 제언

- SDGs의 건강지표의 경우 SDGs의 핵심원칙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No one left behind)’에 따라 모두의 건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통계 뿐 아니라 성별, 연령별 기초 단위의 통계 생성이 되어야 하나 국가통계포털에서는 기초단위별 통계가 부족하여 유의미한 진단결과 도출이 어려움.
- SDGs 지표 관련 통계데이터를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는 등의 방안과 함께 지자체별로 수집해야 하는 지표들의 국가통계포털 차원의 통합관리, 제공이 되어야 함. (예, 법정전염병 환자 발생 및 사망자수 등)

4. 교육 분야

- 4.1. 목표를 2030년까지 “모든 아동이 **성별과 관계 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평등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로 수정.

▪ 4.3 목표를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성별에 관계 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로 수정.

▪ SDGs 4.7 목표 관련

- K-SDGs에서 4.7 목표를 ‘세계시민교육’을 중심으로 세부목표화 할 경우, 기존의 목표에 비해 협소해지는 측면이 있음. ‘세계시민교육’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현재 제출된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은, 국내 다문화 상황에서의 적응의 문제나 개발교육에만 그 초점이 있음. 국내적 맥락에서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확산 등, 4.7 목표가 담고 있는 가치들이 교육 전반에 주류화될 수 있도록 세부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형식교육뿐만 아니라 비형식교육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어야 함. 특히, 4.7 목표와 관련된 가치교육은 CSO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모두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평생교육 관점에서 4.7 목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 4.7 목표가 가치지향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투입 대비 산출의 방식으로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성과 측정 수단 및 지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설계가 필요함. 따라서 세계시민교육 지표 수립 과정에서 민관학의 협업,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함.

▪ 전반적으로, 전체평균으로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소외계층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별도의 지표 필요. 예를 들어, 세부목표 4.1의 지표 관련하여, <글로벌 지표로서 OECD PISA 및 IEA TIMSS에서 현재 측정하고 있는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성비>는 필요한 부분이나, 전체적인 평균으로 성과를 측정할 경우 소외계층의 상황 개선에 대한 부분은 측정하기 어려움.

▪ 현재 K-SDGs 작업반 일정이 촉박하여, 4.5, 4.7 목표를 포함하여 아직 충분히 작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 추후 보완이 필요함. 전반적인 초안 작성 일정이 촉박하여 의미있는 내용을 담아내는데 무리가 있음. 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 추후 보완이 필요해 보임.

▪ 10. (4-c) 교사교육 분야의 국제협력에 있어 개도국 교사역량 향상이라는 목표에 앞서 국내 예비/현 교사 교육에 역량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임. 개도국 교사역량 강화가 시혜적 관계의 일방적 지원이 되지 않도록 수평적 국제개발협력의 설계와 준비가 요청됨.

5. 도시 분야

1) 총평

- 도시분야는 SDGs 모든 영역에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목표에 국한하여 설명하기 어려우나, 본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 및 주거지'에 대한 11번 목표와 관련하여 기술함.
- 11번 목표와 관련하여 1차 세부목표와 지표에는 11.1, 11.2, 11.3, 11.7, 11.c와 관련된 내용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 영역은 현재 우리나라 도시문제와 직결된 부분으로 꼭 포함되어야 하며, 현재 이 수준으로는 입장을 내기 어려움.
 - 특히 미 작성된 4개 세부목표는 '11.1 적정가격의 주택과 공공서비스 접근 보장', '11.2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 제공', '11.3 참여·통합·지속가능한 계획과 관리역량 강화', '11.7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은 현재 국내 도시문제와 직결된 부분으로 단순히 UN SDGs의 국내이행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명확한 이해와 함께 도시분야에 대한 세부의견을 낼 수 있음.
- 문화 분야의 세부목표는 UN SDGs의 11번 목표 속에 문화 및 자원 유산 보존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문화' 키워드가 오직 11번 목표에 포함된 것과 지속가능발전에서 '문화'가 중요한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해야 내용적 범위를 넓히는 것도 고려해야 함.
- 11.a의 '경제,사회,환경적 연계성 지원'은 '생태축 설정', '지속가능발전 도농지표 설정' 등 좋은 논의를 하고 있으나 현재 제시된 지표는 추가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2) 제안 세부목표 및 지표

- 11.1에 대한 의견
 - 주거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는 크게, 1) 주거비용과 2) 주거의 질 두 가지로 구분.
 - 전체가구의 44.5%인 862만5천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자이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총 재고량은 전체 주택대비 5%정도로 재고량이 부족해, 대부분의 무주택자들이 민간임대시장에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
 - 주거세입자들의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짧은데, 세입자에게 계약을 갱신할 권리(계약갱신청구권)를 보장하지 않고 임대료 상승률도 규제하지 않아, 세입자의

점유안정성과 주거비 부담 문제가 심각하며, 이는 빈곤의 악순환 구조를 고착화.

-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지원, 기금 출자 등 공공임대주택 등에 사용해야할 기금과 토지 등의 공적 자원을 지원하면서도, 초기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높은 임대료와 8년의 짧은 임대기간 후 분양할 수 있게 하는 등 공익적 목적이 거의 없는 대기업 특혜 사업.
- 세입자의 점유 안정성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의 인상률을 규제하는 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 시급히 필요.
- 한편, 국내에서 비닐하우스, 판잣집, 쪽방, 컨테이너,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PC방, 사우나, 만화방, 다방 등) 등 비주택 거주민은 홈리스와 함께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주거 취약계층.
- 비공식 주거 현황에 대한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의 경우, 표본이 2만 가구에 불과하고, 최근 늘어난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비공식 주거(비주택)는, 주택이 아니란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결국 주거문제가 심각한 200만 명이 넘는 주거복지정책 대상을 정부가 누락하고 있는 상황.
- 실질적인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 통계부터 개선될 필요.

■ 11.4에 대한 의견

- UN SDGs에 문화에 관한 목표 및 지표는 11번 목표에 세부목표로 포함되어 있음. SDGs 자체에 문화에 대한 고려가 빈약한 것은 사실이나, 지속가능발전에는 환경, 경제, 사회 영역 속에 문화와의 관계가 깊숙히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단순히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노력에 집중할 때, 실제 SDGs를 시민 스스로 이행하는 실천동력이 생활문화나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K-SDGs에 담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함.
- 따라서 K-SDGs가 우리나라의 특징을 반영한 SDGs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문화 목표 속에 생활문화, 문화향유의 영역까지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야할 것임.
- 이는 별도 목표 또는 영역까지 확대되지 때문에 11번 목표 내에서 추가적인 조정 또는 세부목표의 조정도 고려해야 함.

■ 11.a에 대한 의견

- 추진방향은 '계획을 통한 도-농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 강화'에 대한 부분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대부분의 작성 초안에 동의함.

- 하지만 일부영역, '도시·군기본계획과 시·군 환경보전계획을 통합관리하여 수립한 지자체 수'에 대해서는, 도시군기본계획은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 현행 법제도적으로 상호 협력에 대한 명확한 검토 또는 협의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 과거에는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가능했지만, 계획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 제대로 계획관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전례가 있음.
 - 또한 지표로 제시되어, 이 계획의 수립이 도농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 강화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미 작성된 세부목표 및 지표에 대한 의견
 - 현재 K-SDGs와 관련하여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관련 분야의 세부목표 및 지표가 준비되지 못하여 작성이 안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보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11.c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은 도시개발과 ODA의 연계를 고려하여 일본이 최근 추진하는 'Spatial Planning Platform'과 같이 도시계획 및 공간계획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도시개발펀딩을 해당 지표에 포함할 수 있음.

6. 환경 분야

1) 총평

- 환경분야와 직접 연관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6, 7, 12, 13, 14, 15이나, 17개 목표 전체가 환경분야와 직간접 연관되어 있음. 본 입장문에서는 직접 연관된 6개 목표 중 5개 목표에 대한 「K-SDGs 작업반 목표 및 지표 초안」을 검토함.
- 검토결과, 가장 문제가 된 지점은 「K-SDGs 작업반 목표 및 지표 초안」의 접근이 우리나라 상황에 근거해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검토한 후, 그에 따라 시급성, 중요성 등을 점검하고 세부 목표와 지표를 수립했다기보다는 유엔이 제시하는 세부목표와 지표를 한국 상황에 적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은 매우 큰 아쉬움이 남음.
- 더욱이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전 예방의 원칙'이 6개 목표에서 거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 이러한 결과, 지속불가능성을 야기했던 기존 사회시스템이 만든 폐단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기 위한 목표나 지표가 제시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임.

- Goal 6 달성을 위한 한국 상황의 특수성은 도시 면적 중 불투수면이 매우 높아 지하수위가 낮아지고 빗물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점과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불필요한 보와 댐, 하구둑으로 인해 건강한 하천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를 개선하고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세부목표나 지표가 제시되지 않음.
- Goal 7 달성을 위한 한국 상황의 특수성은 에너지 사용에 따른 외부성 영향이 에너지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점과 낮은 전기요금으로 비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부추기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Goal 13 달성을 위한 한국 상황의 특수성은 교통(수송)분야에서 교통분담률이 도로 중심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과 휘발유와 경유에 세금을 부과할 때 환경적 측면이 합리적으로 고려되지 못해서, 환경오염 유발 효과가 큰 경유가 휘발유보다 상대가격이 저렴하다는 측면, 화물차량에 제공되는 유가보조금 문제 등이 있으며, 발전원에 부과되는 세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 그리고 온실가스감축량을 할당할 때 산업부문의 수출경쟁력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산업계의 감축몫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 목표나 지표가 제시되지 않음.
- Goal 14와 15의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는 세부목표나 지표를 비교적 잘 설정하였음. 다만 대규모 개발 압력으로부터 육상생태계나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 대응 수단이 미흡한 부분과 실제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미흡한 부분은 이후 보완할 과제로 남아있음.

2) 제안 세부목표 및 지표

- <2018 HLPF 한국 시민사회보고서>에 작성된 세부 목표 및 지표를 반영할 것을 요청함.

7. 평화 분야

1) 총평

- 유엔이 채택한 12개 세부목표를 모두 국내 이행과제로 채택하고 세부목표와 용어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현실부합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은 긍정적인임. 또한 SDG 16번을 포함한 SDG

이행을 남북대화의 협력에도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에 있어 SDG 의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의지를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음.

- K-SDGs 제정 과정에서 제 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및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이행 계획 간에 정합성을 높여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기함. 이는 SDG 16번을 한국 상황을 더 고려해 해석하겠다는 의지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 그러나 4월 20일 정부가 공개한 제3차 NAP 초안에는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마련 등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방안 검토 수준에 머물고 있어 2기 NAP보다 인권적으로 퇴보되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높음. 또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내세우며 군비경쟁에 주력하는 정책 제안으로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K-SDG 지표 수립과 이행 과정에 있어 정부주도의 정책에서 부재하거나 그 수준이 역행된 조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찰하고 반영되어야 함.

- SDG 16번 목표를 SDGs 이행을 가능케 하는 수단(enablers) 혹은 다른 목표의 달성을 가속화하는 장치(accelerator)로 명명하기도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평화교육과 같이 다른 지표들과의 유기적 연계 속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유의미함. 그러나 SDG 16번에서 제시하는 ‘평화’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 근절, 축소하는데 방점을 두는 소극적인 평화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SDGs 지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적극적인 평화가 더욱 논의되어야 함. 또한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사회에 만연한 안보 중심의 군사 문화와 고착화된 분단폭력을 인지하고 이를 넘어서는 평화문화 형성에 SDG 16번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

2) 제안 세부목표 및 지표

- 16-1 에 더 추가되어야 할 세부 지표 제안

- 한국사회의 다양한 폭력의 구조적 원인에서 국가폭력(불법사찰, 집회 시위 등에서 발생하는 공권력 남용), 사회적 갈등, 젠더 인종 등 주요한 사회적 불평등에 의한 사망상해율 지표 추가
- 갈등예방 및 갈등조정 역량 등의 평화역량증진의 정도

▪ 16-2 에 더 추가되어야 할 세부 지표 제안

- 아동 군사훈련 및 유사 군사훈련, 아동에 대한 폭력과 전쟁 선호적 교육 등의 실시여부와 횟수
- 폭력 및 고문을 종식하고 평화문화를 증진할 수 있는 기관 및 프로그램(사회, 학교, 공동체 내) 설립 및 이행 여부

▪ 16-4 추가되어야 할 세부 지표 제안

- 군사 시설, 군수산업체 정보 공개 투명성 제도 지표 추가
- 국방예산 검증 절차의 시민사회 참여 메커니즘 설립 및 확장
- 합법적인 무기거래를 통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의 의미를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장하여 지표를 이행해야 함. (한국에서 생산하고 수출하는 무기가 다른 국가에서 인권침해에 사용되고 있음. 예: 바레인 및 터키에 수출된 최루탄)

▪ 16-6 추가되어야 할 세부 지표 제안

- 경찰, 군대, 국가정보 기구 등 직간접 국가폭력과 관련된 국가기구의 정보 공개 가능성 및 그 정도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하고 이를 투명한 제도로 개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상시 상설, 보장

▪ 16-7 추가되어야 할 세부 지표 제안

- 선거연령 조정으로 청소년 참정권의 보장 및 확대 필요.
- 얼마나 다양한 계층 및 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 설정 필요

▪ 16-8 추가되어야 할 세부 지표 제안

- 국제기구의 평화적 사회 건설에 방해/기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부제함. 국제기구가 갈등 야기적 국가 행위, 불법적 군사행위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음.
- 발전권 및 평화권 보장 정도에 대한 지표 설정 필요

8. 거버넌스 분야

1) 총평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사전 예방의 원칙’,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의 원칙’, 그리고 ‘통합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제시.
- ‘통합적 의사결정의 원칙’은 거버넌스, 즉 SDGs 이행을 위한 **정치행정구조**에 관한 이야기로, 파편화되고, 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벗어나, **통합적이고, 포용적이며,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로 개혁**할 것을 제시.
- 유엔 SDGs에서 거버넌스 관련 내용은 크게, ① 정부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성, ② 참여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③ 이행수단 및 모니터링에 관한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분류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세부목표가 구성.
 - ① **정부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성** : 16.3(법치·정의), 16.5(부정부패), 16.6(효과·투명·책임제도)
 - ② **참여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 5.5(여성참여), 6.b(지역공동체의 물관리 참여), 11.3(시민참여 도시계획), 14.b(영세어민 참여), 16.7(포용적·대표적·참여적 거버넌스), 16.10(정보접근성), 17.16(다양한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체계), 17.17(공공/공공-기업/공공-시민사회간 파트너십)
 - ③ **이행수단 및 모니터링** : 17.1(재원), 17.14(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일관성), 17.18(양질의 구별통계)
- 상기의 관점에서, 현재 정부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초안은 SDG 1~17까지 파편화되어 있어, 국가 SDGs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곤란.
- 심지어, 6.b, 11.3, 14.b는 아예 다루이지 않고 있으며, 17.1, 17.14, 17.16, 17.17, 17.18에 대해서는 국제개발협력 관점으로만 협소하게 접근되어, 국가차원의 재원마련,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제도 마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체계 구축,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SDGs 이행 점검을 위한 통계구축 관련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 노출.
- 또한, 거버넌스 관련 제시된 세부목표들 중 5.5(여성참여)를 제외하고, 16.3(법치·정의), 16.5(부정부패), 16.6(효과·투명·책임제도), 16.7(포용적·대표적·참여적 거버넌스), 16.10(정보접근성), 17.16(다양한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체계), 17.17(공공,공공-기업 및

시민사회간 파트너십), 17.1(재원), 17.14(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일관성), 17.18(양질의 구별통계)의 경우, 세부목표의 국내적 유의미성만 설명되었을 뿐, 세부목표 달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여,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가능하기 곤란한 상황.

- 한편, 정부에서 우리나라 상황을 반영하여 추가로 제시한 ‘16.11 정보인권 보호 조치 수립 및 시행’은 21세기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새롭게 인권 및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슈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
- 성공적인 국가 SDGs 달성의 바로미터는, ① 정부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성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② 경제·사회·환경 주제분야의 통합적인 거버넌스, ③ 국제-국가-지방이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되는 거버넌스, ④ 정부/의회/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간의 협력 거버넌스가 통합적으로 구축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음.
- 이에, 상기 관점을 중심으로, <국가 SDGs> 이행 거버넌스에 대한 목표를 별도로 두어,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

2) 제안 세부목표 및 지표

① 정부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성 거버넌스

- 16.3 국제 및 국가수준에서 법치 증진 및 정의에의 평등한 접근 보장
 - 지난 12개월간 범죄신고율 및 검거율(성별, 연령, 장애, 인구집단별)
 - 구속수사 비율(성별, 연령, 장애, 소득별, 인구집단별)
 - 화이트칼라범죄율 및 기소율
- 16.5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근절
 -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에 의해 뇌물을 요구 받았던 사람의 비율
 -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에 의해 뇌물을 요구받았던 기업인의 비율
 - 공무원 징계사항 중 청탁·뇌물관련 징계 분포
- 16.6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 승인된 정부예산 대비 지출결산 현황
 - 최근 12개월 동안 공공서비스(민원처리 등)에 만족하는 인구 비율

- 16.7 모든 차원에서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 대표적인 의사결정을 보장
 -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정부, 의회, 사법기관)의 공무원 분포(성별, 연령, 장애, 인구집단별)
 - 정부위원회 위원 분포(성별, 연령, 장애, 직업, 인구집단별)
- 16.10 국내법 및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 보호
 - 행정정보 비공개율(부처별, 사유별)
- 5.5 정치·경제·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 보장
 -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 의석비율
 -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언론, 비영리민간단체의 관리직 여성 비율

② 경제·사회·환경 주제분야의 통합적인 거버넌스

- 17.14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일관성 강화
 - 국가 및 지방의 행정기관 및 입법기관의 경제·사회·환경·제도 정책의 총괄 조정 기구 설치 현황
 -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제도 수립 현황

③ 국제-국가-지방이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되는 거버넌스

- (신규) 지방분권 및 자치제도 강화
 - 지방세 비율

④ 정부/의회/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간의 협력 거버넌스

- 6.b 물과 위생 관리 지역 공동체 참여 지원 및 강화
 - 강 유역 및 도시하천별 물 관리 민관협치기구 설치 수
-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지향적이고 통합적인 지속가능 인간 거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
 - 도시계획위원회의 시민사회 위원 비율
 - 지방 지속가능발전 협치 기구 설치 및 운영 지자체 수
 - 지자체 총 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규모
 - 지방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 체계 구축 지자체 수
- 17.16 지식, 기술, 자원 공유를 통하여 각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국가 및 지방차원에서 SDGs 이행 및 점검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체계 구축 현황
- 17.17 경험축적 및 전략공유를 통하여 효과적인 공공, 공공-기업 및 시민사회간 파트너십 권장 및 촉진
 - 연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비용 규모(SDGs 목표별, 분야별)
 - 정부-기업 파트너십 사업비 규모(목표별, 분야별)

⑤ 이행기반

- 17.1. 조세 및 기타 수익 징수 국내역량 개선을 위해 국내재원 동원 강화(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지원 포함)
 - GDP 대비 정부 세수(세입) 총액 (자원별)
 - 국내 세금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는 국내 예산의 비율
- 17.18 2020년까지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소득, 성, 인종, 민족, 이민, 이주상태, 장애상태,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역량 구축 지원
 - 통계 구축 및 모니터링 평가 예산이 포함된 정부사업 비율
 - 국가 및 지방 SDGs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통계 시스템 구축한 공공기관 비율
 - 시민통계 반영 비율

9. 국제개발협력 분야

1) 총평

-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목표 17번은 SDGs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으로써 전체 목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임. 이는 개발도상국의 사회적·경제적 발전과 개혁을 가로막는 국제 경제 및 금융제도에 있어서 제도적인 장애요소들을 해결하는 것을 포함하며 민주적이고 공정한 국제 경제 거버넌스의 체제 개선을 포괄함. 그런데, 현재의 초안에서는 다양한 ‘개발협력’ 이해관계자간의 협력과 개발원조를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SDGs 전체를 포괄하는 차원의 파트너십이 아닌 국제개발협력에 한정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음.
- 17번에서 강조하는 정책과 제도의 일관성 측면에서 SDGs 국내 이행과 국제 이행을 기준으로

환경부와 외교부로 이분화된 우리나라의 SDGs 거버넌스 구조와 제도적 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포함할 것을 제안함. 또한, OECD DAC 동료 검토 보고서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조 분절화 및 정책수단간의 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제고를 위한 관련 정책과 법제 마련을 제안함.

- 글로벌 파트너십에 있어서 개발재원 확충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의 초안에서는 양적 차원의 지원을 부각하고 있음. 개발 재원의 양적인 확충은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하지만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사람’과 ‘인권’이 그 중심이 되어 먼저 강조되면서 질적인 측면도 동시에 강조되어야 함. 민간자금 동원 및 혁신적인 개발재원 마련과 동시에 인권에 기반한 개발의제들이 상정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는 관련 규제 제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에 기반한 접근 및 개발과정에서 소외되고 피해를 받는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내용이 ‘목표 설정 시 고려 사항’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 글로벌 파트너십을 이야기하면서 수혜를 받는 국가라는 의미의 수원국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 및 “협력대상국”이라는 용어 사용 및 통일을 제안함.
- K-SDGs 수립에 있어서 참여 거버넌스 활용을 위한 시도는 좋으나, 전체 일정 및 협의가 촉박하게 진행된 점과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러한 의미 있는 시도를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의견 수렴 과정이 개선되기를 희망함.

2) 제안 세부 목표 및 지표

- 17.2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뿐 아니라, 무상원조 비율 확대가 시급한 바, 관련 지표 추가 제안. 2차 기본계획에서는 2017년까지 유무상원조비율을 현행 비율인 40:60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OECD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 지원 평균 비율이 9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한국의 무상원조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임.
 -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유무상 원조 비율
- 17.9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국가계획 지원을 위한 역량 및 국제사회 지원강화
 - 협력대상국에서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 추진 시 원조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대상국에 대한 한국의 중기 원조집행계획 수립 및 파트너국가와 공유 여부
 - 협력대상국 SDGs 달성을 위한 한국 국제개발협력 전략 구성 및 실행 여부

-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
 - 유엔 이주노동자 협약에 가입 여부
 - 정책 비일관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범정부적인 논의의 장 구성 여부
- 17.17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는 큰 틀에서 민관 파트너십 전략이 먼저 수립된 후 이행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야 함. 또한 이해관계자 협의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의견이 정책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2017 OECD DAC에서 권고한 것처럼 최소한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등 시민사회를 독립적인 개발협력의 주체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전략 수립 및 정책협의 개최에서 한 발짝 나아가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 마련을 제안함.
 - 정부와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
 - 이해관계자 협의회 개최 여부 및 협의회 결과 반영 여부
 - 시민사회를 통한 ODA 집행을 OECD DAC 평균 수준인 10% 수준으로의 확대
 - 한국의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지표 추가

❖ 부록

A. 입장문서 초안 작성자 명단

1. 서문: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2. 경제 분야: 한국사회적경제연대
3. 건강 분야: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 교육 분야: 교육연대체 씨앗, 피스모모
5. 도시 분야: (사)한국도시연구소,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6. 환경 분야: 녹색연합
7. 평화 분야: 피스모모
8. 거버넌스 분야: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9. 국제개발협력 분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B. NGO그룹 명단

2018.6.1 기준(가나다 순)

1.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2.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3. 교육연대체 씨앗
4. 녹색 미래
5. 녹색연합
6. (사)인재육성아카데미
7. (사)한국도시연구소
8.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9. (사)환경정의
10.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11. 에코피스리더십센터
12. 자전거타기운동연합
13. 피스모모
14.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15.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6. 환경운동연합

K-SDGs 작업반 초안에 대한 〈교육그룹〉 입장 보고서 (안)

- 제출일시 : 2018. 5. 31
- 제출단위 : K MGoS 교육그룹
(그룹대표: 황상규)

1. 점검의 방향과 원칙

1) 점검 방향

- <교육그룹>은 2018년 K-SDGs 초안을 검토함에 있어, 이 사안이 그 동안 국가 차원에서 2006년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온 환경, 사회, 경제분야의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 논의와 그 맥락이 연결된다고 보고 있음.
- K-SDG 작성 작업은 <UN SDGs>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과 기존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논의 결과를 동시에 반영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수정·보완·추가는 변화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2) 점검 원칙

- 이에 아래와 같이 3가지 점검 원칙에 따라 검토 의견을 제출코자 함.

1) 비교가능성

- 유사한 이슈에 대한 지표는 비교가능성이 있어야 함. 이는 국제 지표간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비교와 소통과 통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함.

2) 일관성

- 2006년 이후 정기적으로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검토하여, 수정·보완해 온 바, 논의 및 지표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

3) 대표성

- 지표는 그 분야의 이슈의 본질과 개선방향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을 채택하여야 하며, 다양한 지표를 나열하기 보다는 이슈의 본질을 잘 반영하는 대표적인 '핵심적인' 지표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함.

2. 17개 K-SDSs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

1) 입장보고서(초안) 템플릿에 대한 의견

1. 목표

1) 필요성과 의의

==> 대체적으로 동의

2) 현황과 쟁점

==> 기존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논의 맥락 유지 필요

2. 세부목표

1) 세부목표에 대한 입장

2) 수정 보완 추가할 세부목표 제안

==> 세부목표는 가급적 UN SDGs 의 169개 세부목표 체계를 따르
되, 국내 상황에 맞추어야 할 부분은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3. 지표

1) 지표(안)에 대한 입장

2) 수정 보완 추가할 지표 제안

==> 지표는 가급적 UN SDGs 의 241개 지표를 따르되, 국내 상황에
맞추어야 할 부분은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동시에 K-SDGs 핵심지표는 기존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84개 지표를 포함하여야 함.

※ 점검 근거 자료는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14)(2016.8) 134~155p. 참고

4. 목표별 연계와 거버넌스 구축 방안

==> 대체로 동의함.

2) 17개 K-SDGs 세부목표, 지표에 대한 의견

□ SDGs 1번 (빈곤감소 및 경제적 안정성 확보)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1-1	2030년까지,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노인의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 상대빈곤율(전체, 연령집단별)
1-2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하여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3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기초 공공서비스 및 각종 사회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권리 및 우선적인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의 비중
1-4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극심한 기후현상, 기타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감소한다.	○ 기초연금 및 최저연금의 급여수준 ○ 실업급여 순대체율 ○ 하절기 온열질환자수 ○ 자연재해별 사망 및 상해
1-a	한국의 중점협력국에게 모든 측면의 빈곤 종식을 위한 자원을 보장한다.	○ 중점협력국 GDP 대비 공공사회보장지출, 공공보건·공공부조 지출 비율 ○ 중점협력국 하루 수입 1.25달러 미만, 1.9달러 미만 빈곤층 비율 ○ 중점협력국 국가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1-b	아시아 개도국 빈곤층에게 친화적이고 성(性)인지적인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한 투자증대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아시아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견고한 정책들을 설계한다.	○ 상대빈곤율(전체, 연령집단별)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1-1, 1-b 지표에 상대빈곤율이 반복 기재되어 있음. 10-1에도 빈곤율 있음.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사회·형평성-1-1빈곤분야 지표 등을 연계·보완하면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G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1.1 2030년까지 현재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 등 모두를 위해 모든 곳에서 극심한 빈곤을 종식	1.1.1 국제 빈곤선 미만으로 살고 있는 (도시/농촌) 인구 비율(성, 연령, 고용상태, 및 지리적 위치별)
	1.2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차원에서 빈곤 속에 사는 모든 연령층의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의 비율을 최소 절반으로 감소	1.2.1 국가 빈곤선 미만으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별 및 연령별)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의 비율
	1.3 모두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국가별로 적절한 사회적 보호체계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	1.3.1 사회적보호 최자선/체계의 적용을 받는 인구비율 (성별, 특수아동, 실업자, 노령자, 장애인, 임신부/신생아, 산업재해피해자, 소외계층별)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기본 공공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유산,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개발하고, 기후와 관련된 극심한 사태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감소	1.4.2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서를 가지고 토지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가지거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실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전체 성인의 비율(성별, 및 보유형태별)
		1.5.1 인구 100,000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5.2 국제 GDP와 비교해서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손실
	1.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게 모든 차원에서 빈곤을 종식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협력 증진을 포함하여 상당한 양의 자원의 동원을 보장	1.5.3 국가 그리고 지방수준에서 재난 위험 축소 전략을 갖고 있는 국가의 수
		1.a.1 정부에 의해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직접 할당되는 자원의 비율
	1.b 빈곤종식 활동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 인지적 개발전략을 기초로 한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성	1.a.2 정부의 총 지출 중 필수 서비스(교육, 의료 및 사회적 보호)에 소요되는 지출 비율
		1.b.1 여성, 빈곤층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문으로 지출되는 정부의 반복적인 자본의 지출 비율

□ SDGs 2번 (기아 종식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2-1	취약계층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2-2	영유아·아동(유소년)의 적절한 영양 섭취 수준을 달성한다	○ 영유아·아동 영양 상태
2-3	효율적인 농업자원 활용을 통한 실질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 영농규모별 노동생산성 ○ 영농규모별 단위면적당 실질 농가소득
2-4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면적 비율
2-5	종자, 작물, 가축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한다	○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및 동물유전 ○ 가축 지방품종의 비중
2-a	최빈국의 농업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한다	○ 생산자지지 추정치 (Producer Support Estimate: PSE), %PSE
2-b	세계농업시장에서의 건전한 무역 질서 확립과 왜곡현상 시정을 위해 노력한다	○ 수출보조금 ○ 농업부문에 지출되는 총 공적자금 (ODA) 흐름
2-c	정부 개입을 통해 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료품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 식량가격 이상치 지표
2-d	적정량의 재료 사용과 균형잡힌 식단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환경-토지-2-1 농업분야 지표 등을 연계·보완하면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G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2. 기아종식, 식량 안보와 영양상태 개선의 달성 및 지속가능 농업 강화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 및 영.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일년 내내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2.1.1 영양 부족 현황(POU) 2.1.2 식량 불안 경험 척도(FIES)를 기준으로, 중간 혹은 극심한 수준의 식량 불안정에 처해있는 인구 현황
	2.2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및 체력 저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부족을 종식시키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 필요에 대응	2.2.1 5세 미만 아동 중에서 연령대비 신장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간 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2미만인 발육 부진 현황 2.2.2 5세 미만 아동 중에서 신장 대비 체중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간 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2 또는 <-2 인 영양 불량 현황 (형태별: 저체중, 과체중)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 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통해 소규모 식량생산자,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업자 및 어민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두 배로 증가	2.3.1 노동단위당 생산량(농업, 축산업, 산림업 사업체 규모별)	
	2.3.2 소규모 식량 생산업자의 평균 소득(성별, 토착상태별)	
2.4 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기상 이변, 가뭄, 홍수 및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토지와 토양의 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보장하며, 회복력 있는 농업 경영 이행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면적 비율	
2.5 2020년까지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변화된 종자 및 식물 은행 등을 통해 종자, 재배식물, 가축과 사육동물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에 대한 접근을 개선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 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의 유전자원의 수	
	2.5.2 멸종 위기에 있는, 멸종 위기에 있지 않은, 혹은 알려지지 않은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류되는 지역품종의 비율	
2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농업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농촌 지역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에 대한 투자 확대	2.a.1 정부 지출의 농업 편향 지수	
	2.a.2 농업 부문에 대한 공식적인 전체 지원금 (공적개발원조와 다른 공식적인 지원금을 합한 금액)	
2b 도하개발라운드 지침에 따라 모든 형태의 농업 수출보조금과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모든 수출조치에 대한 병행적 제거를 통해 전세계 농산물 시장내 무역 제한 및 왜곡을 시정하고 예방	2.b.1 생산자 지원 추정치	
	2.b.2 농업 수출지원금	
2c 식료품 시장과 시장 파생상품의 적절한 기능을 확보하고 극심한 식량 가격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해 식량비축분을 포함한 시장정보에 대한 시의적절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선택	2.c.1 식품 가격의 이상치 지표(IPA)	

□ SDGs 3번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한 삶과 웰빙 보장)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3-1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70세 사이에서 심혈관질환, 암, 당뇨병,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 사망률; 자살률(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 ○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되는 인구의 비율, 재난적인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보호받는 가구의 비율
3-2	정신건강증진 및 약물오남용 예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10만명당 자살률 ○ 15세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섭취량 ○ 알코올의존 및 약물남용자를 위한 치료지원(약물치료, 심리사회적, 재활, 추구관리서비스 등)의 수혜정도
3-3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과 장애예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 사망자수(인구1,000명당) ○ 사고로 인한 손상 사망자수
3-4	감염병 예방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발생률(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 B형간염 양성률
3-5	모성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아 10,000명당 산모의 사망률(MMR) ○ 숙련된 보건인력이 진료한 출산의 비율 ○ 청소년 출산율(10-14세, 15-19세) ○ 가임여성(15-49세)의 현대적인 피임법을 충족하는 수요
3-6	아동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사망률 ○ 5세이하 유아 사망률
3-7	유해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건수 감소	
3-8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케어 관련 정책목표와 지표 (임종관리, 호스피스 등)	
3-9	보건부분 이행수단 목표 개발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사회-건강-2-5건강관리 지표 등을 연계·보완하면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G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3. 건강 및 웰빙	3.1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산모사망 비율을 10만 생명 출산 당 70명 미만으로 감소	3.1.1 산모 사망률(MMR) 3.1.2 숙련된 보건인력이 진료에 참여한 생명출산의 비율
	3.2 2030년까지, 모든 국가의 산생아 사망률을 정상출산 1000명당 최대 12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5세 이하 유아의 사망률을 정상출산 1000명당 최대 25명 이하가 되도록 하는 등, 예방 가능한 산생아와 5세 이하 유아 사망 종식	3.2.1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3.2.2 산생아 사망률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열대 풍토성 소외질환 등 전염병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 방지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열대 풍토성 소외질환 등 전염병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 방지	3.3.1 비감염인구 1000명당 에이즈 감염자의 수 (연령별, 성별 및 주요 인구별)
		3.3.2 연간 1,000명당 TB(결핵) 발병건수
		3.3.3 연간 1,000명당 말라리아 발병건수
		3.3.4 해당 연도 내 인구 10만 명당 신규 B형 간염 감염자수
		3.3.5 소외열대성질환에 대한 치료를 요하는 인구 수
	3.4 2030년까지 예방 및 치료를 통해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1/3만큼 감소시키고 정신건강 및 웰빙을 증진	3.4.1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3.4.2 자살로 인한 사망률
	3.5 마약 및 알코올의 해로운 사용을 포함한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 강화	3.5.1 약물남용 장애 치료 (의약, 심리사회적, 재활 및 사후관리 서비스) 보장 범위
		3.5.2 국가별 상황에 따라, 주어진 회계연도 안에 (15세 이상의 인구가) 소비하는 1인당 순 알코올 리터 소비량으로 정의되는 알코올의 해로운 이용
	3.6 2020년까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전 세계 사망 및 상해건 수를 절반으로 감소	3.6.1 도로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한 사망률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목적을 포함한 성 그리고 임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임신보건을 국가전략 프로그램에 통합을 보장	3.7.1 현대화된 방식의 가족계획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임신 가능한 연령대(15~49세) 여성의 비율
		3.7.2 동일 연령대 여성 1,000명당 청소년(10-14세, 15-19세) 출산율
3.8 재정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그리고 안전하고 효과가 있으며 적당한 가격의 양질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보편적인 보건 서비스 달성	3.8.1 일반 대중과 가장 취약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임신, 모성, 산생아 및 아동 건강, 전염병, 전염되지 않는 질병 그리고 서비스 능력 및 접근성 등을 포함하는 추적개입을 기초로 제공되는 필수 서비스의 보장으로 정의되는 필수 보건 서비스 범위	
	3.8.2 인구 1,000명 당 건강 보험이나 공중 보건 시스템으로 보호를 받는 인구 수	
3.9 2030년까지 유해화학물질, 대기 수질, 토양의 공해와 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건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3.9.1 집 그리고 집 주변의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3.9.2 안전하지 않은 물, 하수처리 그리고 부족한 위생시설/안전하지 않은 WASH 서비스로 인한 사망률	
	3.9.3 의도하지 않은 중독에 의한 사망률	
3.a 적절한 경우, 모든 국가에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강화	3.a.1 15세 이상 인구 중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인구의 연령대별 현황	
3.b 주로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성 혹은 비전염성 질병을 위한 백신과 의약품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유연성에 관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상의 조항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확인하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및 공중보건 도하선언에 따라 적당한 가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 제공하고 특히 모두를 위해 의약품 제공	3.b.1 적당한 가격으로 의약품 및 백신을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	
	3.b.2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 총 순 투자	
3.c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 도서 개도국에서 보건 재정과 보건인력 모집, 양성, 훈련 및 유지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	3.c.1 보건근로자 밀도 및 분포	
3.d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조기 경보, 위험 감소, 국가적 혹은 국제적 보건위험에 대한 관리 역량 강화	3.d.1 국제 보건 규정에 의한 수용능력 및 응급 대처능력	

□ SDGs 4번 (교육)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의 최소 숙달 수준을 달성한 아동/청소년의 성비 ○ 국가 차원의 대표적인 학습평가 실시 법정 ① 무상 ② 의무 초·중등교육 연한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이수율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대학입시 제도 운영 현황 ○ 계열별 성별 고등교육 입학자 현황(성비) ○ 성인학습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1)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2) ○ 기업이 대졸사원에 대한 직업역량 및 직무역량 만족도 ○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수준(3) ○ 고등교육 공교육비에 대한 재원별 상대적 비중 ○ 소득계층별 장학금 수혜율 ○ 학자금 대출 현황 ○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 산학협력 중점 교수(전임교원) 확보율 ○ 공개강의 현황
4-4	직업교육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계층의 수요자들에게 양적, 질적으로 적합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취업과 창업 등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가진 청소년, 성인 등(구직자 및 재직자 포함) 비중을 높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수 ○ ICT 산업·직종 종사자 수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교육 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 산출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 ○ 청소년/성인 문해율 ○ 청소년/성인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4-7	세계시민교육의 증진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민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교육과정, (c)교사교육, 그리고 (d)학생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의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
4-a	기술변화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4-b	포용과 사회통합의 직업교육훈련 지원	
4-c	생애단계별 직업교육훈련 지원 체제 구축	
4-d	청소년/성인의 정보통신기술(ICT) 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의 인식 등 (보고서 참고 필요)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위 4-3의 경우, 지표수가 과도하게 많음. 우선 순위 고려하여 핵심지표와 참고지표로 나누어 관리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사회-교육-3-1교육수준 지표 등을 연계·보완하면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S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생 교육 기회 증진	4.1 2030년까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무상의 공평한 양질의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모든 소년, 소녀들에게 보장	4.1.1 (a) 초등학교에서 3/2 이상을 마친 (b) 초등학교 졸업학년 (c) (i) 읽기 및 (ii) 수학에서 최소한의 숙련도를 보이는 중학교 졸업학년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 비율 (성별)
	4.2 2030년까지,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소녀와 소년들이 양질의 조기 아동개발, 보육, 그리고 초등학교 사전교육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	4.2.1 건강, 학습 및 심리사회적 행복 측면에서 발달과정에 있는 5세 미만 아동의 비율(성별) 4.2.2 (공식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되기 전 한 해 동안) 체계적 교육에 대한 참여율(성별)
	4.3 2030년까지 대학교육을 포함하여 적당한 양질의 기술, 직업, 그리고 고등교육에 모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장	4.3.1 지난 12개월 동안 공식 및 비공식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성별)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기술적, 혹은 직업적인 능력을 갖춘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	4.4.1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가진 청소년/성인의 비율(능력유형별)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을 포함하는 취약계층에게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 훈련에 동등한 접근 보장	4.5.1 (여성/남성, 농촌/도시, 부의 하위/상위 20% 및 장애상태, 토착민, 분쟁피해자 등 기타: 데이터가 제공되는 기준에 의한) 동등성 지수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 및 남녀 성인 상당 수가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	4.6.1 해당 연령대 중 기능적인 능력 즉, (a) 독해 및 (b) 산술 능력에서 적어도 특정 수준의 숙련도를 갖춘 인구의 비율(성별)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양성 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함에 대한 공감대를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	4.7.1 (i) 세계시민의식 교육 (ii) 양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 (a) 국가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 등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범위
	4.a 아동, 장애 및 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세우고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인 효과적 학습환경을 제공	4.a.1 (a) 전기; (b) 교육 목적의 인터넷, (c) 교육 목적의 컴퓨터; (d) 장애학생들을 위한 개선된 교육기반 시설 및 자원 (e) 기본적인 식수 시설; (f) 성별로 구분되는 기본적인 위생시설 그리고; (g) WASH 지표 정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손 씻기 시설에 접근 가능한 학교의 비율
4.b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 개도국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 기술, 공학, 과학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고등 교육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장학금 수를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	4.b.1 장학금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금액의 규모(분야 및 연구 형태별);	
4.c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 개도국의 교사연수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교사의 공급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	4.c.1 (a) 유치원교육; (b) 초등교육 (c) 중등교육; (d) 고등교육 교사 중에서 해당 국가에서 해당 수준의 수업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체계적인 교사연수(예: 교육 훈련)를 사전에 혹은 재직 중 받아 본 적이 있는 교사의 비율	

□ SDGs 5번 (양성평등)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5-1	여성 및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에 따른 평등 및 차별금지를 증진, 강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간 부부폭력비율 ○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5-3	아동 결혼, 조혼 및 강제 결혼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harmful practices)의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married) 또는 동거(in a union)를 했던 여성의 비율 ○ 15-49세 소녀 및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FGM/C)를 경험한 연령별 비율
5-4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 및 가치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성별, 연령별, 장소별 비율 ○ 육아휴직사용 성비
5-5	정치·경제·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 보장 1) 여성의 성적 주체성 확립을 위한 성인지적 성교육 강화 2) 계획 임신과 안전한 성생활을 위한 피임 및 관련 상담과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3)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의료적 접근 강화를 통한 여성의 건강권 보장 4)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개선 5)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점검 실시 6) 성과 재생산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견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 공공부문 여성 관리직 비율 ○ 기업 여성 관리자 비율 ○ 학교 성교육 만족도 ○ 성적 자기결정권 ○ 피임 실천 ○ 미혼자의 성관계 경험 ○ 성건강 관련 보건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5-a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 및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계, 금융서비스, 유산(遺産)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농지에 대한 소유 및 소유권을 보장받는 전체 농업인구 비율(성별 분리); (b) 총 토지소유자 중 여성 토지소유자(토지권 종류별) ○ (관습법을 포함한) 법적근거를 통해 여성의 토지소유 또는 통제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수
5-b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폰 보유율 - 성별 및 연령 ○ 여학생 이공계 진학률 ○ 이공계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5-c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건실한(sound)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건실한(sound)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증진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전체적으로 지표수가 과도하게 많음. 우선 순위 고려하여 핵심지표와 참고지표로 나누어 관리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5-5의 세부목표 내용은 현황과 쟁점 등에 넣으면 좋을 것 같음.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사회-형평성-1-3 남녀평등 지표 등을 연계·보완하면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G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5. 양성평등 달성 그리고 모든 여성과 소녀의 역량강화	5.1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5.1.1 성별에 따른 평등 및 차별금지를 증진 강제 그리고 모니터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는 지 여부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다른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사적 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제거	5.2.1 성경험이 있는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이전의 성적 파트너로부터 물리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이들의 비율(폭력의 형태와 연령 그룹별)
		5.2.2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성적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이들의 비율(연령그룹 및 사건 발생 장소별)
	5.3 아동 결혼, 조혼, 강제결혼, 그리고 여성할례와 같은 모든 형태의 유해한 관습 제거	5.3.1 15세 이전에 결혼하거나 18세 이전에 동거를 시작한 20-24세 연령의 여성들의 비율
		5.3.2 여성할례를 경험한 15-49세 연령의 소녀 및 여성의 비율 (연령별)
	5.4 공공서비스, 기반시설 그리고 사회적 보호정책의 제공하고, 국가별로 적절하게 가정내 가족의 책임분담을 유도함으로써 무상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	5.4.1 무상 돌봄과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 비율 (성별, 연령그룹 및 지역별)
	5.5 정치, 경제, 그리고 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리더십에 대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동등한 기회를 보장	5.5.1 국회 및 지방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비율
		5.5.2 관리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비율
	5.6 국제인구개발회의의 행동계획과 베이징 행동강령 및 그 검토회의의 결과문서에서 합의한 대로 성 및 임신 보건과 임신에 대한 권리를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5.6.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임신보건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의 여성 비율
		5.6.2 15-49세 여성에게 성관계 및 임신 관련 보건 정보 및 교육을 보장하는 법률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의 수
5.a 국가의 법률에 의거해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주고, 토지나 다른 형태의 자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금융서비스, 유산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개혁에 착수	5.a.1 (a)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 (성별) (b)농경지 소유자 또는 토지 관리권을 가진 사람 중 여성의 비율 (보유기간별)	
		5.a.2 토지소유나 통제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관습법을 포함한)법률적 기반을 갖춘 국가의 비율
	5.b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실용기술 특히, 정보통신 기술 이용을 증진	5.b.1 휴대폰을 소유한 개인의 비율 (성별)
	5.c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신장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강화	5.c.1 양성 평등과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공공재원을 할당하고 추적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의 비율

□ SDGs 6번 (깨끗한 물과 위생)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6-1	물 안전 관리기법(Water Safety Plan)의 도입	○ WSP수립율(%)
6-2	2030년까지,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필요에 주목하면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양질의 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한다.	○ 농어촌 공공 하수도 보급률 ○ 개인하수도 공공관리 비율 ○ 하수 악취저감률
6-3	2030년까지 물순환 개선 및 물 재이용 활성화, 오염 감소,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방류 최소화를 통해 수질 대폭 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제고한다	○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 상수원 수질 좋음(I) 등급(BOD,총인 기준) 달성 비율 ○ 전국 수체의 수생태계 건강성 양호(B) 등급 비율 ○ 국민 물환경 체감 만족도 달성률
6-4	공급된 용수의 누수량 저감	○ 누수율
6-a	2030년까지 집수, 담수화, 용수효율, 폐수 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물 및 위생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협력과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 정부 주도의 지출 계획의 일부인 물 및 위생 관련 공적개발원조 금액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6-1~6-4처럼 큰폭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6-3 하수처리 관련은 UN SDGs 3.9 건강,웰빙에도 있어서 중복 체크 필요.
- 6-b 누락 등 세부목표 체계, 지표 체계는 가급적 UN SDGs 포맷을 유지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환경-담수-4-1 수량, 4-2 수질, 사회-건강-2-4 식수 등을 보완하면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G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6. 모든 사람에게 물과 위생에 대한 가용성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	6.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의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6.2 2030년까지, 여성과 소녀 및 취약계층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공중위생과 개인청결에 대한 접근을 달성하고 노상배변을 금지	6.2.1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 시설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6.3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유해 화학물질 투기 근절 및 배출 최소화를 통해 미처리된 하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폐수의 비율
		6.3.2, 양질의 주변 수원을 갖고 있는 수역의 비율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물 사용 효율을 높이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인구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담수의 취수와 공급을 보장	6.4.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사용 효율성의 변화 비율
		6.4.2 물 스트레스 수준: 이용 가능한 담수 자원의 부분으로서 담수의 취수
	6.5 2030년까지 국경 간 협력을 포함하여 통합된 물 자원 관리 이행	6.5.1 통합 수자원관리 (WRM) 이행 정도 (0-100)
		6.5.2 물 협력을 위해 운용협정을 맺고 있는 초국경 유역의 비율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	6.6.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범위의 변화	
6.a 2030년까지, 집수, 담수화, 물 효율성, 폐수 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하여 물 및 위생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국제협력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량 구축지원을 확대	6.a.1 정부 주도의 지출 계획의 일부인 물 및 위생 관련 공적개발원조 금액	
6.b 물과 위생 관리 개선에 있어 지역 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	6.b.1 물과 위생관리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행정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행정단위의 비율	

□ SDGs 7번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7-1	2020년까지 전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다.	○ 지능형 계량 시스템 보급률
7-2	2030년까지 에너지빈곤층의 비율을 상당한 수준으로 줄인다.	○ 전체가구에서 에너지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
7-3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증대	○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1차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최종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7-a	한국이 수행하는 국제개발지원(ODA) 사업에서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개선, 청정석탄화력기술의 지출 비중 확대	○ 우리나라의 ODA 지출 중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전력송배전 사업 지출 금액과 비중
7-b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보다 청정한 석탄화력기술 개발에서 국제협력연구 확대	○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청정석탄화력기술 부문 연구 국제협력 예산의 전체 에너지부문 국제협력 비중 ○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청정석탄화력기술 부문의 국제협력연구에서 개도국의 비중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경제-소비생산-2-1에너지사용 지표 등을 연계·보완하면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G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7. 모든사람에게 적당한 가격의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식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 보장	7.1 2030년까지 적당한 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7.1.1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 7.1.2 주로 청정연료 및 기술에 의존하는 인구비율
	7.2 203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 에너지 비중을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	7.2.1 에너지 소비의 최종단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을 2배로 증대	7.3.1 1차 에너지와 GDP의 측면에서 측정된 에너지 집약도
	7.a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및 향상된 청정 화석연료 기술을 포함한 청정 에너지 연구와 기술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기반시설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진	7.a.1 약속한 1천 억달러 투입에 대해 2020년부터 실제 동원되는 연도별 금액
	7.b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 개도국 그리고 내륙개도국에 각국의 자원프로그램에 따라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기술을 개선	7.b.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과 기술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해외 직접 투자금액과 에너지 효율성투자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 SDGs 8번(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8-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 연간 일인당 실질 GDP 성장률 ○ 연간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8-2	기술적 향상 및 혁신을 통한 경제 생산성 제고	
8-3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강화	○ 비농업부문에서의 비공식 성별 취업 비율
8-4	자원효율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파괴 비동조화	○ 물질 발자국 ○ 국내 물질 소비량
8-5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동일노동-동일임금 달성	○ 비농업부문에서 비공식성별취업비율 ○ 남녀별 평균임금과 실업률
8-6	청년 실업률 감소	○ 청년 고용률(실업률)
8-7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 근절	
8-8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 증진	○ 산업재해 발생 비율(성별 및 이주 신분별)
8-9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가능한 관광 진흥 정책 개발 및 이행	
8-10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와 금융접근성 제고	○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8-a	개도국 무역지원을 위한 원조 강화	
8-b	청년 고용을 위한 전략 수립과 세계 고용 협약 이행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세부목표 내용을 축약했는데, ,가급적 full text 사용으로 충분한 의미 전달 필요.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사회-형평성-1-2-노동분야 지표와 경제-경제구조 -1-1-경제이행 분야 지표 등을 연계·보완하면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8-2 지표, 8-7 지표, 8-b 지표 등 칸이 비어 있는데, UN SDGs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등을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S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p>8. 모두를 위해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p>	8.1 국가별 상황에 맞게 1인당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특히 최빈국은 최소한 연간 7% GDP 성장률 유지	8.1.1 1인당 실질 GDP의 연 성장률
	8.2 고부가가치 및 노동집약적 부문에 초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다변화, 기술 향상 및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을 달성	8.2.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의 연 성장률
	8.3 생산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지향적 정책을 진흥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통해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공식화와 성장을 독려	8.3.1 비농업부문으로의 비공식 취업 비율 (성별)
	8.4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0개년 계획에 따라, 선진국들이 주도적으로 소비와 생산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자원 효율성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환경약화로 부터 분리시키도록 노력	8.4.1 재로 발자국(=자원의 범위), 1인당 자원의 범위, GDP당 자원의 범위
		8.4.2 국내 자원 소비량, 1인당 국내 자원 소비량, GDP당 국내 자원 소비량
	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남성과 여성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 달성	8.5.1 여성과 남성 근로자의 평균 시간 수당 (직업별, 연령별 및 장애인별)
		8.5.2 실업률 (성별, 연령별, 장애인별)
8.6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비율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8.6.1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소년(15-24세)의 비율	
8.7 강제노동 근절, 현대식 노예 및 인신매매 종식, 소년병 동원 및 징집 등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 금지 및 근절,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 근절	8.7.1 아동 노동을 하고 있는 5-17세 아동들의 수와 비율(성별, 연령별)	
8.8 이주 근로자, 특히 여성이주자 및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를 위해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증진	8.8.1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 재해 빈도 비율(성별 및 이주자 상태별)	
	8.8.2 국제노동기구(ILO) 원문과 국가 법 조항에 의거한 노동권(집회 및 단체교섭의 자유)을 준수하는 국가의 증가(성별, 이주자 상태별)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제품들을 증진하는 지속 가능 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들의 설계 및 시행	8.9.1 전체 GDP와 성장률 중 관광 직접 GDP 비율	
	8.9.2 전체 일자리 및 일자리 성장률 중 관광산업 관련 일자리의 수(성별)	
8.10 은행, 보험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독려하고 확대하기 위해 국내 금융 기관의 역량 강화	8.10.1 성인 100,000명 당 상업적인 은행 지점들과 ATM의 개수	
	8.10.2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를 가지거나 개인적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15세 이상) 성인 비율.	
8.a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역 관련 기술 지원을 위해 강화된 통합체계를 통해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역 원조 지원의 증대	8.a.1. 무역거래 및 대금지급 원조	
8.b 2020년까지 청년실업에 대한 글로벌 전략 수립 및 운영; 국제노동기구의 ILO Global Jobs Pact 이행	8.b.1 국가예산 및 GDP 대비 사회보장 및 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총 지출액	

□ SDGs 9번(산업·혁신·인프라)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9-1	다수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고, 경제성장과 인간의 복리를 지원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접근성 ○ 가구당 소비 중 교통 이용 소비 비중 ○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9-2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산업 부가가치 중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9-3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화 기술의 순수출 규모
9-4	국가 연구 인력과 자본을 확충하고 적절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이러한 성과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대비 연구개발비
9-5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고 안전한 기술과 산업화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9-a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타국가에 대해 발전경험 공유, 금융, 기술 등 전문적 지원을 통해 전 국가적인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발전 촉진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지표 체계 또한 UN SDGs 지표를 반영하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됨. 9-b, 9-c 누락.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경제-정보화-3-1,3-2,3-3정보접근,정보인프라,과학기술 분야 지표 등을 연계·보완하면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G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9. 혁신과 인프라	9.1 모두를 위해 적당한 가격으로 공평하게 접근하는 것을 초점에 두고, 경제개발과 인간의 복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적, 초국경적 사회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양질의 신뢰할수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이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개발	9.1.1 사계절 도로 반경 2km내 거주하는 지방 인구의 비율
		9.1.2 승객 및 화물 운송량(운송수단별)
	9.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하고 2030년까지 국가별 상황에 따라 고용과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산업의 비율을 상당 수준으로 증대하며, 최빈개도국의 경우 그 비율을 2배로 증대	9.2.1 1인당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9.3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소규모 산업과 기타 기업이 적당한 신용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늘리고 가치사슬 및 시장으로의 통합을 증진	9.3.1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9.3.2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9.4 2030년까지, 모든 국가가 역량에 따라 조치를 취해, 자원효율성이 높고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과 산업화 과정을 통해 사회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산업을 개편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부여	9.4.1 부가가치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9.5 2030년까지, 인구 백만 명 당 연구 개발 종사자의 수와 공공/민간 연구 개발 지출 대폭 증가 및 혁신 장려 등을 통해,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과학 연구 강화,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 향상	9.5.1 GDP 대비 연구 개발 지출	
	9.5.2 거주자 백만 명당 (플타임에 준하는) 연구원 수	
9.a 아프리카 국가들, 최빈국들,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강화된 금융, 기술, 전문적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에서 지속 가능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춘 인프라 개발 촉진	9.a.1 기반시설에 지원되는(공적개발원조와 다른 공식적인 자금을 합한) 공식적인 국제적 자원 총액	
9.b 산업 다변화, 상품가치를 더 하는 정책환경을 조성하여 개발도상국의 국내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 지원	9.b.1 총 부가가치 중 중,고급 기술 산업 부가가치의 비율	
9.c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을 상당히 늘리고,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에서 인터넷에 대한 보편적이고 적당한 가격으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9.c.1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기술별)	

□ SDGs 10번 (불평등 완화)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10-1	2030년까지 하위 40%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 빈곤율
10-2	2030년까지 나이, 성별, 장애여부 혹은 여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을 강화 증진한다.	○ 소득격차비율(또는 빈곤격차비율) ○ 소득 5분위 배율 ○ 인구집단별(성, 연령대, 장애유무 등) 빈곤율
10-3	나이,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결과의 불평등을 줄인다.	○ 인구집단별(성, 연령대, 장애유무 등) 고용율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변경과 생략이 많이 되어 UN SDGs 제정 취지를 살려 재검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10-1에도 빈곤율의 경우, 세부목표 관련성이 있는지 재검토 필요함.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사회-형평성-1-1-02)소득불평등 지니계수 등 관련 지표 연계·보완하면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G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0.1 2030년까지 소득하위 40% 인구의 소득성장률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달성 및 유지	10.1.1 하위 40% 인구 및 총 인구 중 가구지출 또는 1인당 소득의 성장률
	10.2 2030년까지 나이,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강화하고 증진	10.2.1 중위소득 50% 이하의 인구 비율(연령, 성, 및 장애인별)
	10.3 차별적인 법, 정책 및 관행 등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입법, 정책 그리고 조치를 강화하여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성과에 있어서 불평등을 감소	10.3.1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내 개인적으로 차별을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의 비율
	10.4 재정, 임금, 그리고 사회보장에 대한 정책 등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평등확대를 달성	10.4.1 임금 및 사회보장이전으로 구성된 GDP 중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
	10.5 세계금융시장 및 기관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이와 같은 규제의 이행을 강화	10.5.1 재정 건전성 지표
	10.6 더 효과적이고 신뢰할 만하며 책임있는 합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제경제 및 금융기구의 사결정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대표성과 발언권 강화를 보장	10.6.1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거나 투표권이 있는 개발도상국의 비율
	10.7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을 통해 질서있고 안전하며 정기적이고 책임있는 인구의 이주와 이동을 촉진	10.7.1 이주국가에서 얻은 연간소득 대비 이주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비율 10.7.2 잘 관리되는 이주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
	10.a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개발도상국가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차등대우 원칙 이행	10.a.1 관세가 없는 최빈국/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선 비율
	10.b 국가별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도움이 가장 필요한 최빈개도국, 아프리카 국가, 군서도서 및 내륙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포함한 공적개발원조와 자금 거래를 독려	10.b.1 개발을 위한 자원투입 총액(예: 공적개발원조, 해외직접투자 및 기타 투입)
10.c 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거래비용을 3% 미만으로 줄이고, 송금비용이 5%를 넘는 송금경로를 제거	10.c.1 송금된 금액 대비 송금 비용	

□ SDGs 11번(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11-4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노력 강화	○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재 건 수 및 국제적인 등위
11-5	재해로 인한 피해 감소	○ 인구 100,000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 수 ○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을 포함하여,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손실
11-6	2030년까지 대기의 질과 생활 및 기타 폐기물 관리 등을 주시한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1인당 환경영향을 감소	○ 초미세먼지(PM2.5)농도 기준 초과 일 수
11-a	계획을 통한 도-농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 강화	○ 도시·군기본계획과 시·군 환경보전계획을 통합관리하여 수립한 지자체 수
11-b	통합적 재난위기관리체계 구축	○ UN 방재안전도시 인증 도시 비율 ○ 도시 재해취약성분석에 근거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방정부 비율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11-6 의 경우, 고형폐기물과 도시 미세먼지 지표 등은 환경분야 지표이면서, 도시 공동체 관리 지표임에 유의하여 배치 필요.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환경-대기-1-3대기질 분야 지표 등을 연계·보완하면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자연재해의 경우, 사회-재해안전 분야 관련이라, 지표의 교차 검토(cross check)가 필요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G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11. 지속가능 도시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충분하고 안전하며 적당한 가격의 주택 및 기초서비스에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를 개선	11.1.1 빈민가, 임시거처 또는 불충분한 시설을 가진 주거지에 거주하는 도시인구의 비율
	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의 수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도로안전을 개선하고,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으로 접근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대한 접근을 제공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연령별, 성별 및 장애인별)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지향적이고 통합적인 지속가능 인간거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	11.3.1 인구증가를 대비 토지 소비 비율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의 비율
	11.4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노력 강화	11.4.1 세계문화유산을 포함하는 국가문화·자연 유산의 보전,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국가(또는 지방)예산의 비율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자수를 대폭 줄이고 세계 총 GDP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	11.5.1 인구 100,000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1.5.2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을 포함하여,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손실
	11.6 2030년까지 대기의 질과 도시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하면서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1인당 환경영향을 감소	11.6.1 도시에서 발생하는 전체 고형 폐기물 중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절한 최종처리단계를 거치는 도시 고형 폐기물 비율 11.6.2 도시 미세먼지(PM2.5초미세먼지와 PM10 미세먼지)의 연평균수준 (인구수에 따른 가중)
	11.7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녹색 및 공공장소 제공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의 용도를 위해 개방된 시가지 지역이 차지하는 평균비율(연령, 성 및 장애인별)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비율(성별, 연령별, 장애상태별, 발생 장소별)
	11.a 국가 및 지역개발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근교도시 그리고 농촌간의 긍정적인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연결고리를 지원	11.a.1 인구 추계와 자원 수요를 통합하는 도시 지역 발전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도시 크기별)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재난회복력을 위한 통합된 정책, 계획을 채택, 이행하는 도시와 인간 거주지의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하고, 2015-2030 센다이 재난위험감축체계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전체적인 재난위험 관리를 개발하고 이행	11.b.1 센다이 재난위험감축체계 (2015-2030)에 따라 지역적인 재난위험 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지방 정부의 비율 11.b.2 국가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재난위험 감축전략을 갖춘 국가의 수
	11.c 지역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을 가진 건물을 짓는 데 금융 및 기술적 지원을 통해 최빈개도국을 지원	11.c.1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으며 자원 효율적인 건물을 짓고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위한 재정 지원 비율

□ SDGs 12번(지속가능한 생산·소비)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12-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 수립 및 이행	○ 공공분야 녹색제품 구매율
12-2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전과정 자원효율 관리 기반 구축	○ 물질발자국(Material Footprint) ○ 국내 자원 소비량(DMC), 1인당 자원소비량 ○ 국내 자원생산성(GDP/DMC), 자원강도(DMC/GDP)
12-3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1인당 식품폐기물을 1/2로 감소하고 식품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양 감소	○ 식품 손실 지표(Food Loss Index) ○ 식품 폐기물 지표(Food Waste Index)
12-4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한 인간의 건강보호와 환경오염 예방	○ 화학물질 관련 국제환경협약 참여 당사자 수와 유해폐기물 발생량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64%
12-6	지속가능경영 활동 노력과 성과 및 계획을 투명하게 보고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수 파악 및 발간 기업 확대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수
12-7	녹색 공공조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활성화	○ 공공분야 녹색제품 구매율
12-8	지속가능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 예산 확대	○ 지속가능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 예산 확대율
12-a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게 과학기술 역량 지원 강화	○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지원되는 금액
12-b	지속가능한 관광 측정지표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	
12-c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	○ GDP 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

< 검토 의견 >

-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감안하여 누락없이 잘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에 최대한 부합하게 해도 될 듯함.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로 보면, 곳곳에 관련 지표가 흩어져 있는 형국인데, 관련성을 한번 더 살펴 보면서 연계·보완하면 더욱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12.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12.1 개발도상국의 개발역량을 고려하여, 모든 국가가 행동에 참여하되 선진국이 주도하면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대한 10년 주기 프로그램 이행	12.1.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SCP) 국가 실행 계획이나 SCP를 주류화 하는 계획을 국가정책 우선순위 혹은 세부목표로 갖고 있는 국가들의 수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지속가능한 관리 달성	12.2.1 재로 발자국(=자원의 범위), 1인당 자원의 범위, GDP당 자원의 범위
		12.2.2 국내 자원 소비량, 1인당 국내 자원 소비량, GDP당 국내 자원 소비량
	12.3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식량낭비를 1/2로 줄이고, 수확 후 손실을 포함하여 식량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량 손실 감소	12.3.1 세계 식량 손실 지수(GFLI)
	12.4 2020년까지, 합의된 국제체계에 따라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에 대해 생애주기 동안 친환경적인 관리를 달성하고, 이들이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을 크게 감소	12.4.1 유해 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환경 다자 협약에 참여해, 각 규정에서 요구되는 정보전달의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자의 수
		12.4.2 1인당 발생하는 유해폐기물, 유형별로 처리되는 유해 폐기물의 비율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12.5.1 국가 재활용 비율, 재활용되는 다수의 물질
	12.6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이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채택하고,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고주기에 통합하도록 독려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
12.7 국가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 촉진	12.7.1 지속 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들과 실행 계획들을 이행하는 국가들의 수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식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보장	12.8.1 (i) 세계시민의식 교육 (ii) 기후변화 교육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 (a) 국가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 등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범위	
12.a 개발도상국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양식을 지향할 수 있게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원	12.a.1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지원되는 금액	
12.b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문화 및 상품을 홍보하는 지속가능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발전의 영향을 모니터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	12.b.1 합의된 모니터링과 평가수단을 가진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이나 정책 그리고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	
12.c 개발도상국의 특정한 수요와 여건을 고려 하면서, 빈곤층 및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 개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세제를 개혁하고 해로운 보조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을 반영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상황에 따라 시장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낭비적 소비를 조정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	12.c.1 GDP 단위 (생산과 소비)당, 그리고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지출 총액 중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 SDGs 13번 (기후변화)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13-1	국내 모든 곳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예상되는 자연재해에 대해 위험수준(critical level)을 이상으로 회복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기반의 상대적 연평균 인명피해, 재해피해액, 피해복구액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국가 및 지방 정책, 전략, 계획에 통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비율/ 탄소포인트 지급액 ○ 자연재해 피해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비율/이행률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기후변화 대응 총예산(예산비율) ○ 민간기업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 건수 및 이행실적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을 고취하고 저탄소생활을 확산한다.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관련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업 참여를 독려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고취와 저탄소 생활 확산 ○ 기후변화 완화 및 감축 교육 ○ 기업 온실가스 감축 참여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부합화의 사례로, UN SDGs 13.1.1 국가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재난위험 감축전략이 있는 국가의 수... 의 경우, '국가의 수'를 광역,기초 지자체의 수... 로 변경하면 좋은 K-SDGs 가 되지 않을까 함.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환경-대기-1-1-기후변화 및 사회-재해안전 분야 지표 등을 연계·보완하면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G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대응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 강화	13.1.1 국가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재난위험 감축전략이 있는 국가의 수
		13.1.2 인구 100,000명 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3.2 기후변화 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및 계획에 통합	13.2.1 식량 생산을 위협하지 않는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회복력을 기르며,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하는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통합된 정책/전략/계획의 수립과 운용을 홍보하는 국가의 수 (국가 적응계획, 국가적으로 결정된 분담, 국가차원의 홍보, 격년별로 갱신되는 보고서 등)
	13.3 기후 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에 대한 교육, 인식 고취, 인구 및 제도 역량 개선	13.3.1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를 1차, 2차, 3차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국가들의 수
		13.3.2 적응, 완화, 그리고 기술 이전 및 개발 이행을 위한 기관, 체계, 그리고 개인적인 역량 강화를 홍보한 국가의 수
	13.a 의미있는 완화조치와 이행에 관한 투명성의 맥락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기금적 조속한 자금 출자를 통해 녹색변화기금의 온전한 운용을 위해서, 2020년까지 모든 원천으로부터 매년 1,000억 달러를 공동으로 동원하겠다는 목표하에 유엔기후변화협약 선진국 당사자의 공약을 이행	13.a.1 약속된 1천 억달러 투입에 대해 2020년부터 실제 동원되는 연도별 금액
	13.b 여성, 청년, 그리고 지역 및 소외 공동체를 초점에 두고,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에서 효과적인 기후변화 계획 및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메커니즘을 촉진	13.b.1 여성, 청소년, 및 지역 및 소외 공동체에 초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메커니즘 개발을 위해 금융 및 기술 지원 등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최빈 개도국과 군소 도서개도국의 수

□ SDGs 14번(해양생태계 보전)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14-1	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평가 지수값(WQI, Water Quality Index)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 육상기인 쓰레기의 해양 유입 감소 비율
14-2	수산자원 서식 및 생태환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타적 경제수역내 산란장 조사 정점(면적) ○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 개소
14-3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 최소화 - 연안의 수소이온농도(pH)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 확립 - 근해의 수소이온농도(pH) 모니터링 체계 확립	○ 전국 연안 연평균 pH 농도
14-4	과학적 자원조사·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수산자원관리 계획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의 비율 ○ 목표자원량 대비 현재 수산자원량의 비율
14-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14-6	국내 수산보조금의 영향 평가 및 체계 개편 수산자원 관리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IUU 어업 모니터링 통제 위한 자원 확대 - IUU 어업의 효과적 통제 및 감시를 위한 시스템 구축 자원 확보 - IUU 어업의 효과적 통제 및 감시를 위한 교육 자원 확보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위 지표 14-5 ...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은 이 항목과 관련성 없는 내용임.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환경-해양/연안 분야 지표 등을 연계·보완하면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G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14. 해양 생태계	14.1 2025년까지 해양 쓰레기와 영양염류 오염을 포함하여 특히 육지기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14.1.1 해안 부영영화 및 유동 플라스틱 잔해밀도 지수
	14.2 2020년까지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 및 보호하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대양으로 만들기 위해 복구 조치들을 이행	14.2.1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관리되는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비율
	14.3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협력을 강화하여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이에 대응	14.3.1 합의된 대표 표본 추출 지점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 산도(pH)
	14.4 최소한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 지속가능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능한 한, 최단 기간에 어족자원을 복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효과적으로 어획을 규제하고, 남획, 불법, e비보고, 비규제 어업 및 파괴적인 어업관행을 종식하며, 과학에 기초한 관리계획을 이행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 이내의 어족자원의 비율
	14.5 2020년까지 현재의 과학적 정보를 기초로 하고 국가 및 국제법과 부합하는 방식에 따라 최소한 연안 및 해양지역의 10% 보존	14.5.1 해양지역 대비 보호구역의 범위
	14.6 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효과적인 특별대우가 중요함을 인정하고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특정형태의 어업 보조금 금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 도입 자제	14.6.1 불법적, 보고되지 않은, 그리고 규제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수단을 이행하는 정도에 있어서의 국가별 진전
	14.7 2030년까지 수산업, 양식업 및 관광산업의 지속가능관리를 포함하여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통하여 최빈개도국 및 군서도서 개도국의 경제적 이익 증대	14.7.1 군소도서 개발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14.a 해양건강을 개선하고 개발도상국, 특히 군소도서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개발에 대한 해양 생물다양성의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해양학위원회의 기준과 지침을 고려하여 과학적 지식 증대, 연구역량 개발 및 해양기술 이전	14.a.1 해양기술부문 연구에 할당되는 전체 연구 예산의 비율
	14.b 소규모 영세어업자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 접근성 제공	14.b.1 소규모 영세어업을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정해 주고 보호할 수 있는 법/규정/정책/제도적인 기반을 실행 단계에서의 국가별 진전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보고서의 158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대양 및 대양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체계를 제시하는 UNCLOS에 반영된 국제법 이행을 통해 대양 및 대양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개선	14.c.1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법을 이행하는 법적,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인 기반 그리고 대양 관련 수단들을 비준, 수용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 SDGs 15번(육상생태계)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15-1	2020년까지 국제협약 의무에 따라, 특히 산림, 습지, 산, 건조지 등의 육지 및 내륙담수 생태계와 그 서비스에 대한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육지면적 중 산림 면적의 비율 ○ 육상 및 담수 다양성을 위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요 지역의 비율 ○ 임야 및 공원 통계자료 이용하여 목표치 대비 전용율 감소 정도(%) ○ 생태관광지역들에 대한 관광객 수와 지역의 관광객 수입 총액수
15-2	2020년까지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시키고, 산림 파괴를 중단하고,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림과 재조림을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진전(국제협약 국가보고 지표 개선비율과 보고의 완전성 평가 정도) ○ 산림생태계의 유형, 천이단계, 영급 등에 따른 산림 면적과 비율 ○ 산림경영율
15-3	2030년까지 사막화 방지와 사막화, 가뭄, 홍수로 영향을 받는 토지를 포함하여 황폐화된 토지 및 토양 복원, 그리고 토지황폐화 중립 세계 달성을 위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토지 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 토지이용 유형별 면적과 비율 ○ 토양탄소량 변화 ○ 토지생산성(NPP)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이익을 주는 산림 생태계의 수용력을 증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 보전을 보장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의 수용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생물다양성 등 산림생태계를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 생물다양성을 위한 중요 장소 보호구역 범위 ○ 산 녹색 보호 지수 ○ 목표치 대비 적합서식지 면적(%) ○ 전체 멸종위기종 중 복원 및 증식 종수의 비율(%) ○ 산림 생물다양성을 위한 핵심 산림 보호구역 지정 범위 ○ 산 녹색 회복 지수 ○ 산림 생태계서비스 제공을 경영목적으로 지정한 산림 면적 ○ 국토 생태축 연결성 확대
15-5	자연 서식지 황폐화를 줄일 수 있도록 긴급하고 의미있는 조치를 취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하며, 2020년까지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 멸종위기종 보전관리 모니터링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규모의 적색목록지수(National Red List Index)
15-6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공유되도록 하며,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확대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의 공평하고 공평한 분배를 촉진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인 기반을 채택한 국가의 수
15-7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종식하기 위해 조속한 행동을 취하고, 불법 야생동물 상품의 수요 및 공급 측면의 문제를 동시에 다룸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 종식	
15-8	2020년까지 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우선 퇴치종을 통제하거나 퇴치 생태계 교란 침입외래종 유입 방지 및 통제 제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입외래종 유입 예방 및 통제 위한 국가 차원의 법률 및 수단 집행 건수 ○ 침입외래종(병, 해충, 침입종)에 영향을 받은 산림면적과 비율 ○ 국내 생태계에서 제어된 외래종의 종수 ○ 지속가능하며 자연친화적인 외래종

번호	세부목표	지표
		박멸 및 제어 기술의 종류 개수
15-9	2020년까지 국가 및 지역별 계획, 발전과정, 빈곤감소전략, 회계에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통합하고 반영	○ 2011-2020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5-a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모든 재원을 동원하고 대폭 확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기금, ODA 규모 확대	○ 국민총소득(GNI) 대비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 ODA 및 공공지출 증가율(%) ○ 멸종위기종 증식 및 복원에 기여한 친환경 기업의 지출
15-b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재원 조달을 위해 모든 수준과 영역에 걸쳐 상당규모의 재원을 동원하고, 개발도상국이 산림보존 및 재조림과 같은 지속가능한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 부여	○ 생태계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5-c	지역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생계 유지 기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환경-생물다양성 분야 지표 등을 연계·보완하면 <일관성>있는 지표체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S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위 15-4에서 제시한 다양한 지표들은 그 전체를 나열하기 보다는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지표 1~2개를 우선 선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15. 육상 생태계	15.1 2020년까지, 국제 협약 의무에 따라, 특히 산림, 습지, 산, 건조지 등의 육지 및 내륙 담수 생태계와 그 서비스에 대한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	15.1.1 총 육지면적중 산림 면적의 비율 15.1.2 육상 및 담수 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요 지역의 비율
	15.2 2020년까지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를 촉진시키고, 산림벌채를 중단하고,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림과 재 식림을 대폭 확대	15.2.1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에서의 진전
	15.3 2030년까지, 사막화 퇴치와 사막화, 가뭄, 홍수로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하여, 황폐화된 토지 및 토양 복원, 그리고 토지 황폐화 증립 세계 달성을 위해 노력	15.3.1 총 토지 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15.4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을 포함하여 생태계 보호	15.4.1 산 생물 다양성을 위한 중요 장소 보호구역 범위 15.4.2 산 녹색 보호 지수	
	15.5 자연 서식지의 황폐화를 줄이기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중단시키며, 2020년까지 멸종위기 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	15.5.1 레드리스트 지수
15.6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촉진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증대	15.6.1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인 기반을 채택한 국가의 수	
15.7 보호대상 동식물 밀렵과 밀매를 종식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야생동물 제품 수요와 공급 모두에 대응	15.7.1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15.8 2020년까지 외래 침입종 유입예방과 이들이 육지 및 수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우선순위를 통제하거나 퇴치	15.8.1 외래침입종의 유입 예방과 통제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과 적당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	
15.9 2020년까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가치를 국가 및 지역 계획·개발 과정 그리고 빈곤감소 전략에 통합	15.9.1 2011-2020 생물 다양성 전략계획의 Aichi 생물 다양성 목표2에 따라 수립된 국가 목표의 진전도	
15.a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모든 원천으로부터 자원 동원하고 증대	15.a.1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5.b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모든 수준과 모든 원천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자원을 동원하고, 보존 및 재조림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동기를 제공	15.b.1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5.c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계기회 추구 역량 증대를 통해 보호종의 밀렵과 밀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국제적 지원강화	15.c.1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 SDGs 16번(평화, 포용, 정의, 책임있는 제도)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16-1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이 항목은 인권보호, 부패방지, 국가인권기구 규정 등 사회 전반적으로 중요한 제도화를 규정한 것으로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교차 검토가 필요한 분야임.
-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분류에도 잘 반영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 많으므로,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세부목표 설정 및 지표화 하는 작업이 필요함.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G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16.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있으며, 포용적인 제도구축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관련 사망률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16.1.1 인구 100,000 명당 의도된 살인범죄의 피해자 수 (연령별 및 성별)
		16.1.2 인구 100,000 명당 분쟁관련 사망 (연령별, 성별 및 사유별)
		16.1.3 지난 12개월 동안 육체적, 심리적, 성적폭력에 노출된 인구의 비율
		16.1.4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홀로 안전하게 걷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증식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의 육체적인 체벌이나 정서적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16.2.2 인구 100,000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 중 파악되거나 파악되지 않은 인구 수; (성별, 연령별, 착취형태별)
		16.2.3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18-24세 여성과 남성의 비율
	16.3 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수준의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16.3.1 지난 12개월간 폭력 피해자 중 피해를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을 통해 신고한 인구 비율
		16.3.2 전체 교도소 수용자 중 판결이 나지 않은 수감자의 비율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거래를 상당한 수준으로 줄이고, 도난자산 회수 및 복구를 강화하여,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범죄를 방지	16.4.1 국내 및 국외 불법 반입 자금의 총 가치 (현재 US달러 기준)
		16.4.2 국제 규범 및 법적절차에 따라 기록 및 추적되고 압수된 휴대용 소형 무기의 비율
	16.5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16.5.1 지난 12개월 간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에 의해 뇌물을 요구 받았던 인구 비율
	16.5.2 지난 12개월간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에 의해 뇌물을 요구받았던 기업인의 비율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16.6.1 최초 승인된 예산 중 정부 주요 지출액의 비율 (부문별 또는 예산코드 및 이와 유사한 기준별)	
	16.6.2 공공서비스에 관한 가장 최근 경험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비율	
16.7 모든 수준에서 공감할 수 있고, 포용적이며, 참여지향적이고 대표성을 가진 의사결정을 보장	16.7.1 국가 전체적 분포와 비교했을 때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보직 분포 비율(연령, 성별, 장애인 및 인구집단별)	
	16.7.2 의사결정이 통합적이고 호응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성별, 연령별, 장애, 및 인구 집단별)	
16.8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에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	16.8.1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거나 투표권이 있는 개발도상국 비율	
16.9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법적신원 제공	16.9.1 출생시 시 행정 당국에 등록된 5세 이하 유아비율(연령별)	
16.10 국내법 및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 보호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무역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해, 납치, 강요된 실종, 임의구금 및 고문으로 확인된 사건 수	
	16.10.2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6.a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폭력 예방 및 테러나 범죄 방지를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역량구축을 위해 국제협력을 통한 관련 법규나 제도를 강화	16.a.1 파리규정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관의 존재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 그리고 정책을 증진하고 시행	16.b.1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근거해 최근 12개월 내 개인적으로 차별을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의 비율 (연령별, 성별)	

□ SDGs 17번(파트너십)

<K-SDGs 초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17-1	개도국의 재원동원 역량화를 지원	
17-2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17-3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개도국을 위한 추가재원동원	
17-4	고채무빈곤국(HIPC)의 채무부담 완화(글로벌파트너십)	
17-5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지증진체제를 수립 및 이행	
17-6 ~8	개도국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	
17-9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국가계획 지원을 위한 역량 및 국제사회 지원강화(글로벌파트너십)	
17-10	도하개발의제와 다자무역제도 촉진	
17-11	최빈국과 개도국의 수출 확대	
17-12	최빈국의 시장접근조치 확대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해 수립한 총괄기구 수 ○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원조 및 비원조 정책 간 정책 일관성 가이드라인수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재량과 리더십 존중	
17-16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7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권장 및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위해 할당된 금액(KOICA, EDCF, KSP 등 민관협력(PPP) 자원측정) ○ 공인된 민관협력 플랫폼에 참여하는 공공 및 민간단체 수 ○ SDGs 민관파트너십 가이드라인 수립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및 강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회 수
17-18	사회경제 및 인구학적으로 세분화된 국가 통계 구축 지원	
17-19	지속가능발전 측정과 모니터링을 위한 개도국 통계 역량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역량 강화 목적의 공적개발원조 금액 및 비율(OECD DAC)

< 검토 의견 >

- 유사한 내용이라면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아래> UN SDGs 의 세부목표, 지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위 17-1~12 분야의 지표가 공란으로 있는데, UN SDGs 지표 참고하여 재구성 필요.
- <파트너십> 항목은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에서도 그다지 잘 반영되어 있지 않아,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임. 특히, 이 분야는 사회책임 국제표준 ISO26000 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거버넌스 구축 방법론 등이 연관되어 있어 있고, 각 분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임.
- 중요한 지표들을 핵심지표로 하여 K-SDGs 지표에 반영하고, 작업반에서 논의한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UN SDGs - 목표, 세부목표, 지표 >

17. 파트너십	17.1 세금 및 기타 수익 징수를 위한 국내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통한 국내 자원 동원 강화	17.1.1 총 GDP 대비 정부 세수 총액(출처별) 17.1.2 국내세금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는 국내 예산의 비율
	17.2 개발도상국에는 ODA/GNI 0.7%, 그리고 최빈개도국에는 ODA/GNI 0.15~0.2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다수 선진국의 공약을 포함하여, 선진국들은 공적개발원조(ODA)약속을 완전히 이행: ODA 공여국들이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GNI 의 최소 0.20% 제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권장	17.2.1 OECD/개발 원조 위원회(DAC)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1) ODA 순액의 비율 2) ODA 총액의 비율 3) LDC(최빈국)에 대한 ODA 비율
	17.3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을 위한 추가자원을 동원	17.3.1 총 국내예산 중 해외 직접 투자, 공적개발 원조 및 남남 협력의 비율 17.3.2 총 GDP 중 송금액(미국달러기준)의 비율
	17.4 필요할 경우, 채권금융, 채무 탕감 및 채무 재조정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조정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장기 채무건전성 확보를 지원하고, 채무 위기 완화를 위해 고채무빈국의 외채문제에 대응	17.4.1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채무상환
	17.5 최빈국을 위한 투자 촉진 체제 도입 및 이행	17.5.1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 체제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7.6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남북, 남남, 삼각 형태의 지역적 국제적 협력 및 접근을 강화하고 특히 UN 수준에서 현재 메커니즘간 조율을 개선하고 글로벌 기술 촉진 메커니즘을 통해 상호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지식의 공유를 강화	17.6.1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협정과 프로그램의 수(협력 형태별) 17.6.2 거주자 100명당 고정 인터넷 광대역 가입률 (속도별)
17.7 상호합의에 따라 양허특혜 등 유리한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전파 및 확산을 증진	17.7.1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배포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지원액 중 총 승인금액	
17.8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구축 메커니즘 운영을 전면 가동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위주의 핵심기술 사용을 강화	17.8.1 인터넷 이용자 비율	
17.9 남북, 남남, 삼각 협력 등을 통해,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지원할 개발도상국의 효과적, 선별적 역량구축 이행에 국제적인 지원을 강화	17.9.1 개발도상국으로의 (남북, 남남, 그리고 삼각 협력을 포함하는) 재정 및 기술 지원의 달러 가치	
17.10 도하개발의제 협상 결론으로 세계무역기구 관리하에 보편적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개방적이며 비차별적이고 공평한 다자무역체제를 증진	17.10.1 국제 가중 관세 평균치	
17.11 2020년까지 특히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의 비중을 2배로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	17.11.1 전세계 수출 가운데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수출비중	
17.12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가능한 특혜원산지 규정이 투명하고 단순하며 시장접근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서 세계무역기구 결정에 부합하도록 모든 최빈개도국에 대해 영구적인 무관세 무쿼터 시장접근을 시의적절하게 이행	17.12.1 개발도상국, 후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	
17.13 정책일관성 및 조율을 통하여 글로벌거시경제 안전성 강화	17.13.1 거시경제 대쉬보드	
17.14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	17.14.1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증진 하기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한 국가의 수	
17.15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적 여유와 리더십을 존중	17.15.1 개발협력 제공자가 국가소유의 성과체계 및 계획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지속 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지식, 전문성, 기술,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다중 이해 당사자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될 수 있는 지속 가능개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6.1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중이해당사자 개발효용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진전을 보고하는 국가의 수
17.17 파트너십기관이 가진 자원조달 전략과 경험을 기초로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독려 및 촉진	17.17.1 공공-민간 및 시민단체 파트너십을 위해 약속된 US달러 금액
17.18 2020년까지 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아주 상태, 장애, 지리적 위치, 그리고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화되는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 개도국 등 개발도상국의 역량 구축 지원 강화	17.18.1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완전 세분화된 국가적 수준에서 작성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비율
	17.18.2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 법령을 갖고 있는 국가의 수
	17.18.3 전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이행 중에 있는 국가 통계 계획을 가진 국가의 수 (재정지원 출처별)
17.19 2030년까지 GDP를 보완할 지속가능발전 성과의 측정수단 개발을 위해 기존의 시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 구축을 지원	17.19.1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
	17.19.2 지난 10년 동안 a)최소한 한 번의 인구 주택조사를 진행했고, b)100퍼센트의 출생등록과 80퍼센트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3. 결론

1. 2018년 K-SDGs 초안을 검토함에 있어, 그 동안 국가 차원에서 2006년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온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 논의와 맥락 아래에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함.
2. K-SDG 작성 작업은 <UN SDGs>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과 기존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논의 결과를 동시에 반영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수정·보완·추가는 변화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음.
3. 지표 검토 시에는 아래의 3가지 점검 원칙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 비교가능성 : 유사한 이슈에 대한 지표는 비교가능성이 있어야 함. 이는 국제 지표간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비교와 소통과 통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함.
 - 2) 일관성 : 2006년 이후 정기적으로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검토하여, 수정·보완해 온 바, 논의 및 지표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
 - 3) 대표성 : 지표는 그 분야의 이슈의 본질과 개선방향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을 채택하여야 하며, 다양한 지표를 나열하기 보다는 이슈의 본질을 잘 반영하는 대표적인 '핵심적인' 지표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함.
4. 그동안 작업반에서 논의한 다양한 지표들 관련, 중요한 핵심지표는 K-SDGs 지표에 반영하고, 여타 지표들은 참고지표로 付記(부기)하여 향후 논의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끝>.

SDGs 8번(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노동 및 일자리와 관련한 과제를 보면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고용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복지부) 18.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고용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기재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금융위),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고용부),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고용부),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가부),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가부),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고용부)등의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52시간제 도입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총론은 맞지만 이를 실현할 각론이 마련되지 못했다.

개혁의 총체적 상이 부재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재벌개혁에 대한 구상과 실행방도 없어, 세부 실현방안과 재원이 없다.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해서도 이에 따른 자영업자, 영세기업 반발은 임대료, 카드수수료, 납품단가 후려치기, 프랜차이즈 가맹비 등 재벌개혁 계획이 부재하다.

개혁의 동력을 형성하지 못해 보수언론에 고립, 국회에서 적폐세력들에게 고립,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개혁의 동력을 묶어 개혁동맹을 형성하고 이에 근거해서 개혁을 추진해야 하지만 녹녹치 않다.

노동주도 성장 정책을 위해 재벌개혁을 경제민주화 핵심 과제로 제시 재벌 특혜인 정부 지원금을 노동자, 자영업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고, 경제주체들에게 협상권을 부여하여,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의 고용과 임금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 상승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려면 임금상승/고용안전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고 기업 생산 증대의 선순환구조 성장을 완성 시켜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8년부터 매년 10월7일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 행동의 날’(World Day for Decent Work)로 지정하여 전 세계에서 공동행동을 개최해오고 있고, 민주노총은 2008년에 이어 2015년에도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좋은 일자리’ 지표 국제비교 평가 보고서 발간하였습니다. OECD 회원국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고용의 조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선정한 5개 범주 17개 지표에 관한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참고하여 K-SDGs 8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선정하는데 참고했으면 한다.

< 표 >민주노총의 좋은 일자리 5개 범주 17개 지표

ILO Decent Work 11개 범주	민주노총의 ‘좋은 일자리’	
	5개 범주	17개 지표
고용안정성	고용기획 및 고용안정	경제활동참가율
고용기획		고용률(15세-64세) 실업률(15세-64세) 청년실업률(15세-24세) 임시직 비율
철폐되어야할 노동	-	-
적당한 수입과 생산적 노동	노동조건	저임금노동자 비율
적절한 노동시간		연간노동시간
안전한 작업환경		10만명당 산재사망자수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성별 임금격차
고용 평등		고위직원/관리직 여성비율 (제외)
사회보장	소득불평등및 사회보장	소득불평등(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공적사회복지 지출 공적 현금급여지출액 비중
사회적 대화	노동기본권 및 대표성	국제노동협약 비준 노동조합 조직률 임금단협 적용률 교섭의 집중/조정
경제사회적 맥락	-	-

자료: 민주노총_2015년 세계 좋은 일자리의 날 맞이 ‘좋은 일자리’ 지표 OECD 국제비교_2015년10월. p.2

◆ 의견 ◆

1. 먼저 제목부터 변경해야 할 것 같다.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표현을 ‘좋은 일자리’로 명기 했다.

SDGs 8번(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SDGs 8번(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2. ‘8-3.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강화’ 세부목표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강화’로 변경하고, 지표를 ‘비농업부분에서의 비공식 성별 취업비율’에서 ‘고용률(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노동법상 최저 근로연령인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 차지하는 비율)’과

‘임시직 비율(사전에 근로계약 종료시점이 규정된 일자리 비율)’로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3. ‘8-5.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동일노동-동일임금 달성’ 세부목표를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동일노동-동일임금 달성’으로 변경하고, 지표를 ‘비농업 부분에서의 비공식 성별 취업비율’과 ‘남녀별 평균임금과 실업률’에서 ‘저임금비중(중위임금 2/3 이하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보조지표로 ‘임금불평등 지표(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비율 D9/D1)’, ‘임금노동자 주간 및 연간 노동시간(남녀대비, 상시직, 임시직, 일용직구분 적시)’, ‘성별 임금 격차(남성 중위임금에 대한 남녀 중위임금 격차의 비율)’로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4. ‘8-b. 청년 고용을 위한 전략수립과 세계 고용협약이행’의 지표로 ‘공적 사회복지지출 비중(GDP 대비 공적 사회복지지출)’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현황[2015년 현재 우리나라는 비준한 협약은 전체를 통틀어 29개로 32위(OECD 평균 74.7개), 이중 기본협약의 경우 8개 중 4개를 비준하여 33위를 기록,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함]을 선정 검토해야 한다.

1 빈곤감소 및 경제적 안정성 확보

I 목 표

1. 필요성 및 의의

※ 해당 목표 전반의 필요성과 의의를 개조식으로 제시

- 사회구성원 각 개인의 실현능력 확보와 사회계층간 통합을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할 필요가 있음
- 사회의 표준적인 삶의 기준보다 낮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빈곤선 이하 인구규모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 모든 형태의 빈곤에는 물질적 빈곤 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정신적인 빈곤 문제를 포함하는 혁신적 접근을 제안
- 소득보장 뿐 아니라 각종 사회서비스의 포괄성·충분성을 확대하여 사회보장의 실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소득 빈곤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요건인 주거, 교육, 건강 등 각종 사회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
- 기초적·필수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모든 계층, 집단 및 지역에 증대하여, 서비스 이용가능성의 보편성을 확보
- 수원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협력의 강화
- 원조수혜국으로 경험을 반추하여 든든한 원조지원국의 역할 수행
- 수원국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의 설계 지원을 통해 발전을 도모
- 수원국이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과 인간성을 유지하고 있어 행복도가 높은 사례를 찾아 홍보할 필요성 있음.

2. UN 및 주요국 사례

※ 목표설정과 관련한 국제 사회의 이행을 주도하는 UN의 주요 활동과 독일,

EU 등 주요 선진국에 대한 관련 분야 사례를 제시

3. 우리나라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

- UN-SDGs에서 제시하는 극빈층(1일 \$1.25 미만자)은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게 되어, 극빈층 근절의 목표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움
- 소득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등장, 준비되지 못한 노후를 맞이한 노인빈곤층의 증가는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따라 상대빈곤의 해소는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음
 - 아동의 상대 빈곤위험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위험도는 높아지고 있음
 - 심각한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계층의 빈곤도를 감안하여 65세 이상 노인계층의 상대 빈곤 위험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관점을 기대함.
- 낮아진 사회이동성 및 빈곤의 고착화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 동안 취약계층을 장애인, 어린이, 여성, 노인계층 등으로 구분하여 왔는데 행복도지수라는 기준을 추가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표 1>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상대 빈곤위험도의 변화

인구집단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상대적 빈곤위험도	0-17	74.1	73.6	68.4	66.7	63.1	63.8	62.3
	18-25	62.2	62.2	77.6	83.0	65.8	69.1	65.8
	26-40	60.8	54.7	50.0	54.2	53.0	46.7	47.9
	41-50	65.0	68.9	69.1	62.7	63.1	58.6	52.1
	51-65	125.2	116.2	119.1	114.4	122.8	113.8	108.9
	65-75	295.8	291.9	288.2	297.4	301.3	300.0	313.0
빈곤율		0.143	0.148	0.152	0.153	0.149	0.152	0.146

주: 상대적 빈곤위험도는 전체 집단 빈곤율 대비 비율을 의미함.

자료: OECD(2016)."Income distribution",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database). (2016.12.21. 인출); 강신욱 외 (2016: 93) 재인용.

4. 목표 설정

※ 해당 목표를 문장 형태로 제시(몇 개의 안을 제시)

1안)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충분성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한다.

2안) 지난 70년간 산업화와 경제적 물질적 성장발전을 기록한 한국의 경우 정신적 안정과 행복도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봄.

II 세부목표 구성

1. 세부목표

※ 세부목표를 10개 이내로 제시하고, 한 문장 정도의 설명을 붙임

※ 이를 위한 수단이 되는 세부목표는 1.a, 1.b 형태로 번호를 붙여서 작성

예) 1.a 최저생계수단 지급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 확보

1.b 생물다양성보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

1-1. 2030년까지,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노인의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 (필요성) 한국은 지난 경제성장의 결과로 극심한 절대빈곤을 탈피하였으나, 압축적 경제성장 과정의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일부 계층은 경제 성장과 사회안전망의 어느 쪽으로부터도 보상받지 못하고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모든 계층에서 모든 측면에서 빈곤율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이 필요함.
- (목표와의 부합성)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결과가 전체 계층으로 확산되어 전 국민을 빈곤으로 구제할 수 있어야 함. 경제성장이 국민들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저항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의 충원을 이루지 못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게 됨.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체 국민들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하고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함.

1-2.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하여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 (필요성)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거나 노동시장에 참여하여도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으로 인하여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하여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 (목표와의 부합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 비용의 최소화를 통한 사회적 안정과 인적자본의 확충이 필요. 개인과 가족의 재생산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을 보장하고 빈곤으로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목표에 잘 부합됨.

1-3.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기초 공공서비스 및 각종 사회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권리 및 우선적인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 (필요성) 취약계층은 경제적 빈곤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파생되는 다차원적인 제약을 경험하게 되므로, 각종 사회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자격 및 우선적인 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역량의 개발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계발의 기회 등 개인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립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함.
- (목표와의 부합성)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자립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갖추는 것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도 필수적임.

1-4.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극심한 기후현상, 기타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감소한다.

- (필요성) 빈곤층과 취약계층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불평등한 충격을 받게 되며, 다른 집단에 비해서 회복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는 재기할 경제적 능력 뿐 아니라 정서적 동력 또한 약하기 때문임. 따라서 당면한 위험 노출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경험한 위험으로부터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목표와의 부합성) 취약계층의 위험 경험의 과급력은 일반계층에 비해 크기 때문에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1.a. 한국의 중점협력국에게 **모든(?)** 측면의 빈곤 종식을 위한 자원을 **보장(?)**한다.

- (필요성) 정책환경과 개발수요를 바탕으로 국가별 협력전략이 이미 구축된 한국의 중점협력국에게 개발협력 자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 (목표와의 부합성)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빈곤 감소를 위한 노력에 협조할 수 있음

1.b. 아시아 개도국 빈곤층에게 친화적이고 성(性)인지적인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한 투자증대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아시아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견고한 정책들을 설계한다.

- (필요성) 빈곤층에게 친화적이고 성인지적인 정책개발 필요에 있어서, 사회적 소외계층과 여성에 대한 사회인식과 태도,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한국과 문화적 동질성이 큰 아시아 국가 맞춤형 개발전략을 우선적으로 모색한다.
- (목표와의 부합성)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빈곤 감소를 위한 노력에 협조할 수 있음

한국의 남방정책에 따라서 아시아개도국 빈곤층을 선택과 우선적인 집중 지원 대상국으로 함은 타당함.

2. 목표에 대한 세부목표의 포괄성 검토

- ※ 제시된 세부목표(target)가 해당 목표(goal) 달성을 위해 모든 분야를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 지 검토하여 제시

- 빈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소득보장은 현재 빈곤의 고통을 경감시킨다는 의미
 - 서비스보장은 소득보장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욕구를 보충한다는 의미이며, 기회의 보장을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III 세부목표별 현안 진단과 방향 제시

※ 세부목표별로 2-3페이지 정도 개조식으로 작성

1. (1-1) 2030년까지,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노인의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1) 현안 진단

- 한국의 빈곤상황은 인구학적으로 볼 때, 아동빈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노인빈곤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임.
한국 노인빈곤층의 분포를 양질의 일자리부족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층 빈곤문제와 균형잡힌 관점으로 파악할해야 할 것임.
-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정에서 광범위한 불안정 노동자계층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빠지는 근로빈곤의 문제에 취약한 상황임.
- 한국의 경우 아동빈곤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임. 그 이유는 한국의 가구들이 아동빈곤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한 가구가 부양해야 할 아동의 수를 줄이는 저출산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아동빈곤율의 감소보다는 출산율의 제고와 아동빈곤율의 유지가 주요 목표가 적절할 것임.

2) 추진 방향

-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의 증액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소득지원이 필요.
 - 한국은 노인빈곤율 또한 높으므로 소득지원을 통해 노인빈곤율을 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빈곤 노인의 실질적 생활 보장을 위해 보건 의료, 돌봄 등 노인대상 서비스의 확대를 계획할 필요가 있음.
- 불안정 노동자들의 근로빈곤 문제에 대응
 - 한국 불안정 청년노동자의 근로빈곤문제는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1/4 1/3 1/2 2/3 3/4으로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봄.
 - 근로자들의 유휴 시간은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감으로써 미래형 직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청년 미취업자들에 대한 생활보장
 - 한국 청년 미취업자들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연구가 시급함.
 - 한국의 대학진학률, 외국인 근로자수, 기피업종과 직무 및 한국 청년창업 저해요인을 분석하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봄.

2. (1-2)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하여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1) 현안 진단

-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체계의 부족. 국민연금의 미성숙과 한계. 기초연금의 낮은 급여수준 문제.
 - 한국 노인 사회보장체계는 노인층 증가율을 감안하면 복지재정 악화전망과 대응방안 도출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건강보장에 있어서 건강보험의 비급여부문과 본인부담금으로 인하여 공적 건강보장의 범위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음.
 - 한국 노인 건강보험제도는 모범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중장기전망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측면이 강함.
 - 한국 노인성질환의 발생 요인이 본질을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과 나쁜 생활

습관으로 보고 접근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봄.

- 실업자에 대한 보장기간과 보장수준이 낮음.
- 특히 청년 미취업자들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한국 미취업자들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화사회 모델을 벗어나서 4차산업혁명 시대 고용 모델 제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봄.

2) 추진 방향

- 공적 사회지출의 확대
- 한국 산업화시대 이후 저성장시대와 남북한 통일시대를 대비한 마스터플랜 도출과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강화
 -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 생계급여 수준의 인상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강화
- 기초연금의 확충
- 한국 산업화시대 이후를 대비하여 비제조업 특히 문화예술 서비스산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정책 수립이 긴급하다고 봄.
- 건강보험의 비급여 축소와 본인부담금 축소를 통한 공적 건강보장의 범위 확대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과 급여수준 제고
-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3. (1-3)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기초 공공서비스 및 각종 사회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권리 및 우선적인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4. (1-4)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극심한 기후현상, 기타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감소한다.

1) 현안 진단

- 기후변화에 대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2020년부터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게 되는 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할 것으로 합의
 - WHO는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보건 정책이 중요함을 강조
-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적 부담임.
 - 우리는 1994년 사상 최악의 폭염을 경험한 바 있고, 2016년의 폭염은 그 뒤를 잇는 무더위 사태
 - ※ 기상청에 따르면, 1994년과 2016년의 폭염일수는 29.7일과 22.4일을 기록했고,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증가
 - ※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기록적인 폭염 현상이 발생한 2016년 한 해에만 온열질환자 2,125명, 사망자 17명이 발생하여 온열질환 감시체계 작동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
 - 우리나라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건강분야에서만 2011년 기준으로 약 8천9백억 원에서, 2030년에는 27조6천억 원~35조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2) 추진 방향

- 조직의 변화 필요
 - 보건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업무에 중점을 둘 수 있는 조직 구성
 - ※ 영국의 보건 부문 적응 정책은 Public Health England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조직 내에 정부 정책의 근거로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권고하는 부서(Chemical & Environmental Effects Dept) 마련
 - 완화 정책이나 타 분야와의 co-benefit을 창출할 수 있는 중앙부처 간 공식적인 소통 체계 필요
- 보건 분야에서 대응해야 하는 근거와 수요에 기반 한 중점 영역 발굴
 - 정책적 시급성, 중요성, 시행 가능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해, 학계 및 전문가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되 국가가

주도적으로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지원

※ 최근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등)에 따라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기 위한 계획 수립 중

• 적응 대책 수립 절차의 체계화

- 기후는 변화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건강영향은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취약,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지원 필요

※ WHO에서는 질병 감시체계의 대상을 5년마다 재설정할 것을 제안

※ 미국은 CDC가 기후변화 관련 주요 건강 문제를 발표했으나, 지속적으로 여러 연방정부와 전문가가 참여(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보고서 발간

※ 영국은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정책 수립, 정책 평가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관련된 보고서는 순차적으로 발간될 뿐 아니라 앞선 결과를 다음 보고서 작성에 반영하는 체계

IV 목표간 연계

1. 목표간 연계 방안

1) 보건(3번)에서의 보건, 환경성 질병과 연계

- 빈곤 퇴치의 목표가 빈곤 그 자체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빈곤으로부터 파급되는 사회적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빈곤으로부터 발생하는 추가적인 지출, 또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보건 및 환경성 질병 분야에서 제시될 수 있음

2) 성 평등(5번)에서의 여성 고용과 연계

- 저임금의 고착화에 따른 근로빈곤 해소를 위해 가구내 여성고용을 강조하

고 있어, 여성고용의 문제는 여성의 자기개발 외에도 가구단위 빈곤감소의 한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음

2. 타 목표에서 다룰 세부목표 또는 과제

※ 당해 목표나 세부목표에서 다루기 어려우나 타 목표나 세부목표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를 제시

1) #3건강 웰빙과 관련

- 한국인들의 식생활습관을 분석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함으로써 한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적극 대비하여야 함.
- 한국의 흡연, 음주문화와 및 육식 위주 지나치게 높은 단백질 위주 식생활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 산업화 이전 전통 농경사회 음식문화인 집밥과 사찰음식 위주의 채식에 기반 음식문화생활(적게 먹기운동 등)을 적극 권장할 필요성이 있음.

2) #4 양질 교육 관련

- 대학진학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청년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국가적으로 평생 공부하는 평생 직업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임.
- 계속 심화되는 한국 출산율 저하와 노인층 증가로 한국 교육부문 구조변화는 불가피한 실정임.
-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고등교육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며 대학진학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손실을 반드시 회복하여야 할 것임.

3) #8 양질 일자리 증가와 경제성장

- 한국은 지난 65년 간의 북한과의 휴전상태를 끝내고 평화통일시대를 열고자 노력 중임.
- 한국은 남북평화통일을 실현할 경우 다시 경제적으로 고성장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임.
-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세대들로 하여금 남북 통일시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3) #17 지구촌 협력, 파트너십

- 한국 청년세대들이 동남아와 중앙아 기타 전세계 개발 도상 국가들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 살 수 있는 시대를 맞고 있음.
- 이들이 취업이나 현지 창업 또는 세계시민으로 이주한 노마드(Nomad, 유목민) 세대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성과 가치가 충분하다고 봄.
- 다가오는 시대는 이기적 소유경제사회가 아닌 이타적 공유경제사회로 진전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역량을 지구촌 협력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봄.

V 지표 작성// 개별 꼭지별로 작성

1. 상대빈곤율

○ 상대빈곤율(전체, 연령집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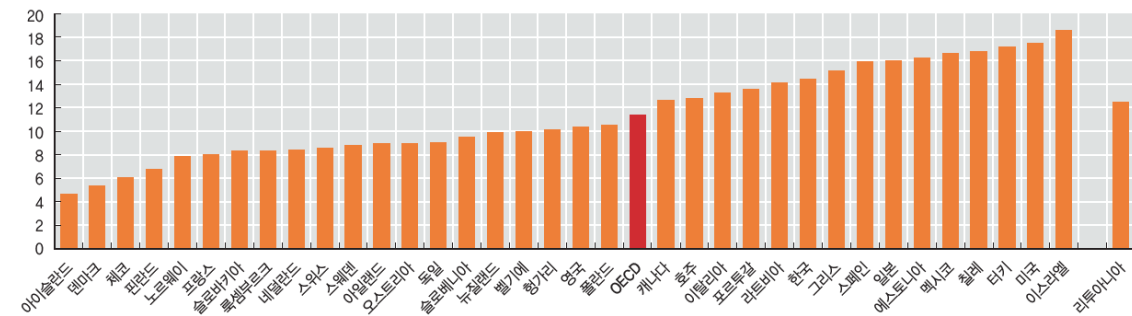
<표> 한국의 빈곤율 추이

(단위: %)

소득(지출) 범주 연도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2006	16.1	13.4	7.7
2007	16.7	14.1	8.1
2008	16.7	14.2	7.9
2009	17.3	14.1	9.0
2010	17.0	13.8	8.4
2011	17.0	13.8	8.6
2012	16.3	13.7	7.9
2013	16.7	13.4	8.3
2014	16.7	13.3	9.4
2015	17.3	12.8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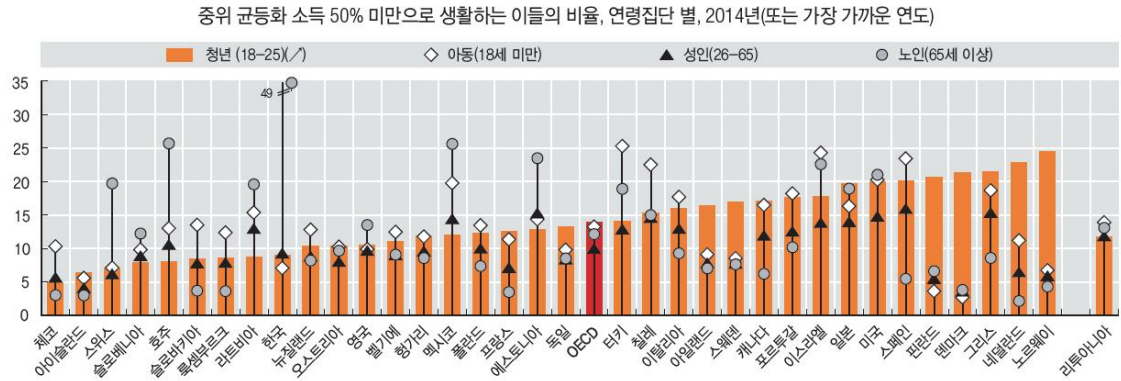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05.25).

<그림> OECD국가들의 상대빈곤율(중위 균등화 가처분 소득의 50% 미만 가구에 사는 비율)



자료: OECD(2016). 2016 한눈에 보는 사회. p.111.

<그림 > OECD국가들의 연령집단별 빈곤율(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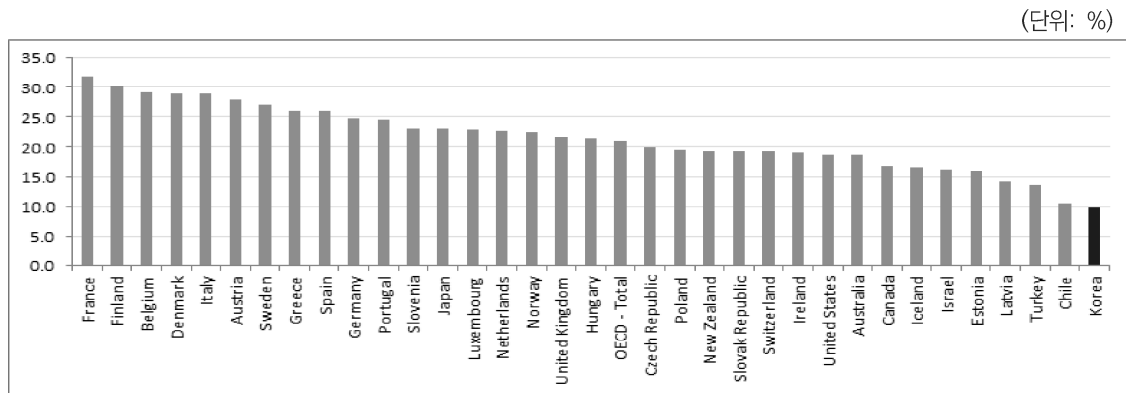


출처: Provisional data from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http://oe.cd/idd>).
 자료: OECD(2016). 2016 한눈에 보는 사회. p.111.

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3.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의 비중

<그림> OECD 국가들의 공적 사회지출의 GDP 대비 비중



주: 일본은 2013년의 수치임.

자료: OECD 홈페이지.

○ 노령 및 유족 급여에 대한 공적지출의 GDP 대비 비중

<표 > OECD국가들의 노령 및 유족 급여에 대한 공적 지출

	Public expenditure on cash benefits for old-age and survivors									Total Inc. non-cash (% of GDP)
	Level (% of GDP)					Change (%)	Level (% of total government spending)		Level in net terms (% of GDP)	
	1990	2000	2005	2010	2013		2000	2013		
Australia	3.1	4.7	3.7	3.8	4.3	-8.5	12.9	11.7	4.3	5.2
Austria	11.3	12.0	12.0	13.1	13.4	11.7	23.8	26.2	11.4	14.0
Belgium	8.9	8.7	8.8	9.7	10.2	17.5	17.7	18.3	10.2	10.5
Canada	4.2	4.2	4.0	4.3	4.6	9.1	10.3	11.1	4.3	4.6
Chile		5.0	3.7	3.4	3.0	-40.6			2.9	3.0
Czech Republic	5.6	6.9	6.7	8.1	8.7	26.0	17.1	20.4	8.7	8.9
Denmark	6.1	6.3	6.5	7.2	8.0	26.3	12.0	14.1	5.8	10.1
Estonia		6.0	5.3	7.6	6.4	6.9	16.5	16.8	6.3	6.5
Finland	7.2	7.4	8.1	9.8	11.1	49.7	15.5	19.3	9.2	12.3
France	10.4	11.4	12.0	13.2	13.8	21.1	22.4	24.3	12.6	14.3
Germany	9.5	10.8	11.1	10.6	10.1	-6.5	24.2	22.7	9.7	10.1
Greece	9.5	10.4	11.4	13.3	17.4	67.6	22.3	31.5	16.2	17.5
Hungary		7.5	8.4	9.6	10.3	38.0	15.8	20.8	10.3	10.8
Iceland	2.2	2.1	1.9	1.6	2.0	-3.1	5.1	4.6	2.0	2.5
Ireland	4.8	2.9	3.2	4.9	4.9	68.8	9.5	12.5	4.5	5.4
Israel		4.6	4.8	4.8	4.9	6.5	9.6	11.9	4.9	5.5
Italy	11.3	13.5	13.6	15.3	16.3	20.9	29.6	31.9	14.0	16.4
Japan	4.8	7.3	8.5	10.0	10.2	40.5	18.9	24.2	9.7	12.1
Korea	0.7	1.3	1.4	2.0	2.6	99.3	5.3	8.2	2.6	2.7
Latvia	0.0	8.7	5.5	9.3	7.5	-13.7	23.2	20.3	7.2	7.7
Luxembourg	7.7	7.1	7.9	8.1	8.5	20.1	19.5	19.7	7.5	8.5
Mexico	0.4	0.8	1.2	1.8	2.3	175.4		8.9	2.3	0.2
Netherlands	6.3	4.7	4.7	5.0	5.4	16.1	11.2	11.7	4.9	6.4
New Zealand	7.2	4.9	4.2	4.6	5.1	4.0	14.3	14.3	4.4	5.1
Norway	5.5	4.7	4.8	5.2	5.8	23.6	11.2	13.2	4.7	7.9
Poland	5.0	10.5	11.3	11.1	10.3	-1.6	24.9	24.2	9.3	10.4
Portugal	4.8	7.8	10.0	12.0	14.0	78.4	18.3	27.9	13.0	14.0
Slovak Republic		6.3	6.1	6.8	7.2	15.0	12.0	17.5	7.2	7.5
Slovenia		10.3	9.7	11.0	11.8	14.3	22.4	19.6	11.8	12.0
Spain	7.7	8.4	7.9	9.8	11.4	35.6	21.5	25.3	10.9	12.0
Sweden	7.3	6.9	7.2	7.3	7.7	11.8	12.8	14.7	6.0	10.0
Switzerland	5.2	6.0	6.2	6.1	6.4	5.9	17.6	18.7	5.2	6.6
Turkey	2.4	4.9	6.0	7.7	8.1	66.4			8.1	8.3
United Kingdom	4.5	5.1	5.3	6.1	6.1	20.9	13.3	13.8	5.9	6.6
United States	5.8	5.6	5.7	6.6	7.0	24.6	16.7	18.4	6.5	7.0
OECD	5.8	6.7	6.8	7.7	8.2	21.8	16.5	18.1	7.6	8.6

Note: See Adema, W. and M. Ludaique (2009), "How Expensive is the Welfare State? Gross and Net Indicators in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92,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220615515052> for more details on the data, sources and method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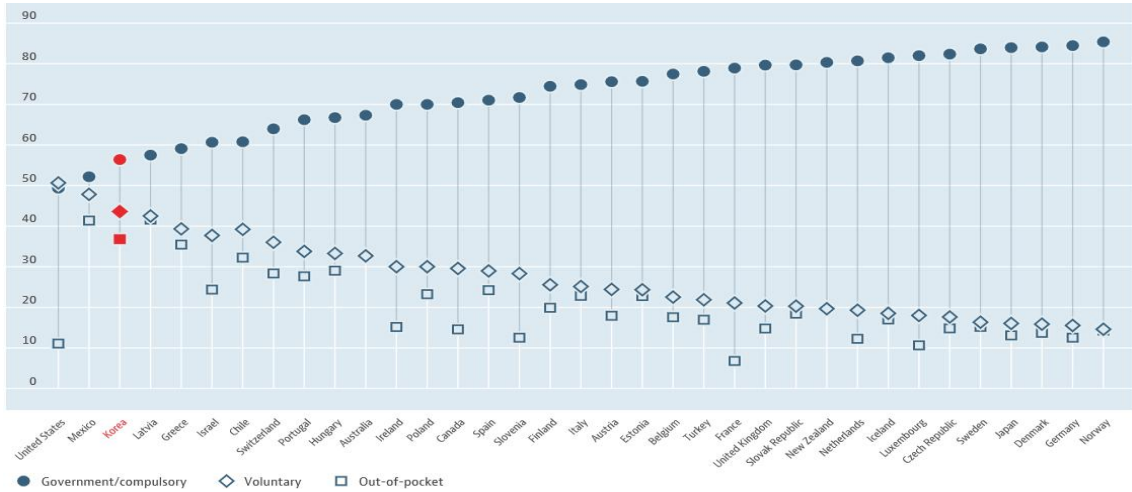
Source: OECD Social Expenditures Database (SOCX);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Database.

자료: 2017 Pensions at a Glance. p. 143. 원출처: OECD SOCX data.

○ 보건의료비지출 중 공적의료비 지출의 비중

- 한국의 공적의료비 지출의 비중은 56.4%로 낮고, 민간지출이 43.6% 높고 특히 본인부담이 36.8%로 높음.

<그림 > OECD국가들의 보건의료비지출 부담의 구성(공적/민간/본인부담)



4. 기초연금 및 최저연금의 급여수준

<표 > 기초연금 및 최저연금의 급여수준

	Relative benefit value (% of AW earnings)			Absolute value (units of national currency per year)			Recipients, 2016 (% of over 65s receiving)		
	Basic	Minimum	Social assistance	Basic	Minimum	Social assistance	Safety-net	Minimum	
Australia	27.6	x	x	22 677	x	x	76	x	
Austria	x	x	27.8	x	x	12 359	10	x	
Belgium	x	30.1	27.1	x	14 025	12 631	7	31	
Canada	13.5	x	19.2	8 879	x	9 833	33	x	
Chile	14.0	x	x	1 122 516	x	x	60	x	
Czech Republic	9.9	11.7	12.4	29 290	38 520	40 920	-	-	
Denmark	17.6	x	18.6	72 756	x	76 788	81	x	
Estonia	14.7	x	14.7	2 009	x	2 000	6	x	
Ireland	17.4	x	21.0	7 612	x	9 292	40.6	x	
France	x	21.7	25.3	x	8 256	9 610	4	49	
Germany	x	x	20.1	x	x	9 586	3.1	x	
Greece	23.0	x	x	4 608	x	x	19	x	
Hungary	x	10.3	8.3	x	342 000	273 600	0.39	0.61	
Iceland	5.7	x	17.9	478 344	x	1 509 516	-	x	
Ireland	34.1	x	32.4	12 132	x	11 544	17	x	
Israel	12.9	x	23.5	18 368	x	33 426	25	x	
Italy	x	21.3	19.0	x	6 525	5 825	5	32	
Japan	15.3	x	19.0	780 100	x	970 380	3	x	
Korea	x	x	5.5	x	x	2 400 000	67	x	
Latvia	x	x	7.6	x	x	783	-	-	
Luxembourg	9.8	36.7	26.8	5 496	20 652	16 176	1	29	
Mexico	x	29.4	6.2	x	33 180	6 960	60	x	
Netherlands	26.3	x	x	13 352	x	x	x	x	
New Zealand	40.0	x	x	23 050	x	x	x	x	
Norway	32.5	x	x	183 480	x	x	18	x	
Poland	x	22.2	15.2	x	10 591	7 248	12	-	
Portugal	x	30.4	17.6	x	5 328	3 079	2	36	
Slovak Republic	x	40.7	19.8	x	4 446	2 166	1	7	
Slovenia	x	13.2	17.4	x	2 418	3 183	17	2	
Spain	x	33.3	19.3	x	8 905	5 151	6	25	
Sweden	22.3	x	x	94 359	x	x	35	x	
Switzerland	x	16.5	22.6	x	14 100	19 290	12	-	
Turkey	x	41.2	7.1	x	15 181	2 607	22	-	
United Kingdom	22.2	x	x	6 122	x	x	14	x	
United States	x	x	16.7	x	x	8 796	4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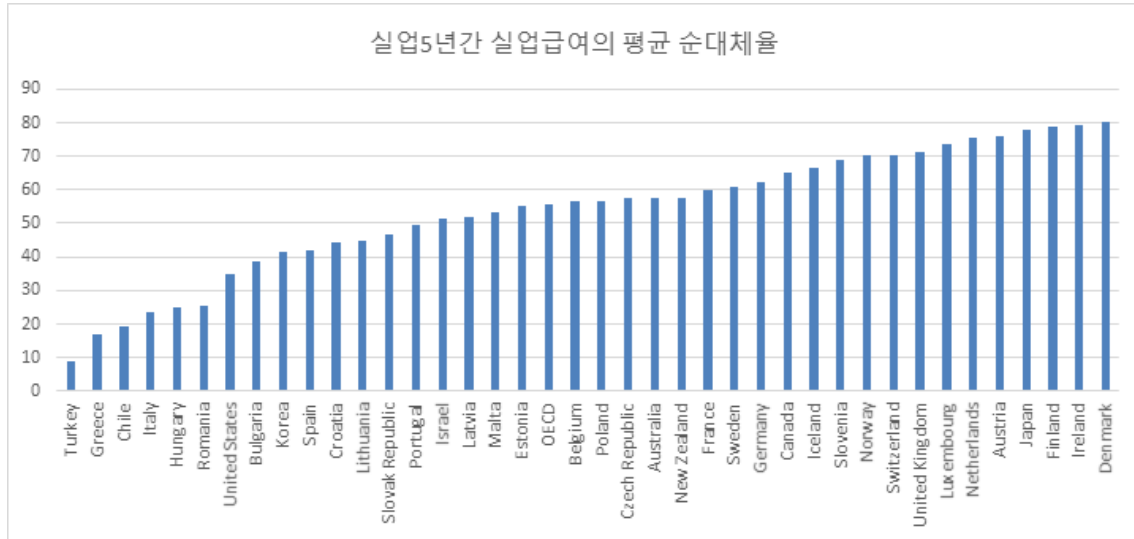
Note: - = Data are not available. x = Not applicable. Recipients' data is 2012 for Estonia, France (Safety-net), Greece, Ireland, Israel, Italy, Korea, Luxembourg, Poland, Slovenia and Turkey.

자료: OECD(2017). 2017 Pensions at a Glance. p. 89.

5. 실업급여 순대체율

- 실업 5년간의 평균 실업급여의 이전 순소득의 순대체율
- 1인 소득자(Average Wage) 부부 + 두자녀(6세, 4세)
- 주거급여 및 사회부조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

<그림 > OECD국가들의 실업 5년간 실업급여의 평균 순대체율



6. 하절기 온열질환자수

1) 정의

- 하절기(5~9월) 온열질환(열사병,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열부종 등)으로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수
- 단위: 명

2) 목적 또는 의의

- 온열질환은 고온에 노출되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기후변화 중 기온의 증가로 인한 건강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 온열질환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인구집단과 기절질환자, 야외노동자 등 기후변화에 민감한 인구집단에서의 발생위험이 높음.

3) 산정방법 및 출처

-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이용하여, 온열질환 감시체계 전산시스템으로 신고된 환자수
- 출처: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감시체계

4) 최근 5년간 추세

- 폭염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고된 온열질환자수도 증가해 왔으며, 극심한 폭염이 발생했던 2016년 온열질환자수는 2,215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함.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폭염일수(일)	15.0	18.5	7.4	10.1	22.4
온열질환자수(명)	984	1,189	556	1,056	2,125

5) 비교지표

- 비교지표 없음

6) 시사점

- 폭염일수의 변화와 폭염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건강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음.
- 폭염의 노출 정도와 개인의 취약성에 따라 건강영향은 다르게 나타나므로, 지역별, 취약 및 민감계층별 건강위험을 평가하여 적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7. 자연재해별 사망 및 상해

1) 정의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황사 등으로 인한 사망, 실종, 부상자수, 이재민수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미세먼지가 자연재해로 추

가될 예정

- 단위: 명

2) 목적 또는 의의

- 기후변화로 빈도와 강도가 심각해질 수 있는 자연재해로 인해 사회 인프라 및 환경 이외에 인간에게 미치는 피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 지역별 자연재해 현황과 피해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자연재해의 위험 지역과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적응대책 지원을 강화함.

3) 산정방법 및 출처

- 자연재해별, 기간별, 지역별(시도별) 사망자수, 실종자수, 부상자수, 이재민수
- 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4) 최근 5년간 추세

- 자연재해별, 시기별, 지역별 집계가 방대하므로, 연도별 추세는 추후 재작성

연도	2016.01. 17.~201 6.01.25 대설	2016.05. 02.~201 6.05.05. 호우			
	이재민수(명)	7	35		
사망(명)	0	1			
실종(명)	0	0			
부상(명)	0	1			

5) 비교지표

- 비교지표 없음

6) 시사점

1. 중점협력국 GDP 대비 공공사회보장지출, 공공보건·공공부조 지출 비율

1) 정의

- 각국 GDP 대비 공공사회보장지출(public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공보보건지출(public health care), 공공부조지출(social assistance) 비율
- 단위: %

2) 목적 또는 의의

- 정부의 건강보장을 위한 보건분야 지출과 빈곤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인 공공부조지출은 정부가 삶의 필수적인 영역인 보건과 생계의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직접 할당하는 자원이므로 전체 경제규모(GDP) 대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배분 비율은 저개발국의 빈곤 종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지표
- 전체 사회보장지출 비율은 직접적인 빈곤감소 프로그램을 포함한 전체 사회적 보호 및 사회안전망에 할당되는 자원 규모를 가늠하는 보조적 지표로 분야별 지출보다 장기적인 추이 파악이 용이함.

3) 산정방법 및 출처

- 공공사회보장지출, 보건·공공부조 프로그램 총예산 ÷ GDP
- 출처: ILO Social Protection Report 2014-15 Social security expenditure 또는 ADB, EC, IMF, OECD, UN ECLAC, WHO 등 국별 원출처 활용

2. 중점협력국 하루 수입 1.25달러 미만, 1.9달러 미만 빈곤층 비율

3. 중점협력국 국가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15 기아 종식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1. 목표

1) 목표의 필요성과 의의

- 지속가능한 축산 및 동물 복지의 필요성

2) 현황과 쟁점

- 공장식축산에서 동물복지농장으로의 생산방식 변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임.
- 국내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편적 동물복지형 축산의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2. 세부목표

1) 세부목표(안)에 대한 입장

없음

2) 수정, 보완, 추가해야 할 세부목표 제안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보편적 동물복지형 축산의 도입 및 확대

- 최근 구제역·AI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이 호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또는 예방적 살처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축산 농민에게 경제적 손해와 심리적 상실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고통을 야기하고 있으며, 국민의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고 있음. 이러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은 배터리 케이지(battery cage) 사용을 통한 밀집 사육, 이른바 ‘공장식

축산'이라는 가축의 생산 방식과 밀접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2017년 발생한 '살충제 달걀 파동' 사건은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하기도 하였음. 산란계 닭을 A4 용지보다 작은 크기의 배터리 케이지에서 사육한 결과 진드기가 번식하게 되자, 농민들이 인체에 치명적인 피프로닐 성분 살충제를 사용한 것임. 사건 발생 당시 살충제가 뿌려진 닭은 결국 살처분됨.

- 이와 같이 공장식 축산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동물복지를 저해하며, 공중의 보건 문제를 야기하는 생산방식으로, 유럽연합은 이미 2003년부터 배터리 케이지 신규 설치를 금지하였고, 2012년부터 배터리 케이지 사육 자체를 금지한 바 있음. 이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보편적 동물복지형 축산의 도입 및 확대'를 세부목표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함.

3. 지표

1) 지표(안)에 대한 입장

없음

2) 수정, 보완, 추가해야 할 지표 제안

- 동물보호법상 동물복지농장의 운영 실태, 보편적 동물복지 농장의 도입 및 확대 여부, 정부의 보편적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예산비율 평가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초안에 대한 산업계그룹 입장보고서

1. 총평

1) K-SDGs 이행과정에서의 산업계 역할

- 산업계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체 중의 하나로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K-SDGs)의 수립을 통해 곧 다가올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높이고 2030년까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발전을 구현하고자 하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지지함
- 저성장과 급격한 노동대체 기술의 발전, 자원·에너지시장의 가변성 등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오늘날의 경영환경에서, K-SDGs 체계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용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K-SDGs는 대내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책임 스탠더드를 준수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산업계는 기술혁신과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발휘하여 자원 효율성 및 지속가능한 경제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협력사-지역공동체 등 기업 주요 이해관계자와 함께 미래지향적 환경·사회가치를 견인함으로써 K-SDGs 달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2) K-SDGs 수립 방향성에 대한 산업계 기본입장

- 산업계그룹이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체계』 초안을 검토한 결과, K-SDGs 민·관·학 작업반이 초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UN

SDGs와의 정합성(alignment)을 고려하되 국내 상황에 맞는 특색을 반영하고자 많은 고민의 흔적을 보였다고 평가됨

- 특히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평적으로 수렴 및 통합하는 consensus-building 절차를 중시하고, 지속가능발전 이슈들의 다분야적(cross-cutting) 특성을 감안하여 이슈별 연계성 강화를 위한 Nexus Approach를 통해 향후 K-SDGs의 효과적 이행을 제고하고자 시도한 점을 높이 평가함

○ 산업계그룹은 K-SDGs 체계가 아래의 원칙과 방향성에 기반하여 수립될 것을 제안함

○ **첫째, 기존 법률 및 정부의 국정과제와의 정합성**

- K-SDGs 각 항목들이 기존 법률과 정부의 정책과제와 연계하여 수립된다면 더 큰 추진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의 정비에 도움이 될 것임

- 일례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책임 강화'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산업발전법 내 지속가능경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 등 관련법과의 논조를 같이 하여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K-SDGs의 산업계 관련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이행 및 관리하는데 있어 중요함

○ **둘째,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정량화된 지표 설정**

- 지표 설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정량 목표 위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외적으로도 공개될 수 있는 수치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함

※ Ex) 관리되지 않는 데이터 혹은 기업 영업기밀 데이터 지양

- 지표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 이를 관리하기 위해 과도한 행정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함

※ Ex)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 국가 상위 목표가 존재하여 이미 해당주체가 상위 지표에 따른 이행의무를 갖고 있을 경우,

K-SDGs 내 관련목표에 대한 既 수립된 상위 지표를 적용하고 추가
적 하위 지표 설정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산업계의 지속가능발전 기술혁신 신규투자 및 국가 미래 성장엔진
신산업을 촉진할 규제개혁 및 지원책
 - 유엔 SDGs가 제도개혁 등 구조변화 혁신을 강조하고 있듯이, 산업계의
지속가능발전 비즈니스 솔루션 및 혁신기술이 시장에 안착하여 사회 전
분야에 Scale-up되기 위해서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구조적 장애 해소 및
제도적·규제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함
 - 향후 K-SDGs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산업계의 신규투자 및 비즈니스 해법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제 환경 조성
및 지원책 마련이 비중 있게 검토될 것을 제안함

2.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

SDG 2. 기아 종식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2-d. (세부목표) 적정량의 재료 사용과 균형잡힌 식단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

현황 및 문제점

- 목표와 세부목표 항목(음식물쓰레기 감축) 간 연관성이 낮음

개선 의견

- 세부목표 중 '음식물 쓰레기 감축' 관련 내용은 SDG 12-3 (식품 손실, 식품 폐기물)으로 이동

(세부목표 추가) 농가의 동물복지 개선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살충제 계란, AI,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먹거리 안전과 동물의 권리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
- 살충제 주사, 학대, 수면권 박탈 등 동물복지 및 안전한 식량을 위협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농업을 개선할 세부목표 및 지표 설정 필요

개선 의견

- ‘농가의 동물복지 개선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보급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세부목표 추가
- 추가된 세부목표를 측정할 하기 지표 추가
 - 동물복지 인증 농장 수, 동물복지 인증 제품 비율
 - ※ 육계의 경우 1m²당 19마리 이하의 공간에서 매일 최소 6시간 이상 소등으로 수면권을 보장한 농가에 한해 인증 조건 확보

SDG 3.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한 삶과 웰빙 보장

3-1. (세부목표)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의 확대

(지표) 30-70세 사이에서 심혈관질환, 암, 당뇨병,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 사망률; 자살률(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되는 인구의 비율, 재난적인 의료비 자부담으로부터 보호받는 가구의 비율

현황 및 문제점

- 세부목표(만성질환, 건강보장)와 지표(자살률) 연관성 모호

개선 의견

- 지표 중 ‘자살률’ 삭제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라도 인과관계 불명확

3-4. (세부목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표) 결핵발생률(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B형간염 양성률

□ 현황 및 문제점

- 지표로 특정된 결핵, 간염 이외 신종 전염성 질환(ex. 고령화, 기후 변화 등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 에이즈,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 등 추가적 지표 관리 필요

□ 개선 의견

- 지표에 '비감염인구 ○○당 에이즈 감염자(HIV/AIDS)의 수', 기타 신종 전염성 질환 감염자의 수,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 감염자의 수 등 추가

3-6. (세부목표) 아동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

(지표) 영아사망률, 5세이하 유아 사망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가정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및 관리가 필요
- 입시스트레스 및 학교폭력 등에 따른 청소년 신체/정신적 건강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및 체계적인 관리 지표 필요

□ 개선 의견

- 세부목표를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폭력 근절'로 수정
- 지표에 '아동학대', '가정/학교폭력 비율' 추가
※ 청소년 자살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결과,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2017,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SDG 4. 교육

4.4. (세부목표) 직업교육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계층의 수요자들에게 양적, 질적으로 적합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취업과 창업 등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가진 청소년, 성인 등(구직자 및 재직자 포함) 비중을 높인다

(지표)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수, ICT 산업·직종 종사자 수

현황 및 문제점

○ 지표를 보다 구체화하여 목표와 지표 간 연관성 제고 필요

개선 의견

○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수 : 연령별, 성별 세분화

○ ICT 산업·직종 종사자 수 : 산업·직종별 세분화

4.5. (세부목표)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지표) 모든 교육 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 산출

현황 및 문제점

○ 평등한 접근권의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관리 실적 측정 필요

개선 의견

○ 지표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훈련 실적' 추가

4-7. (세부목표) 세계시민교육의 증진 및 확산

(지표) 세계시민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교육과정, (c)교사교육, 그리고 (d)학생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의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

현황 및 문제점

○ 지표 중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 정의 모호

개선 의견

○ 지표 중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에 대한 구체화 필요
-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계 수' 등 정량화 가능한 표현으로 대체

4-a, 4-b, 4-c.

현황 및 문제점

○ 4-a, 4-b, 4-c 각 세부목표가 '직업교육'에 국한되어 있으며, 교육의 목표를 경제활동에 제한하고 있어 폭넓은 적용이 필요

개선 의견

○ 세부목표 4-a, 4-b, 4-c의 '직업교육훈련'을 '교육'으로 변경

SDG 5. 양성평등

5-2. (세부목표)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지표) 지난 1년간 부부폭력비율,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현황 및 문제점

- 설정된 지표가 피해 여성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여아에 대한 범죄비율 지표 추가 필요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내 성범죄 신고율을 지표로 추가 검토 필요

개선 의견

- 지표에 ‘(여)아동 대상 성범죄 비율’ 추가
- 지표에 ‘사내 성범죄 신고건수 (혹은) 신고조사 조치건수/조치비율(%), 남,녀구분’ 추가

5-4. (세부목표)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 및 가치 부여
(지표)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성별, 연령별, 장소별 비율; 육아휴직사용 성비

현황 및 문제점

- 지표 중 하나인 ‘육아휴직사용 성비’만으로는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 지표로 부족

개선 의견

○ 지표에 ‘육아휴직 사용자’, ‘육아휴직 후 복직률(남여 구분)’ 추가

5-5. (세부목표) 정치·경제·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 보장

- 1) 여성의 성적 주체성 확립을 위한 성인지적 성교육 강화
 - 2) 계획 임신과 안전한 성생활을 위한 피임 및 관련 상담과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 3)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의료적 접근 강화를 통한 여성의 건강권 보장
 - 4)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개선
 - 5)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점검 실시
 - 6) 성과 재생산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견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
- (지표)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공공부문 여성 관리직 비율, 기업 여성 관리자 비율, 학교 성교육 만족도, 성적 자기결정권, 피임 실천, 미혼자의 성관계 경험, 성건강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 현황 및 문제점

- 세부목표 중 1)~6)은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 보장’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수립해야 할 이행과제에 더 적합
- 지표 중 일부(학교 성교육 만족도, 성적 자기결정권, 피임 실천, 미혼자의 성관계 경험, 성건강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경험)는 목표와 연관성이 부족

□ 개선 의견

- 세부목표 중 1)~6) 삭제
 - 1)~6)은 향후 이행과제 수립시 검토
- 지표 중 ‘학교 성교육 만족도, 성적 자기결정권, 피임 실천, 미혼자의 성관계 경험, 성건강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삭제

5-a. (세부목표)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 및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제, 금융서비스, 유산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

(지표) **(a) 농지에 대한 소유 및 소유권을 보장받는 전체 농업인구 비율(성별 분리); (b) 총 토지소유자 중 여성 토지소유자(토지권 종류별); (관습법을 포함한) 법적근거를 통해 여성의 토지소유 또는 통제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수**

□ 현황 및 문제점

- 설정된 지표에 토지에 대한 지표만 있고, 그 외 자산/자원에 대한 소유 및 접근성을 평가할 지표가 없음

□ 개선 의견

- 지표에 ‘주택 등 자산 평가’ 추가

5-b. (세부목표)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진

(지표) 휴대폰 보유율(성별 및 연령), 여학생 이공계 진학률, 이공계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의 경우, 휴대폰 보유율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여성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지표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변별력 부족)

□ 개선 의견

- 지표 중 '휴대폰 보유율(성별 및 연령)' 삭제
-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진에 대한 여성 권한 강화 차원에서 현실성에 더 맞는 '데이터 이용추이'(성별 및 연령별) 지표로의 대체 검토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

6-2. (세부목표) 2030년까지,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필요에 주목하면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양질의 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한다

(지표) 농어촌 공공 하수도 보급률, 개인하수도 공공관리 비율, 하수 악취저감률

□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산간, 해안 지역에 식수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취약지역의 물 고갈을 고려하여, 취약지역 내 용수 사용 원단위 (Water intensity) 지표 추가 검토

□ 개선 의견

- 세부목표 내 '식수 접근성' 추가
- 지표에 '식수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의 인구비율' 추가
- 지표에 '취약지역 내 용수 사용 원단위(Water intensity)' 추가

6-3. (세부목표) 2030년까지 물순환 개선 및 물 재이용 활성화, 오염 감소,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방류 최소화를 통해 수질 대폭 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제고한다

(지표)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상수원 수질 좋음(I) 등급(BOD, 총 인 기준) 달성 비율, 전국 수체의 수생태계 건강성 양호(B) 등급 비율, 국민 물환경 체감 만족도 달성률

□ 현황 및 문제점

-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생태계 건강성 제고를 위반 시,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오염자 처벌 강화 필요

□ 개선 의견

- 세부목표 혹은 향후 이행과제 수립 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 추가

6-a. (세부목표) 2030년까지 집수, 담수화, 용수효율, 폐수 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물 및 위생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협력과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지표) 정부 주도의 지출 계획의 일부인 물 및 위생 관련 공적개발 원조 금액

현황 및 문제점

- 지표 내 ‘공적개발원조 금액’에 수자원개발이나 담수 등 사업과 기술적 지원도 포함시켜 국제협력 범위 확대 필요

개선 의견

- 지표 내 물 및 위생으로 한정되어 있는 공적개발원조 금액에 ‘수자원개발이나 담수 등 사업과 기술적 지원’도 포함

SDG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7-3. (세부목표)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증대

(지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1차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최종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현황 및 문제점

- ‘재생에너지 3020’과의 통일성 필요

개선 의견

- 지표 중 ‘1차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최종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삭제

(목표 7 전반)

추가 검토 필요

- 재생에너지 외 신에너지(수소,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등)에 대한 고려 여부 검토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8-4. (세부목표) 자원효율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파괴 비동조화

(지표) 물질 발자국, 국내 물질 소비량

현황 및 문제점

- 세부목표 중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파괴 비동조화’라는 문구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용어임

개선 의견

- 세부목표 중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파괴 비동조화’문구를 UN SDGs와 유사하게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 억제’ 등으로 수정 검토

8-5. (세부목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동일노동-동일임금 달성

(지표) 비농업부문에서의 비공식 성별 취업 비율, 남녀별 평균임금과 실업률

현황 및 문제점

- 세부목표 ‘동일노동-동일임금’ 달성을 위한 지표로 ‘남녀별 평균임금과 실업률’은 부족하므로 지표의 현실화 필요

□ 개선 의견

○ 지표에 '비정규직, 정규직 비율' 추가

8-8. (세부목표)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 증진

(지표) 산업재해 발생 비율(성별 및 이주신분별)

□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환경을 측정할 지표인 산업재해 발생 비율을 성별 및 이주신분별로 구분해야 하는 필요성 낮음
- 사후적인 산업재해 발생 외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안전관리교육 이수율' 등 추가 검토

□ 개선 의견

- 지표 내용 중 '성별 및 이주신분별' 구분을 '고용형태' 혹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발생 비율로 대체
- 지표에 '안전관리교육 이수율' 추가

(목표 8 전반)

□ 추가 검토 필요

-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통한 포용적 경제성장에 대한 고려가 목표 8에 미반영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공유제 확산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공유제 참여율 등의 검토 필요
- 청년 일자리 외 타 취약계층(ex.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 일자리, 여성

고용률)에 대한 고려가 목표 8에 상대적으로 미흡

SDG 9. 산업 · 혁신 · 인프라

9-1. (세부목표) 다수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고, 경제성장과 인간의 복리를 지원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표) 고속도로 접근성, 가구당 소비 중 교통 이용 소비 비중,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현황 및 문제점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공유제 확산노력 평가 필요

9-5. (세부목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활동과 기술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고 안전한 기술과 산업화 추구

(지표)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현황 및 문제점

- 지표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SDG 13(기후변화)에서 관리되어야 할 지표이며, 세부목표 9-5에서 주 목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자원 효율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낮음

개선 의견

- 지표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부가가치 단위당 폐기물 발생량’, ‘부가가치 단위당 물 사용량’으로 대체

SDG 10. 불평등 완화

10-2. (세부목표) 2030년까지 나이, 성별, 장애여부 혹은 여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을 강화 증진한다
(지표) 소득격차비율(또는 빈곤격차비율), 소득 5분위 배율, 인구집단별(성, 연령대, 장애유무 등) 빈곤율

현황 및 문제점

-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 및 이주자를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지원을 통해 소수자들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평등 달성

개선 의견

- 지표 '인구집단별 빈곤율'을 성, 연령대, 장애유무로 구분하는 것 외에 '다문화 가정, 이주자'구분 추가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 · 공동체

11-3. (세부목표) 2030년까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확대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지속가능한 계획과 관리 역량을 강화
(지표) 시가화지역 충진율(%), 시민참여 도시계획사업 예산율(%)

현황 및 문제점

- 저소득층 원주민의 주거/상업권을 위협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으로 도시·공동체 보존의 기틀 마련 필요

- 지표 중 ‘시가화지역 충진율(%)’은 부적절
 - 도시밀집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작용 초래 가능하므로 도시재생과 시민참여형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의 육성과 관련 있는 지표 추가 필요

□ 개선 의견

- 세부목표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활동’ 추가
- 지표 중 ‘시가화지역 충진율(%)’을 삭제하고, 도시재생과 시민참여형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의 육성과 관련 있는 지표로 대체

SDG 12. 지속가능한 생산 · 소비

12-4. (세부목표)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한 인간의 건강보호와 환경오염 예방

(지표) 화학물질 관련 국제환경협약 참여 당사자 수와 유해폐기물 발생량

□ 현황 및 문제점

- 지표인 ‘화학물질 관련 국제환경협약 참여 당사자 수’와 세부목표 간 정합성 모호

□ 개선 의견

- 지표 중 ‘화학물질 관련 국제환경협약 참여 당사자 수’를 ‘국가 화학물질 등록비율(물량기준)’, ‘국가 화학물질 등록 기업 수’로 대체

12-6. (세부목표) 지속가능경영 활동 노력과 성과 및 계획을 투명하게 보고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수 파악 및 발간 기업 확대

(지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수

□ 현황 및 문제점

- 지표인 발간 기업수 외에 정기적으로 발간 여부 또한 확인 필요

□ 개선 의견

- 지표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수 외에 정기적으로 발간 여부 또한 확인 필요

SDG 13. 기후변화

13-1. (세부목표) 국내 모든 곳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예상되는 자연재해에 대해 위험수준(critical level)을 이상으로 회복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지표) 지역 기반의 상대적 연평균 인명피해, 재해피해액, 피해 복구액

□ 현황 및 문제점

- 세부목표 중 위험수준(critical level)은 정의와 측정 또는 예측의 어

려움과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며, UN SDGs에서는 ‘Resilience and adaptive capacity to climate-related hazards and natural disasters’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

□ 개선 의견

○ 세부목표 ‘자연재해에 대해 위험수준(critical level)을 이상으로 회복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를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로 수정

13-2. (세부목표)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국가 및 지방 정책, 전략, 계획에 통합한다

(지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비율/탄소포인트 지급액; 자연재해 피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비율/이행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기후변화 대응 총예산(예산비율); 민간기업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건수 및 이행실적

□ 현황 및 문제점

- 파리협정을 통해 제출한 국가기여방안(NDC)에 명시된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에서의 약속이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관련 내용의 지표 추가 필요
- 지표 ‘민간기업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건수 및 이행실적’은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 민간기업 수’로 현실화 필요
 - ‘민간기업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건수 및 이행실적’은 더 상위 지표인 13-3 ‘기업 온실가스 감축 참여’ 지표 혹은 최종지표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으로 대체 가능

- 지표 ‘자연재해 피해’는 세부목표 13-1의 ‘재해피해액’ 지표와 중복되므로 삭제 요함

□ 개선 의견

- 지표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가
- ‘민간기업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 건수 및 이행실적’은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 민간기업 수’로 수정
 - (혹은) 더 상위지표인 13-3 ‘기업 온실가스 감축 참여’ 지표나 최종지표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으로 대체
- 지표 ‘자연재해 피해’ 삭제

13-3. (세부목표)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을 고취하고 저탄소생활을 확산한다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관련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업 참여를 독려한다

(지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고취와 저탄소 생활 확산, 기후변화 완화 및 감축 교육, 기업 온실가스 감축 참여

□ 현황 및 문제점

- 세부목표 중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기업 참여를 독려한다’와 관련 지표 ‘기업 온실가스 감축 참여’는 상기의 13-2에서 ‘기업 온실가스 감축 참여’ 혹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지표로 대체할 것을 이미 제안한 바, 13-3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신, 기업만이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가 아니므로, 기업, 가정, 자치단체, 정부 등을 아우를 수 있는 ‘모든 조직’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모든 조직의 참여를 독려한다’로 수정 필요

□ 개선 의견

- 세부목표 중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업 참여를 독려한다’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모든 조직의 참여를 독려한다’로 수정
- 지표 중 ‘기업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삭제 혹은 ‘모든 조직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로 대체

SDG 16. 거버넌스 (평화, 인권 및 민주주의)

16-11. (세부목표) 정보인권 보호 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한다.

- **16.11.1.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확립**
- **16.11.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 **16.11.3. 개인정보 자기정보통제권의 강화**
- **16.11.4. 전자감시사회에 대응하여 반감시권의 강화**
- **16.11.5. 빅데이터 시대에 바이오정보 활용에 대한 근거 확립**

□ 현황 및 문제점

-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반영을 위해 지표 추가

□ 개선 의견

○ 지표에 '개인정보보호 목표달성률' 추가

K-SDGs 작업반 목표 및 지표 초안에 대한 여성그룹 입장문서

1. 총평

가. 용어 사용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Leaving no one behind) SDGs의 원칙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한국정부의 경우 SDG 5번 목표인 Gender equality를 '양성평등'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이는 성을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 두 범주로만 제한하여, 젠더는 곧 양성, 남녀라는 고정관념을 유발함. 또한 성소수자 등 두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는 용어로서의 '양성평등' 사용은 지양해야 함.

나. 국가 차원의 SDGs 한계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Leaving no one behind) SDGs의 원칙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SDGs 5번 성평등 관련 독자 목표의 이행과 함께, 다른 16개 SDGs 목표에서도 젠더를 통합한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된 이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그러나 이러한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성평등 실현을 전 영역의 크로스커팅 의제로서 반영하는 국가 차원의 시도는 현재까지도 매우 부족한 실정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국제 기준의 SDGs 목표의 정의 및 지표를 반영하는 국내 지표가 충분하지 않아 국내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어려운 점, 2) 지표 관련 국내 통계의 대부분이 중앙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자료이고, 지역별로 분리·생산된 통계가 매우 부족하여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3) 비혼·이주·난민·LBTI·장애·북한 이탈·성소수자 여성 등 한국 사회 내 취약 계층에 속하는 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한 통계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들이 한국 사회 내 교차적 형태의 차별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고, 젠더 폭력 예방 및 지원, 노동, 재생산권 등 정부의 '여성'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지 못함.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으로 정의된 글로벌 규범인 SDGs 목표를 국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대한 이행수단을 분석·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 개발이 필요함. 즉, 한국의 성평등 관련 현행 법·제도 이행의 실효성 및 중앙·지방 정부의 법·제도·정책 전반에 걸친 성주류화 이행의 효과성 분석,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성평등 관련 인식과 사회 규범을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 마련 및 이러한 분석 자료를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임. 특히, 중앙 및 지방 정부, 담당 공무원의 성평등 정책에 관한 관심 및 성인지 관점, 젠더 관점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행 수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¹⁾.

성평등 목표 및 다른 목표의 지표 설계 과정에서도 크로스커팅 이슈로서의 성평등을 고려하고 체계적인 성별분리 통계 마련을 포함하여, 다양한 여성들의 현실을 드러내는 지표 설계를 주요 과제로 두어야 함. 또한 여성 노인 상대적 빈곤율, 재난 사고 발생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등 다양한 사회 취약 계층의 성별분리 통계를 국가·지역적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젠더 전환적 접근법에 따른 정책 마련의 자료로 사용해야 함.

2. 세부목표 및 지표관련 의견

가. SDG 5번 목표 : 성평등

1) 5.1 여성 및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연령, 결혼 여부 등 젠더를 근거로, 혹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여부 및 이행상황을 측정하는 세부 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성평등 관련 법/제도의 정책 대상 및 범위에 배제되는 여성들이 존재 여부 또한 꼼꼼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비혼 여성, 성소수자, 이주 여성 등), 여성할당제 등의 경우, 현재까지의 이행 상황 및 불이행 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등의 여부도 검토되어야 함. 또한 <목표 5.1.1>의 '성평등 및 차별금지 증진, 강제, 모니터링을 위한 법률 기반의 여부'에 관하여, 헌법·법령·조례 등 전 국가적 법 규범을 통틀어 SDGs, CEDAW 등 성평등과 관련한 국제 기준에 맞추어 성평등 실현 목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필수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것임.

2) 5.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여성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여성 폭력 통계가 모든 형태의 여성 폭력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데이터 및 사법 처리 실태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하여 왔음. 이번 K-SDGs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는, 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

1) 2018.12.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출발, 우리의 현재 : 성평등 관점에서 본 SDGs 모니터링 결과 워크숍', 프란체스코 회관, 토론회 내용 및 조안창혜 (2017) 중 79-81쪽에서 참고하였음.

별 및 관계(배우자 별도 분류)에 따라 분류하여 집계한 종합적인 범죄 통계를 마련하고, 여성 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사법처리 현황/결과 통계 생산이 별도의 지표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5.2의 지표 중 하나는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비율임.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 '부부폭력', '상호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실제 우리사회의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 실태가 성별권력관계의 문제임을 간과, ▲성별권력관계의 문제임을 간과한 '상호폭력' 용어 사용을 통해 남편폭력에 대한 적극적 방어형태에서 나오는 아내들의 행동도 같은 폭력범주의 선상에서 바라보게 하는 측면 존재, ▲폭력의 경중을 범주화하여 복잡한 폭력양상을 단순화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느끼는 폭력의 두려움과 심각성 훼손 등의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받아옴. 해당 통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왜곡된 폭력에 대한 사고를 형성할 수 있음. 이미 있는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intimate partner)에서의 폭력을 측정하는 지표를 신설하는 것을 통해 다양한 범위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측정하는 것이 유의미함.

또한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 특히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몰래카메라 범죄, 데이트 폭력, 여성 혐오 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젠더기반 폭력의 실태 및 이러한 제반 범죄에 대한 시민, 경찰 공무원, 사법 공무원의 인식에 관한 통계를 포함하여, 여성 폭력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 마련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 차원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통계를 마련해야 함.

또한 5.2 지표가 모두 성인 여성과 15세 이상의 소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초중등생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영유아 여아 대상의 성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때문에 여성의 연령을 구분하여 모든 형태에 대한 폭력철폐에 대한 현상을 진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3)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married) 또는 동거(in a union)를 했던 여성의 비율

해당 지표가 한국에서 유효성은 낮다고 한 작업반 초안 보고서 의견에 동의하며, 차별상속이 이루어지는 현실 실태조사 통계가 필요함. 대안적 지표로 성별/연령에 따른 상속세 납부비율을 생각해볼 수 있음.

4) 5.4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 및 가치부여

5.4.1과 5.4.2로만으로는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절하에 따른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임금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기 어려움. 한국의 여성 경제

활동참가율은 2016년 기준 52.6%, 여성 고용률 50.7%(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임. 여성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5.4.2 육아휴직 사용 성비와 동시에 가족돌봄휴직 사용 비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 근거한 제도)을 추가할 수 있음.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은 자녀 양육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또한 여성의 4대 공적보험 가입률도 성별/연령별 큰 차이가 나타나므로, 이 비율을 통해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함.

5) 5.5. 정치/경제/공공 영역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의 동등한 참여 기회 보장

기존 지표인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및 '공공기관 관리자 비율'에 덧붙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각 급별 사법부, 경찰 공무원, 외교 공무원 등의 성별분리통계를 추가적으로 지표화 할 것을 제안함. 또한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및 유엔 안보리 1325의 국가이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통일/평화 정책 과정에서의 주요 의사결정자 및 사절단의 성별분리통계를 제시하여, 주로 남성들로 대표되어 왔던 분야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로 활용해야 할 것임.

6) 5.6 포괄적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접근 보장

<지표 초안>

- 5.6.1 학교 성교육 수행실적 및 만족도
- 5.6.3 성적 자기결정권
- 5.6.4 피임 실천
- 5.6.5 미혼자의 성관계 경험
- 5.6.6 성건강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5.6.1 관련해서도 현재 성교육 표준안이 왜곡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비판을 받고 있는 바, 성교육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여부보다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보할 수 있는 질적 평가지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또한 교육의 만족도는 단순한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의 만족도 조항으로 이뤄져야 함.

5.6.3 성적 자기결정권의 경우 '여성의 역량 정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측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며, 지표 5.6.4 피임사용률을 포함하여 임신중단(낙태) 실태 조사 결과 등의 지표가 들어가야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가능함.

5.6.5 미혼자의 성관계 경험 지표의 경우 지표 분석의 유의미성을 찾기 어려움.

7) 5.b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진

5.b.1 휴대폰 보유율 - 성별 및 연령 / 휴대폰 보유율의 경우 성별 격차에 따른 보유율 차이가 유의미한 통계일지 의문스러움. 성별에 따른 보유율 비교보다 세대에 따른 보유율 비교가 유의미할 것임.

나. SDG 1번 목표 : 빈곤감소 및 경제적 안정성 확보

1) 1.1, 1.2, 1.3

세부목표 지표의 경우, 성별 분리통계가 필요함. 빈곤 감소에 대한 세부목표인데, 예를 들어 노인 빈곤율 중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남성 노인보다 높고, 공적보험(4대보험) 가입비율도 성별 간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임.

다. SDG 4번 목표 : 교육

1) 4.4 직업교육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계층의 수요자들에게 양적, 질적으로 적합한 참여기회를 제공

4.4.1 직업교육훈련 참여자수 지표에서, 이주여성, 탈북여성, 장애여성 등 경제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므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장애별 분리 데이터 수집이 필요함.

2)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 추도록 함

4.6.1 언어역량과 수리역량 숙련도, 4.6.2 청소년/성인 문해율의 경우, 한국의 문해 및 산술능력 달성여부는 연령대별 비교도 유의미하지만, 이주노동자, 탈북여성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데이터 비교도 유의미함. 지역/소득/연령/성별 통계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세부목표를 측정할 수 있음.

라. SDG 11번 목표 :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

SDG 11번 목표는 도시 지속가능성 목표로,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보장하는 것에 대한 것임. 도시 지속가능성에는 도시에서의 안전문제와 직결되며,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3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에서의 안전문제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공공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현재 SDG 11번 목표에 대한 세부목표와 지표는 총 5개에 대해서만 작업반 초안에 반영되었지만,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형성을 위해 도시 안전 세부목표와 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특히 11.1(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안전하며 적정가격의 주택과 기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의 환경을 개선)과 11.2(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정가격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향상) 세부목표에 따른 지표를 11.1.1 빈민가, 임시거처 또는 불충분한 시설을 가진 주거지에 거주하는 도시인구의 비율,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로 하여 성별, 연령별, 장애인별 분리통계를 하여 포용적인 도시 시스템 구축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음.

11.7 세부목표의 11.7.2 지표는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비율(지난 12개월 동안 성별, 연령별, 장애상태별, 발생 장소별)로 하여, 도시가 남녀노소 모두에게 어디에서나 포용적이고 안전한지에 대한 실태파악도 필요함.

마. 여성 MGoS 그룹 입장문서 작성 참가자(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역공동체그룹 입장 문서

그룹대표 박정민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사무국장

글순서

- 1. 서문
- 2. 참여자별 의견
- 4. 총평

1. 서문

<배경>

- 2015년 유엔 총회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아젠다 선정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환경부를 중심으로 2018년 4월20일 유엔의 17개 목표를 기본틀로 하여 한 국형 SDGs개발 및 수립을 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계획 발표.
- 한국형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작업반 구성하였으며, 의견수렴구조로써 2018년 5월 11일 K-SDGs 수립을 위한 이해당사자(K-MGoS) 설명회를 통해 여성, 청소년, 농민, 청년, 노동계, NGOs,과학기술계, 지방정부, 학계, 동물보호, 교육기 관, 장애인, 지역공동체, 이주민 그룹구성 K-SDGs초안에 대해 입장보고서를 그룹 별 작성하여 의견 수렴하고 있음

<작성과정>

- 5월 11일 K-MGOS 당사자 설명회
- 참여자별 의견서 제출 및 취합

<구성내용>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중심으로 검토하되, 포괄적인 의견서 작성하게 함

2. 참여자 의견

(1) 윤희철 /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 SDG 6번 (깨끗한 물과 위생)

1. UN SDGs와의 관계

- UN SDGs와 유사한 체계로 동일하게 관련 지표를 우리나라 특성에 부합하여 연계 하고 있음.
- 예를 들어, 6.1의 물안전관리기법의 도입은 UN SDGs의 ‘안전한 식수’를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 연계하고자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생각됨.
- 또한 6.3의 물 재활용을 우리에게 맞게 물순환과 물 재이용 활성화 등으로 연계한 점도 좋다고 판단함.

2. 빗물 활용, 침투에 대한 내용 추가

- 최근 물순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6.3에 ‘물순환 개선’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없어, 추가되어야 함.
- 특히 물관리와 관련해 물순환, LID(저영향 개발)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도시에 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도 세부목표에 담겨야 함.

3. 광역적 수자원 관리의 필요

- UN SDGs는 6.5에서 초국경적인 통합적 수자원 관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우 리는 그에 대한 부분이 없음.
- 하지만 지역적 차원으로 보면 유역관리는 하나의 지자체로 할 수 없고, 유역과 관 련도니 모든 지자체가 함께 관리하고 보존함.
- 따라서 광역적 물관리 체계의 내용이 K-SDGs 6.5에 포함되어야 함.

4. 물과 생태계 보호의 연계성

- UN SDGs는 ‘생태계 보호’와 물을 연결하고 있으나, K-SDGs에도 누락되어 있음.
- 최근 몇 년동안 각 지역에서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물순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 데, 특히 생물다양성과 물순환이 상호 연계됨을 필연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 UN SDGs에서 생물다양성은 육상생태계에서 다루고 있으나, 물과 관련된 부분은 6번 목표에서 다루고 있음을 고려하면, 6번 목표에서도 세부목표로 접근해야 함.
- 강, 하천 등의 생태계를 고려하는 세부목표 및 지표가 추가되어야 함.

5. 물환경 거버넌스

- UN SDGs는 6.b에서 물 거버넌스를 이야기하고 있음.
- 물과 위생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함을 말하고 있음.
- K-SDGs에서도 각 지역 차원에서 계속 나타나는 물환경 거버넌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SDG 7번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1. UN SDGs와의 관계

- UN SDGs는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개선, 국제협력과 기술투자, 기술발전과 사회기반시설 확대의 순으로 기술됨.
- 반면, K-SDGs는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 에너지 빈공층의 비용 감소, 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 증대 등으로 기술됨.
- 국제협력에 관한 부분은 유사하지만, 7.1~3번은 내용 자체가 다르게 구성됨. 우리의 특성에 부합하려는 시도가 보이며, 에너지 빈공층에 대한 세부목표는 에너지복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함.

2.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문제점

- 7.1의 "2020년까지 전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완료" 부분은 한전이 2020년까지 1조 5천억원 가량을 투입하여 국내 전기사용고객 2000만 호에 구축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임.
- 한전의 사업적 성격이 UN SDGs가 말하는 "2030년까지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부합한지에 대해 약간의 의문이 듦.
- 시민사회, 기업 등 이해관계자 그룹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이 필요함

3. 에너지 분권에 대한 내용 추가

- 최근 사회적 이슈로 과거와는 달리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에너지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 에너지에 있어서 생산과 소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 예를 들어, 밀양 송전탑과 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에너지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4. 재생에너지 비율

- K-SDGs 는 7.3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증대한다고 밝히고 있음.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통계치를 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이미 2011년 3%, 2016년 7.24%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의 문제의식과 사회적 발전을 고려하면, 향후 20%는 충분히 달성할 수도 있음.
- 물론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대응 등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치의 상향도 고려되어야 함

□ SDG 11번(지속가능한 도시 및 주거지)

1. UN SDGs와의 관계

- 11번 목표와 관련하여 1차 세부목표와 지표에는 11.1, 11.2, 11.3, 11.7, 11.c와 관련된 내용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 영역은 현재 우리나라 도시문제와 직결된 부분으로 꼭 포함되어야 하며, 현재 이 수준으로는 의견을 내기 어려움.
- 특히 미 작성된 4개 세부목표는 '11.1 적정가격의 주택과 공공서비스 접근 보장', '11.2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 제공', '11.3 참여·통합·지속가능한 계획과 관리역량 강화', '11.7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은 현재 국내 도시문제와 직결된 부분으로 단순히 UN SDGs의 국내이행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명확한 이해와 함께 도시분야에 대한 세부의견을 낼 수 있음.
- 11.a의 '경제,사회,환경적 연계성 지원'은 '생태축 설정', '지속가능발전 도농지표 설정' 등 좋은 논의를 하고 있으나 현재 제시된 지표는 추가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2. 문화 분야의 추가 및 확대

- 문화 분야의 세부목표는 UN SDGs의 11번 목표 속에 문화 및 자원 유산 보존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문화' 키워드가 오직 11번 목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한국적 특성을 반영해서 최대한 문화를 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속가능발전에서 '문화'는 실천운동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해야 내용적 범위를 넓히는 것도 고려해야 함.
- SDGs 자체에 문화에 대한 고려가 빈약한 것은 사실이나, 지속가능발전에는 환경,

경제, 사회 영역 속에 문화와의 관계가 깊숙히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단순히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노력에 집중할 때, 실제 SDGs를 시민 스스로 이행하는 실천동력이 생활문화나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K-SDGs에 담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함.

- 따라서 K-SDGs가 우리나라의 특징을 반영한 SDGs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문화 목표 속에 생활문화, 문화향유의 영역까지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이는 별도 목표 또는 영역까지 확대되지 때문에 11번 목표 내에서 추가적인 조정 또는 세부목표의 조정도 고려해야 함.
- 또는 별도의 목표로써 18번 목표로 문화 분야를 확대 및 재편할 필요도 있음

3. 도-농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 강화의 실효성 문제

- 추진방향은 '계획을 통한 도-농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 강화'에 대한 부분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대부분의 작성 초안에 동의함.
- 하지만 일부영역, '도시-군기본계획과 시-군 환경보전계획을 통합관리하여 수립한 지자체 수'에 대해서는, 도시군기본계획은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 현행 법 제도적으로 상호 협력에 대한 명확한 검토 또는 협의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 과거에는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가능했지만, 계획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 제대로 계획관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전례가 있음.
- 또한 지표로 제시되어, 이 계획의 수립이 도농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 강화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4. 도시 및 지역계획에 관한 국제연대 및 협력 강화

- '11.c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은 도시개발과 ODA의 연계를 고려하여 일본이 최근 추진하는 'Spatial Planning Platform'과 같이 도시계획 및 공간계획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해외 지역 및 도시개발 분야의 ODA와 같은 분야를 해당 지표에 포함할 수 있음.

□ 기타의견

UN SDGs가 2015년 발표된 후 우리나라는 공식번역본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 및 먹거리 : 세계식량안보위원회, '로마 영양에 관한 선언 및 행동계획(the Rome Declaration on Nutrition)'

생산/소비 : '지속가능 소비/생산 패턴 10년 프로그램(the 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기후변화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제21차 UNFCCC 파리협약문'(2015.12)

생태환경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2011-2020 생물다양성 아이치 목표'(2010.10)

도시 : 유엔 해비타트, '2016-2036 신 도시의제'(2016.10)

복원력 : '2015-2030 재난위험감소 센다이체계(DRR)'

자원 : 국제개발금융회의(FfD),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AAA)'(2015.7)

UN SDGs는 모든 내용을 세부목표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한 부분으로 최근에 이뤄진 각종 협정 또는 협약,

국제적인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이행을 하려면 각 분야별 협정의 공식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들 협정들에 대한 비공식 번역문도 없는 상황입니다.

(2) 김국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

□ SDG 11.2

2. 세부목표별 현안진단과 방향제시
- 1) 현안진단
- 평일 대중교통 이용자는 2015년 현재 하루 평균 1277만 명이며 전체 통행의 약 74%는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음(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08.18)
 - 수도권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2001년 47.3%에서 2014년 48.4%로 약 1.1% 상승한 반면, 지방대도시권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2001년 38.9%에서 2014년 28%로 약 10.9% 가량 하락 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대중교통 이용현황을 차이를 나타냄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나 수도권(54.3%), 부산광역시(51.7%)를 제외하면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이 승용차보다 현저히 낮음
 - 승용차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등 에너지 효율적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이 저조함
 - 수송부문의 에너지 사용의 80% 이상이 육상(도로)교통에서 소비되는 비효율적인 교통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구조가 지속됨

검토의견

세부목표별 현안진단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수송분담율을 제시하였습니다.

지표는 교통수단 분담율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시 되어 있습니다.

- 수송과 수단의 차이점이 분명히 다르다.
- 환경을 생각하여 시민들께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고속버스, 택시, 지하철, 자전거, 도보)를 이용하는 것은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 대중교통이 수송은 사람을 포함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비율을 조사하는 것이기에 수송과 수단의 구분이 필요하다.
- 현안 분석과 목표에 이행에 대한 평가 수단인 지표와의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임병호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SDG 1. 빈곤퇴치

■ 작업반 세부목표(1.3)

- 포함하여 모두를 위하여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계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 작업반 지표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의견

세부목표의 사회안전망 포함 사회적 보호체계 및 조치 이행 관련, 사회적인정당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와 관련된 지표를 삽입할 것을 제안 (사회복지사, 돌봄노동 종사자 등)

SDG 2. 기아종식 및 지속가능한 농업

■ 작업반 세부목표(2.4)

-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 작업반 지표

-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면적 비율

■ 의견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단순히 생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소비, 유통, 소비자 인식 변화 등 통합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기에 '지역 푸드플랜' 수립 유무 등을 지표로 추가 제안함.

SDG 3. 건강 및 웰빙

■ 작업반 세부목표(3.D)

- 관련된 케어 관련 정책목표와 지표(임종관리, 호스피스 등)
- 보건부분 이행수단 목표 개발

■ 작업반 지표

- 없음

■ 의견

국가에서도 치매는 각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국가차원 대응을 모색하기 시작했음. 이에 인구 고령화 관련 목표가 제시되었기에 '치매 환자 현황 및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대응'을 확인 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

SDG 4. 양질의 교육

■ 작업반 세부목표(4.4)

- 직업교육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계층의 수요자들에게 양적, 질적으로 적합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취업과 창업 등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가진 청소년, 성인 등(구직자 및 재직자 포함) 비중을 높인다.

■ 작업반 지표

-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수
- ICT 산업·직종 종사자 수

■ 의견

단순 직업교육참여자 수 외 교육의 질적인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 제안
(실제 취업 연계율, 이수자 만족도, 직업교육 커리큘럼 적정성 등)

SDG 5. 성평등

■ 작업반 세부목표(5.3)

- 아동 결혼, 조혼 및 강제 결혼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harmful practices)의 근절

■ 작업반 지표

-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married) 또는 동거(in a union)를 했던 여성의 비율
- 15-49세 소녀 및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FGM/C)를 경험한 연령별 비율

■ 의견

현 목표와 지표는 UN SDGs지표로 국내 사정에 대입했을 시 유의미한 지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다른 대안지표 마련 필요.

■ 작업반 세부목표(5.5)

- 정치경제·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 보장

■ 작업반 지표

-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 공공부문 여성 관리직 비율
- 기업 여성 관리자 비율

■ 의견

주요 공직 및 기업체 관리자의 남녀비율은 최근 성평등 지표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도출되고 있는 지표임.(성 평등한 상태라 규정할 수 있는 %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실제 관리직에 있는 여성이 여성을 대표하거나 담보하는지 확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작업반 세부목표(5.B)**

- 권한 강화를 위하여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진

■ **작업반 지표**

- 휴대폰 보유율 - 성별 및 연령
- 여학생 이공계 진학률
- 이공계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 **의견**

목표와 지표간 연계가 명확치 않음.
이공계 진학률 및 이공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성 권한 강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성별 휴대폰 보유율을 통해 여성 권한을 체크하는 것은 국내 상황에 적합한 지표는 아니라고 보여짐.

SDG 8. 경제성장

■ **작업반 세부목표(8.5)**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동일노동-동일임금 달성

■ **작업반 지표**

- 비농업부문에서의 비공식 성별 취업비율
- 남녀별 평균임금과 실업률

■ **의견**

목표인 양질의 일자리는 말 그대로 일자리의 질적인 면을 평가하고자 하는 지표인데,
현 지표는 일자리의 질적 평가는 불가능한 지표.

SDG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작업반 세부목표(8.5)**

-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1인당 식품폐기물을 1/2로 감소하고 식품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량 감소

■ **작업반 지표**

- 식품 손실 지표(Food Loss Index)
- 식품 폐기물 지표(Food Waste Index)

■ **의견**

소비자 수준에서 식품폐기물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정보 및 학습이 필요함.
이에 먹거리 교육 지표를 추가 제안

(4) 이해경 / 인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K-SDGs 수립시 공동체 의견

1. 공동체적 관계망의 복원
도시와 농촌, 어느 지역사회라도 생활단위에서 일상적인 대면관계를 복원하고 소통과 협동의 가능성을 확대하며 공동체적 생활관계망의 단초를 키워나가는 장으로 삼는다.
2. 상호부조와 협동의 경제
지역사회와 마을을 중심으로 상호부조와 협동으로 경제주체를 만들어나가는 장으로 삼는다.
3.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
마을을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자치력을 강화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장으로 삼는다.
4. 더 이상 쫓겨 나지 않는 주거환경
개발로 마을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벗어나 살고 있는 곳을 고쳐가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5) 양준화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K_SDGs 세부목표 검토의견 - 지역공동체와 지방정부 관점에서

G. 1

1.4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기초 공공서비스 및 각종 사회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권리 및 우선적인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문구 수정 동등한 권리와 우선적권리의 모순.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기초 공공서비스 및 각종 사회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G. 2

2.3 ○ 효율적인 농업자원 활용을 통한 실질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세부목표 추가 - 소규모 식품생산자 한국적 개념 삽입

- 고령농, 가족 소농의 영농비율을 유지하고 적정 소득을 보장한다.
- 효율적인 농업자원 활용을 통한 실질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2.4 ○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세부목표 추가 - 과투입 토양수탈 방지의 지속가능농업 개념 명기필요

-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 친환경 농업, 자위순환 농업을 확대한다.

2.5 ○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및 동물유전

○ 가축 지방품종의 비중

지표 추가 - 식량개념보다 확산된 생물다양성 개념 추가필요

-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및 동물유전
- 가축 지방품종의 비중
- 관리되는 멸종위기(보존가치가 있는 지역품종) 유전자원의 수

2. c ○ 적정량의 재료 사용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

연계성 높은 목표로 이동 -> 12.3으로 이동

G.3

3-1 ○ 숙련된 보건인력이 진료한 출산의 비율

지표 삭제 - 한국상황에 실효성 있는 지표인지 검토 필요

3-3 ○ 결핵발생률(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 B형간염 양성률

지표 추가- 기후변화요인 반영

○ 결핵발생률(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 B형간염 양성률

○ 열대성질환 발병율

3-4 ○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되는 인구의 비율, 재난적인 의료비 자부담으로부터 보호받는 가구의 비율

연관성 높은 목표의 지표로 이동 3.8로 이동

3-8 건강보험 관련 지표 추가 필요.

G. 4

4-7 ○ 세계시민교육의 증진 및 확산 / ○ 세계시민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교육과정, (c)교사교육, 그리고 (d)학생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의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

세부목표와 지표 수정 - 세계시민교육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사용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증진 및 확산 / ○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교육과정, (c)교사교육, 그리고 (d)학생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의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

G. 6

6.1 ○ WSP수립율(%)

지표 수정 또는 추가 -WSP개념 쉽게 표현 필요, 상수도보급률 대체제로 적정하지..

○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물안전관리 계획 수립율

○ 상수도 수질기준 및 보급률

6.b

목표와 지표 추가 - 물거버넌스 유역거버넌스플 통한 물 관리 필요

물과 위생 관리 개선에 있어 지역 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 ○ 물과 위생관리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행정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 거버넌스 비율

G. 7

7.3 세부목표와 지표 추가 - 에너지 효율화 목표 중요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을 2배로 증대 ○ 에너지 원단위 개선목표 제시(?)

7-a, b 유엔목표와 연계성을 위해 a, b 재배치, 화석에너지인 청정석탄화력기술 삭제 검토

- 7-a , 에너지 효율기술 개발에서 국제협력연구 확대
 -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부문 연구 국제협력 예산의 전체 에너지부문 국제협력 비중
 -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기술 부문의 국제협력연구에서 개도국의 비중
- 7-b ○ 한국이 수행하는 국제개발지원(ODA) 사업에서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개선기술의 지출 비중 확대
 - 우리나라의 ODA 지출 중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전력송배전 사업 지출 금액과 비중
- G. 9
- 9.4 ○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 / ○ 고도화 기술의 순수출 규모
 - 8.2로 이동
- G. 11
- 11.7 ○ 도시인구 대비 도시지역 공원녹지면적
 - 지표 수정 - 오픈스페이스 개념 포함한 유엔목표에 맞춘 광장 포함
 - 도시인구 대비 도시지역 광장 및 공원녹지면적
- G. 12
- 12.8 ○ 지속가능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 예산 확대/ ○ 지속가능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 예산 확대율
 - 목표 및 지표 수정 - 환경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의 지속가능발전 교육으로 명칭변경
 - 지속가능성 인식 및 정보 확산을 위한 교육 예산 확대 / 세계시민의식 교육, 기후변화 교육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 국가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그리고 학생평가 등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범위
- 12.c ○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 / ○ GDP 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
 - 목표 및 지표 추가 -화석연료보조금의 한국특징인 전기요금제도 개편 필요성
 -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와 전기요금 현실화
 - / ○ GDP 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 ○ 전기요금 원가율
- G. 13
- 13.3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비율/ 탄소포인트 지급액
 - 지표 수정 - 국가 배출량(총량 지표) 필요, 탄소포인트 삭제
 - 국가 및 국민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 G. 17

- 17-14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해 수립한 총괄기구 수
 -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원조 및 비원조 정책 간 정책 일관성 가이드라인수
 - 지표추가 및 이동 - 총괄기구에 지방정부 추가, 개도국원조분야는 17-16으로 이동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해 수립한 총괄기구를 둔 지방정부의 수
- 17-16 지표이동
 -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원조 및 비원조 정책 간 정책 일관성 가이드라인 수
- 17-17 ○ 민간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위해 활용된 금액(KOICA, EDCF, KSP 등 민간협력(PPP) 재원)
 - 공인된 민간협력 플랫폼에 참여하는 공공 및 민간단체 수
 - 지표 수정 - 지방정부 삼입, 명확한 단어사용
 - 민-관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위해 투입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원
 - 공인된 민간협력 추진기구에 참여하는 공공 및 민간단체 수

4. 총평

-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는 사회적, 경제, 환경 등 모든 영역에 상호 연결되어 있어 한 목표에 국한해서 설명하기 어려우나 11번, 16번, 17번 목표와 세부지표 관련하여 기술함.
- 11번 목표에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안전 분야 평가지표가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상황임
- 11번 목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 지원 정도
- 17번 목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치,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활동 활성화 정도
- 16번 목표 갈등관리 역량등 평화로운 지역공동체등

· 목표

인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간 존엄의 불가침 환경 마련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지원법(정치교육, 공민교육, 시민교육-정책학습) 제도 구축

I 목 표

1. 필요성 및 의의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어린이, 청소년을 개인과 국가, 국가교육의 본질 등의 국가 중심의 관계성의 시대에서 4.0시대로 진화하면서 교육의 가치는 국가에서 개인, 즉, 보충성의 원리가 새로운 아젠다가 될 것이다.

정치교육, 시민교육, 공민교육 등 선진국은 의무교육과 평생교육이 된지 오래이다.

국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이 2017년 9월에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을 발의 한 상태이나 동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76번인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교육부)가 가장 근접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 평화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간 존엄에 대한 기본적 소양의 학습 환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헌법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의 헌법 제1조

-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 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 • 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 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 ③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 • 행정권 • 사법권을 구속한다.

모든 사회 제도의 잣대를 독일의 헌법처럼 제정한다면, SDGs 16번 목표인 평화와 정의로운 인류사회로 진화할 것이다.

선진 헌법이라 말할 수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스위스의 헌법도 참조하기를 바란다.

평화는 인간의 존엄에서 시작하며, 오직 제도와 학습이다.

1. 빈곤감소 및 경제적 안정성 확보

- 의견 없음

2. 기아 종식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 의견 없음

3.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한 삶과 웰빙 보장

1) 참고의견

- 위, 식도 역류질환을 앓는 20대가 34만명에 이르고, A형 간염 발병자 중 2030대 비율이 76%에 이르는 등 청년의 건강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또한 19~29세 중 우울증세를 보이는 청년층의 비율이 14.9%에 이르는 등 정신건강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 모든 연령에 비해 20대의 정신질환 증가율이 가장 높음. 2012년에 비해 2016년 20대 정신질환자 추이를 보면 공황장애 65%, 우울증 22.2%로 나타났음
- 국가건강검진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장 체계는 정규 일자리 이행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어 일자리 이행이 늦어지거나 프리랜서 등 비전형 일자리가 증가하는 상황의 대응이 불가능 함
- 건강 보장의 경우 예방 및 진단이 중요하나, 해당 세부목표는 진단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세부목표 및 지표 관련

- 국가건강검진 체계의 제도 밖 대상을 확인하고 그 규모가 감소될 수 있도록 만성질환의 위험요인 관리와 건강보장의 확대(3-1)에 국가건강검진 실시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생애주기별 인구의 규모를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
- 스트레스 감소 및 일상의 여유 등을 위한 여가, 휴가, 레저, 워라벨과 관련한 세부목표를 추가하고 국민 삶의 여유와 활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

4. 교육

- 의견 없음

5. 양성평등

- 의견 없음

6. 깨끗한 물과 위생

- 의견 없음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 의견 없음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1) 참고의견

- 한국노동연구원(2017)에 따르면 20-50세 직장인 2,500명 중 과거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6.3%에 달함
- 디지털 노마드, 4차 산업의 등장 등으로 기존의 전형적 고용형태와 다른 비전형적 노동(프리랜서 등 포함)이 증가하고 있음
-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 업체 설문조사 결과 구직자 중 55.8%는 공고와 실제 근무환경이 다르다고 응답하였으며, 근무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업체도 다수라고 응답하였음
- 임금을 받지 못해 정부에 신고한 청년의 임금체불 신고액은 약 1394억이며 이는 고용노동부가 청년 임금체불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 임금체불을 신고한 청년은 69,796명으로 전체 신고자 중 21.4%에 해당함
- 취업포털 사이트 파인드잡(2014)의 조사 결과 여성 구직자의 약 56%가 구직 과정에서 차별을 당한다고 느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2016년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36.7%로 OECD 평균 14.1%에 비해 약 2.5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구주택총조사(2015)에 따르면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격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54%의 여성이 피해를 경험하였을 정도로 만연하며, 성희롱의 해위자는 상급자가 가장 많았음
-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약 10%이며 비정규직의 경우 조직률은 약 2.1%임. 주로 남성, 정규직,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비정규직, 여성, 청년 등 노동권 보호가 절실한 계층은 정작 노동자로서의 조직화가 힘든 상황에 있음

2) 세부목표 및 지표 관련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강화(8-3)에 기존의 전형적 고용형태에 포함되지 않는 프리랜서 등 비전형 노동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
-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 증진(8-8)에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노동조합 등 의 규모 및 증가, 감소추이 지표를 추가

9. 산업.혁신.인프라

- 의견 없음

10. 불평등완화

1) 참고의견

- 불평등 문제는 소득과, 성별이외에도 지역 격차, 학력 격차로 인해 발생하기도 함

2) 세부목표 및 지표 관련

- 지역 격차에 따른 불평등(사회 인프라 부족, 문화 콘텐츠 및 정보 등의 접근성 하락)과 학력, 고용조건 등에 따른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세부목표 설정

11.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

1) 참고의견

- 없음

2) 세부목표 및 지표 관련

-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안전하며, 부담 가능한 주택 및 기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슬럼을 개선한다.(11-1)에 연령별 주거빈곤율(적합한 주거형태,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 등) 지표 추가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역기반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세대별, 분야별 다양한 공동체의 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표를 마련

12.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 의견 없음

13. 기후변화

- 의견 없음

14. 해양생태계 보전

- 의견 없음

15. 육상생태계

- 의견 없음

16. 정의와 평화

- 의견 없음

17.파트너십

- 의견 없음

16 기아 종식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1. 목표

1) 목표의 필요성과 의의

- 취약계층의 식량 접근성 보장, 영유아·아동의 영양 개선, 국민의 균형잡힌 식단 마련과 음식물 쓰레기 저감 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쌀 등 주요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식량농업유전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국제 농업 시장의 적응과 대응 및 식량안보 확보가 필요함

2) 현황과 쟁점

- 법적인 기초생활수급자이외 결손부모의 자녀 및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운자 등이 식량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과 복지제도와 연계 시급
- 영유아·아동의 영양 개선, 균형잡힌 식단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병행 여부 검토
- 화학비료, 가축분뇨·퇴비·액비 등 양분수지의 산정 및 개선, 농업환경 개선 프로그램 부재

2. 세부목표

1) 세부목표(안)에 대한 입장

- 2-1. 세부목표에서 법적인 취약계층과 실질적인 취약계층에 대하여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발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봄
- 2-4. 고투입-고산출 농법에 따른 양분과다 및 비점오염원 증가 등 농업·농촌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2) 수정, 보완, 추가해야 할 세부목표 제안

- ※ K-SDGs 세부목표 초안과 관련하여 수정, 보완, 추가해야 할 세부목표를 제시
 - 취약계층에 대한 등이 식량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복지제도와 연계 방안 발굴과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병행 방법 추가 필요
 - 화학비료, 가축분뇨·퇴비·액비, 유기질비료 및 음식물 쓰레기 퇴비 등 양분 수지의 산정방식 및 개선 프로그램, 농업·농촌환경보전 개선 프로그램을 추가해야 함

3. 지표

1) 지표(안)에 대한 입장

- ※ K-SDGs 지표 초안과 관련하여 의미나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제시

2) 수정, 보완, 추가해야 할 지표 제안

- ※ K-SDGs 지표 초안과 관련하여 수정, 보완, 추가해야 할 지표를 제시
 - 농업·농촌 환경보전 및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지표 개발이 추가되어야 함

4. 목표별 연계와 거버넌스 구축 방안

※ 해당 (세부)목표와 타 (세부)목표 간의 연계 접근방법(nexus approach)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과 6. (깨끗한 물과 위생)/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와 연동시킬 필요가 있음
- 중앙부처, 지방정부 내 관계부서 간에 협의체 또는 T/F 구성으로 양분 수지의 산정방식 및 개선 프로그램, 농업·농촌환경보전 개선 프로그램 마련하고 운용함

K-SDGs <과학기술그룹> 입장 보고서 (안)

<2018. 6. 12>

K-SDGs 수립에 대한 과학기술그룹의 제언

1. (정부정책과 연계) 과학과 정책실행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K-SDGs의 주요 이슈가 정부정책에 반영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에는 기후변화와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기술의 고도화를 언급하고 있음. 이는 SDG13번과 연계할 수 있음.
-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기본계획인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및 부처의 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에 K-SDGs 목표·세부목표·지표가 반영되면, 해당 목표에 국가 R&D 예산이 비교적 쉽게 투입되는 효과를 발생.
- 앞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미리 해당부처와 협의하여야 함
 - K-SDGs와 국가R&D 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한 실태를 검토하고, K-SDGs의 목표별 우선순위를 정해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면, K-SDGs목표 달성이 보다 용이해질 것임.

2. (국가 R&D 예산과의 연계) 정부정책에 포함되더라도, 실질적 R&D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K-SDGs 수립 목표, 세부목표, 지표에 대한 과학기술적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짐. 부처별 R&D 중기재정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도록 주무부처가 노력해야 함.

3. (연구기관의 기관평가와 연계) 과학기술계의 사회적 책임은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어 국가사회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임.

- 예를들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출연 연구기관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지침(2017.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기관평가를 받고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축적하는 연구 데이터가 신뢰성있게 국가사회문제 해결에 제공되기 위해 기관평가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
- 대학, 국공립연구소 역시 기관 평가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제도 보완

4. (북한과의 협력을 위한 전략도구로 활용) UN SDG 1(빈곤퇴치), SDG2(기아종식 및 지속가능한 농업), SDG3(건강 및 웰빙) SDG6(깨끗한 물과 위생) 분야는 인도적 차원에서 통일 준비 협력분야로 가까운 미래에 부상할 것임. K-SDGs를 통일 준비를 위한 국가의 전략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함. 정부, 작업반,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함.

- 예를들어, 한의 식량증산 문제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이며, 그 외에도 에너지(전력), 산림, 의약품, 미세먼지 분야는 북한의 필요가 존재하므로 우리와 협력이 가능
- 북한과의 협력에 국제사회의 목표를 활용하는 것이 협력에 대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록 생각함

5.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와의 연계) 그간의 경제·사회·환경변화와 과학기술수준 향상을 고려해,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6. (K-SDGs 포럼 국회 개최) K-SDGs 관련 학술포럼을 국회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면, 국회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임

7.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직속으로 격상되면, K-SDGs 추진이 보다 용이해질 것임

7 에너지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생태계 보전

1. 목표

- 목표설정예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국제적 방향은 '인간활동으로 인한 오염방지 및 저감', '어업활동의 적절한 규제', '생태계 기반 관리를 통한 전체 해양생태계 복원' 라는 일정한 흐름 하에 기술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 제시된 세부목표는 목적이 수산자원의 증대에 집중되어 있어 모든 정책과 실행의 목적이 수산자원 증대에 있는 것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음.
 - K-SDG's의 목표는 해양 관련자들만의 것이 아니며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다 보편적이고 대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서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2) 현황과 쟁점

<14.1 해양쓰레기 문제>

-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인식증진 등 활동을 진행 중
- 해양수산부의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의 현장조사를 지역 민간단체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연안정화' 행사 등 학생 및 시민 대상 해양쓰레기 교육 홍보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음.
- 국내의 한 NGO 단체가 '아시아태평양 해양쓰레기 시민포럼'의 사무국을 맡는 등 NGO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2. 세부목표

1) 세부목표(안)에 대한 입장

- 현재의 세부목표들은 적절한 것으로 여겨짐.
- 다만, 14.1 해양쓰레기 분야의 세부목표는 오염물질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수정, 보완, 추가해야 할 세부목표 제안

- 14.1 해양쓰레기 지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세부목표를 제안함

- ① 육상과 해상에서 비롯된 해양쓰레기로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
- ② 육상에서 비롯된 영양염류로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
-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해 가장 근본적인 처방인 '생태계 기반 관리를 통한 전체 해양생태계 복원'을 지원할 세부목표가 추가 될 필요가 있음. 단지 '보호지역 면적의 확대'만으로는 부족함.
 - **제안 세부목표** :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통합관리 및 생태계서비스 개념 도입 및 실행
- 해양의 월경성과 유역관리가 필수 일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간 (특히 한·중·일), 육상생태계, 물과 위생,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분야와의 협력 구조가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함
 - **제안 세부목표** : 국가간, 타 분야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역 중심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안유역관리 거버넌스의 구축
- 해양의 특성상 대부분 국가의 업무가 많아 국민들에게 체감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중적인 수준의 세부목표를 전략적으로 배치 할 필요가 있음
 - **제안 세부목표** : 육상기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전국민 참여 프로젝트 마련

3. 지표

1) 지표(안)에 대한 입장

- **작업반이 제시한 141 세부목표 중**, 1.a, 1.c의 지표는 향후 기술개발을 통해 확보하여야 가능한 방법으로서 현재 가용한 지표의 활용이 필요함. 또한, 현재의 지표는 해양쓰레기의 유입량(annual input, quantity per year)만을 포함하고 있음. 해양쓰레기의 피해에 관한 지표 또한 필요함.
- WQI의 경우 종합평가의 틀로, 지수 내에서 상호 상쇄효과가 일어나 개선점을 찾기 위한 세부적인 변화와 문제점을 찾는 것에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조지표가 마련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해양보호구역 면적'과 함께 '단위 해양보호구역 면적 당 관리인원 및 관리비용 투입량' 지표를 추가.
 - 면적증가와 함께 실효적인 효과가 발생하려면, 적극적인 재원투여가 필요함.

- 육상 생태계 분야와 연계 시 해양의 접근성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해양에 가산점 부여 방식도 도입 .

2) 수정, 보완, 추가해야 할 지표 제안

- 14-1a. 해안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
 - '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이 11년째 진행 중임. 현재 전국 40개 정점에서 2개월마다 새로 해안으로 들어오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개, kg/100m/2개월)을 파악하고 있음. 연도에 따른 증감을 파악할 수 있음.
 - 플라스틱 쓰레기 중 육상기인(음료병/병뚜껑, 비닐봉지, 일회용 컵, 등)과 해상기인(플라스틱 부표, 스티로폼 부표, 폐어망 등) 쓰레기의 양(개/100m/2개월)을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
- 14-1b. 시각평가를 통한 해안쓰레기의 현존량
 - 해안쓰레기의 현존량을 육지부 자연해안 382개 고정 정점에서 평가하고 있음 (2016년~). 해안쓰레기의 부피(리터/100m)를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
- 14-1c. 부유 폐어구로 인한 선박 운항 장애 건수(특히 해군함정의 운항 장애 건수)
 - 해양쓰레기의 피해는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매우 어려우나 우리나라는 해군함정이 폐어구에 걸려 운항 장애를 입은 건수가 지난 6년간 축적되어 있음(Hong et al., 2017). 이는 모든 함정에 대한 전수조사 수치로서 폐어구로 인한 안전 및 경제적 피해를 나타내는 적절한 지표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평균	표준편차
업힘 건수/년	465	403	351	393	391	383	2,386	397.7	37.5
폐어구 제거량 (톤)/년	9.89	8.69	8.86	8.94	10.66	13.08	60.12	10.02	1.68

- 14-1d. 육상과 해상 기인 쓰레기의 해양 유입 감소 비율
 - 육상기인과 해상기인 쓰레기의 해양 유입량 측정 및 평가 기법 개발 및 통계 체계 구축 추진 필요
- 14-1e. 해안•부유•침적 쓰레기의 현존량
 - 해안•부유•침적 쓰레기의 현존량 측정 및 평가 기법 개발 및 통계 체계 구축 추진 필요
 - 해안쓰레기 현존량의 경우, 현재는 훈련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해안 정점을

방문하여 현존량을 시각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만 적용 중. 도서 지역 등 직접 방문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측정 기법 개발 필요

- 14-1f. 산업 분야별, 피해 유형별 해양쓰레기 영향
 - 산업분야별, 피해 유형별 영향 평가 기법 개발 및 지속적 현황 조사, 피해 규모 정량화 기법 적용 필요
- 해양보전 및 육상기인 오염방지 활동에 참여한 국민의 수(인원×횟수)
- 해양생태계 보전관련 거버넌스의 수와 협력의 횟수(거버넌스 운영, 현장에서의 실천적 협력사례 포함)
- UN SDGs의 14.2.1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관리되는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의 비율) 추가
 -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계획인 만큼 현재 어렵더라도 K-SDGs 작성을 계기로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

4. 목표별 연계와 거버넌스 구축 방안

- 14.1 해양쓰레기 지표를 SDG 12.(생산과 소비) 중 특히 12.1(자원 효율화), 12.5(재활용) 등과 관련 해양쓰레기 통합관리 법적 근거 마련, 범부처 협의회 설치, '하천 유역 쓰레기 총량 관리제' 도입 등 필요